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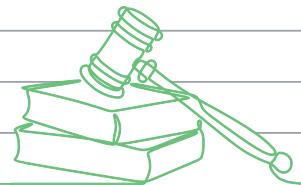
제1기 해양경찰위원회 백서

THE 1st KOREA COAST GUARD COMMISSION WHITE PAPER

[2020.2.21. ~ 2023.2.20.]



해양경찰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해양경찰로



제1기 해양경찰위원회 백서 발간을 기념하며



2020년 2월 21일 「해양경찰법」 시행에 맞춰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기관으로 해양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해양경찰위원회는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법령·행정규칙과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해양경찰 정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해양경찰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은 큰 명예였고, 뜻깊은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를 포함한 제1기 위원들은 해양경찰위원회의 초석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첫째에는 해양경찰위원회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방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상정안 건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안건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진력하였습니다. 마지막 3년 차에는 해양경찰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제1기 해양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연차별 로드맵 추진과 함께 총 7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427개 안건을 검토·의결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을 제정(20.11월) 하고 양성평등 정책팀을 출범시킨 일과, 경·검 수사권 조정의 흐름 속에서 인권 보호와 수사권 남용방지를 위해 수사인권관 자격 검증 규정마련 등 수사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행정규칙을 심의한 일은 해양경찰위원회 설치 의의를 되새길 수 있어 특히 기억에 남는 안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해양경찰이 과거 조직 내부의 시각만으로 정책을 마련하던 관성을 벗어나, 폭넓은 시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민주적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제1기 해양경찰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재임기간 중 이러한 노력과 고심의 흔적이 담긴 처리안건과 토의 사항을 회의별로 정리하면서,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준비부터 역할,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사료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제1기 위원들의 논문과 기고문, 현장방문 활동 등을 수록하여 향후 해양경찰위원회가 단순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아닌 해양경찰의 주요정책과 업무집행을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본 백서를 통해 해양경찰위원회가 국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고, 향후 주요 해양 치안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먼 바다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 해상치안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모든 직원 여러분과 국익 수호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지휘부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해양경찰위원장



CONTENTS

사진으로 본 해양경찰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PART



해양경찰위원회 소개

- | | |
|-------------------|----|
| 1. 해양경찰위원회 개요 | 24 |
| 2. 해양경찰위원회 역할과 기능 | 26 |

PART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 | | |
|------------------|----|
| 1. 해양경찰법 제정 | 30 |
| 2. 해양경찰위원회 설치 준비 | 31 |
| 3.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 39 |

PART



해양경찰위원회 운영

1.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42
2. 해양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개요	43
3. 회의별 안건 및 의결결과 주요내용	46

PART



해양경찰위원 논문 및 기고문

1. 사공영진 위원장	188
2. 남상욱 총무위원	200
3. 박찬호 위원	213
4. 함혜리 위원	231
5. 김효선 위원	235
6. 이은방 위원	240
7. 윤석희 위원	259

부록

1. 제1기 해양경찰위원 명단	276
2. 해양경찰위원회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277
3. 해양경찰위원회 의결 안건 목록	293

사진으로 본 해양경찰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2020. 02. 21.

제1기 해양경찰위원이 임명되었다.





2020. 02. 21.

해양경찰위원회 출범식 행사 전 해양경찰위원과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환담을 하였다.



2020. 02. 21.

「해양경찰법」 시행일에 맞춰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행사가 개최되었다.





2020. 02. 21.

식순에 따라 초대 해양경찰위원을 소개하였다.



2020. 02. 21.

해양수산부 장관이 초대 해양경찰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2020. 02. 21.

해양경찰위원들과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현판 제막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2020. 02. 21.

종합상황실에 방문하여 해상치안 현황 및 해양 관리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0. 02. 21.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위원들이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2020. 02. 21.

해양경찰위원회 제1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해양경찰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 1건을 심의·의결하고 '20년 주요 업무계획 등 3건을 보고받았다.



2020. 11. 06.

제17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등 5건을 심의·의결하고 중국어선 조업동향 및 대응방안 등 2건을 보고받았다.

2020. 12. 21.

제20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위원장 위임으로 총무위원이 위원회 회의실에서 주재하고, 나머지 6명의 위원장·위원은 사무실 등에서 온라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범죄수사규칙」 전부개정안 등 18건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 국회 예산심사 결과 등 1건을 보고받았다.





2020. 06. 26.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 방문하여 중부청 관할 해상치안 현황 및 일일 상황 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0. 06. 26.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항 VTS에 방문하여 관할 관제구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선박관제를 위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시설·장비 현황을 청취하였다.



2020. 06. 26.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5함에 방문하여 함정 경비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0. 06. 26.

3005함 조타실에 방문하여 항해장비 등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였다.



2020. 06. 26.
사공영진 위원장이
3005함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2020. 06. 26.
3005함 고속단정을 타고 전용부두 주변 승선 체험을 하였다.



2020. 06. 26.
3005함 고속단정을 타고
전용부두 주변 승선 체험을 하였다.



2020. 06. 26.

3005함 함수에서 경찰관 및 의무경찰관들과 함께 방문 기념촬영을 하였다.



2020. 06. 26.

인천해양경찰서 인항파출소에 방문하여
관할구역, 파출소 업무 및
근무체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0. 06. 26.

특공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였다.



2020. 06. 26.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회전익항공대에 방문하여 장비현황을 청취하였다.



2020. 06. 27.

인천해양경찰서 공기부양정 기지에 방문하였다.

약 2시간 동안 공기부양정(H-09정)에 승선하여 인천항·영종도 해상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 해역을 순찰하였다.



2020. 11. 06.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고정익항공대에 방문하여 관할 해역 및 고정익항공대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0. 11. 06.

고정익항공대 방문 기념촬영을 하였다.



2022. 06. 20.

해양경찰교육원에 방문하여
충혼탑 참배를 하였다.



2022. 06. 26.

해양경찰교육원 시설 및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2. 06. 26.

시뮬레이션 실습장에 방문하여
모의 항해 시연을 하였다.



2022. 06. 26.
여수해양경찰서 화학방제함에 방문하였다.



2022. 06. 26.
화학방제함에 승선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2022. 11. 07.
형사기동정(P-135)에 승선하여 부산항 인근을
해상순찰하고 치안현장을 확인하였다.



2022. 11. 0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 및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2022. 11. 07.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방문하였다.





2022. 11. 07.

화학사고 파공봉쇄 대응 훈련을 참관 하였다.



2022. 11. 07.

SSDS 및 테크니컬 잠수구조 시연을 하였다.





2022. 11. 07.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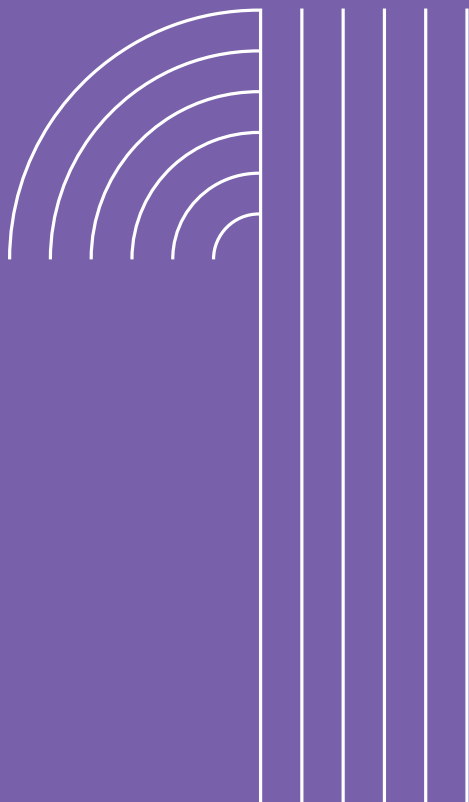


2022. 11. 07.
특공대에서
내부소탕 훈련을 참관 하였다.



2023. 02. 20.
제1기 해양경찰위원 퇴임식 행사로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PART



해양경찰위원회

소개



1. 해양경찰위원회 개요

24

2. 해양경찰위원회 역할과 기능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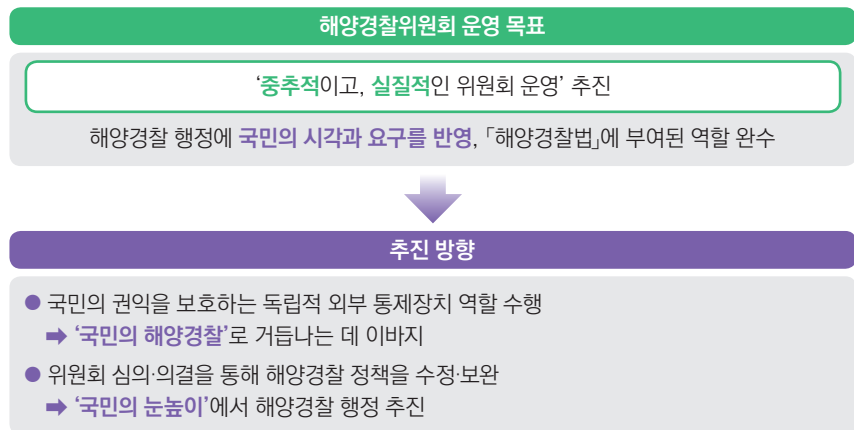
01

해양경찰위원회 개요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 행정에 국민의 시각과 요구를 반영하여 「해양경찰법」에 부여된 역할을 완수하여 중추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의 주요정책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적인 외부 통제장치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양경찰이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해양경찰위원회를 통해 해양경찰 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함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해양경찰 정책이 수정·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양경찰 행정이 추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해양경찰위원회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¹⁾ 및 제65조²⁾를 준용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업무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양경찰위원 자격기준

해양경찰위원 자격기준

-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자
- ☐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 경과자
-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 후 3년 경과자
- ☐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 후 3년 경과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않는 자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범죄·징계 경력자 등



02

해양경찰위원회 역할과 기능

해양경찰위원회는 해경청 소관 법령·규칙 및 주요 해양경찰정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 前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해양경찰행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해양경찰 업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 심의·의결 사항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한 해양경찰법 제5조³⁾ 제1항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위원회를 두고 해양경찰의 주요 법령, 인사, 장비 등 주요 정책과 인권 보호와 같은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은 총 44개이며, 이 중 법률은 14개, 시행령은 16개, 시행규칙은 14개가 있다.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규칙은 총 220건이다.

(2023년 4월 기준)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인권보호 정책으로는 진술 녹음제와 인권 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방안 등이 있고,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으로는 유착비리 근절 대책 등이 있다.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인사관련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전문 인력 및 여경 채용 비율 향상, 지방청에 인사업

3)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장비·시설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무 일부 위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교육·복지관련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연간 교육 계획에 따른 신입·기본·전문교육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 환경, 수당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해양경찰장비·시설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장비도입 관련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중·장기 해양경찰 장비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 「해양경찰 장비증강 목표기획서」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밖에 주요정책과 제도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나. 보고사항

지난 '17년 11월에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해양경찰법 제9조⁴⁾는 의견청취를 통해 안전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이고 원활한 심의·의결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제1항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 또는 자료를 받거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제2항은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응하도록 명문 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의결이 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다. 임명동의 사항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4)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PART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1. 해양경찰법 제정	30
2. 해양경찰위원회 설치 준비	31
3.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39

01

해양경찰법 제정

'17년 9월 13일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해양경찰 조직 개선과 해양재난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17년 11월부터 「해양경찰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8년 1월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였고, 관계 기관과의 이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면서 법안을 완성시켜 나갔으며, 11월 당정청 협의회가 개최되면서 해양경찰법 제정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해양경찰법」 제정을 목표로 '18년 12월부터 '19년 1월까지 인천과 제주지역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및 입법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19년 1월 11일 오영훈 의원은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해양경찰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해양경찰법」은 같은 해인 8월 2일 제37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가한 208명 국회의원 중 194명 찬성으로,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로써 해양경찰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해양경찰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년 8월 20일 공포되었다.

▶ 해양경찰위원회 설치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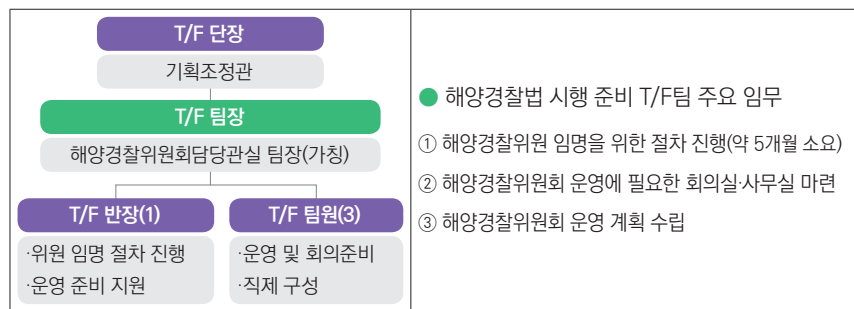


02

해양경찰위원회 설치 준비

'19년 8월 16일 해양경찰위원회 출범을 위한 '해양경찰법 시행 준비 T/F'가 신설되었다. 주요 임무는 해양경찰위원 임명, 위원회 회의실·사무실 등 사무공간 마련, 운영체제 구축 등으로, 본격적인 해양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 해양경찰법 시행준비 T/F 조직도



가. 해양경찰위원 선임

1) 위원 선임기준 마련 및 후보자 추천 의뢰

위원 선임을 위해 타 부처 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을 참고하고 해양경찰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공직 직·간접 경험, 정치적 중립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¹⁾ 등을 반영하여 선임기준을 마련하였다. 선임기준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여성·시민단체, 해양주권수호·안전·치안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지정하였다.

학계는 해양경찰의 주권수호·안전·범죄예방·수사·해양오염방제 등 다양한 임무로 인해 관련된 학문 분야가 광범위하여 전문가 선임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대계열인 '인문사회계열·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로 지정하고 그 분야의 '정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는 자'로 기준을 마련하였다.

법조계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임용자격이 있는 자'로,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여성 참여율 40% 이상, 비수도권 34.7%(매년 상향 조정), 특정 직업군 25% 초과 지양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재직경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언론계는 '신문·통신 등 언론기관 논설위원급 이상 재직한 자'로, 논설위원은 기자경력 15~20년 이상으로 사설이나 논평을 쓰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여성·시민단체는 전국규모의 사회 등 단체로 중앙의 대표급 인사, 교수 등으로 지정하였다.

해양주권수호·안전·치안은 '해양경찰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치안감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전문성과 조직관리 경험이 풍부하며, 리더십과 균형감각을 갖춘 자'로 지정하였다.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이 해양경찰 근무 15년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해양경찰법 제12조) 해양경찰위원은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해양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청장 견제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재직경력 10년 이상으로 지정하였다.

'19년 9월 이러한 세부기준을 토대로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등 3개 기관에 분야별 5배수 내외로 위원 후보자를 요청하였다.

▶ 해양경찰위원 선임기준 및 구성

구 분	선 임 기 준	구 성
학 계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계열 정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는 자	남 2
법조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임용자격이 있는 자	남 1 여 1
언론계	신문·통신 등 언론기관 논설위원급 이상 재직한 자	여 1
여성·시민단체	전국규모의 사회 등 단체로 중앙의 대표급 인사, 교수 등	여 1
해양주권수호·안전·치안분야	해양경찰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치안감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전문성과 조직관리 경험이 풍부하며 리더십과 균형감각을 갖춘 자	남 1

2) 위원 후보자 선정 및 인사 검증

'19년 10월 후보자 선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 DB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인재 DB,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있는 후보자를 추천받아 경력·활동 사항 등을 확인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3배수를 선정하였다. 3배수에 선정된 후보자들에게 위원 수락 여부를 확인하였고, 수락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19년 11월~12월 약 2개월 동안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졌다.

3) 임명제청 및 대통령 임명 준비 완료

마침내 '20년 1월 최종 위원 후보자 7인이 내정되었고, '20년 2월 해양수산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인사혁신처 심사 및 대통령 재가 요청을 통해 위원 임명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나.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등 사무공간 조성

해양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청 별관 4층 전부를 위원회 회의실 등 사무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19년 10월 사무공간 조성이 시작되었다. 기존 공간을 철거하고, 전기·통신장비 설치 및 집기류 설치 등 2개월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위원회 등 다른 기관을 방문하여 위원회 사무실과 회의실의 구조를 확인하고, 집기류·운영물품 등을 파악하여 해양경찰위원회 사무공간 설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침내 '19년 12월 회의실을 비롯하여 위원장실, 총무위원실, 직원대기실, 여성위원 휴게실, 직원 사무실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등
사무공간



▶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위원장실·총무위원실

공사 전



공사 후



회의실



위원장실



총무위원실

다. 해양경찰위원회 1) 해양경찰위원회 종합 운영계획 수립
운영을 위한
기틀 마련

해양경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운영되는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 준비·진행 절차, 위원 임명 및 청장 임명제청 동의 절차, 총무위원 제도 등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 망라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전략 등을 확립하여 위원회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가) 위원회 회의 절차 확립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실은 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해 회의 2주 전까지 해양경찰청 각 부서에서 제출한 상정안건을 취합하고, 총무위원은 취합된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검토 보고서는 체계·자구 및 내용의 적정성, 타 규정과의 관계, 법체계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대적 흐름,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다.

회의 1주 전까지 안건 소관과장이 총무위원에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고, 사전보고 후 정리된 심의·의결 안건 등은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들에게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송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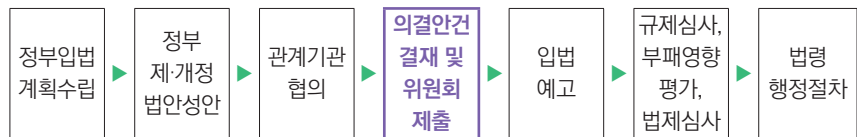
회의는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며,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실에서는 회의 중 언급된 주요 내용과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 결과는 총무위원·위원장보고 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각 부서에 통보한다.

위원회 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해양경찰위원회 회의 절차

〈법령 제·개정 절차〉



〈행정규칙 제·개정 절차〉



〈위원회 절차〉

1	D-21	법무계 의결안건 사전검토	□ 구비서류 및 체계·형식·자구 등 검토
	D-17	의결안건 결재	□ (각 기능) 제·개정 계획 청·차장 결재
2	D-14	상정안건(의결·보고) 해양경찰위원회 제출	□ 설명자료, 안건, 3단 조문비교표 및 주요내용 제출
3	D-7~D-5	총무위원 사전보고	□ 안건 담당 과장이 총무위원 사전 보고
4	D-4	안건 관련 자료 위원 송부	□ 안건 자료 및 회의 개최 계획 이메일·우편 송부
5	D-day	회의 개최	□ 안건 소관 국장 배석, 담당 과장 보고
6	D+1	회의 결과 통보	□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각 부서 결과 통보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심의·의결 결과	
원안 의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수정 의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어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위원회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
재상정	●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차기 정기회의 시 재상정)
보 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시행 시기·제도의 수립이나 변경의 필요성·정당성 등의 사유로 현재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나중에 미루는 의결
부 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매우 중대하여 의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나) 총무위원 제도 마련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상임위원의 부재로 인하여 안건에 대한 전문적 검토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위원회 안건의 상정 여부 검토, 안건의 쟁점사항 사전검토, 부·청간 업무 조율 등 상임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무위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직 해경출신 위원을 총무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총무위원은 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해 주 2~3회 비상근 근무를 하면서 안건에 대한 자료수집과 전문적인 조사연구, 각 위원과의 연락 협조, 기타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2)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관련 설명회 개최

위원회 출범 전 위원회 운영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년 2월 3일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 대상으로 위원회 운영 계획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년 2월 14일 계장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운영 계획, 안건제출 및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의 역할, 총무위원 사전보고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관련
계장급 실무자 교육



3) 해양경찰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해양경찰법 및 해양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기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찰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였다.

해양경찰위원회 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경찰위원회 운영세칙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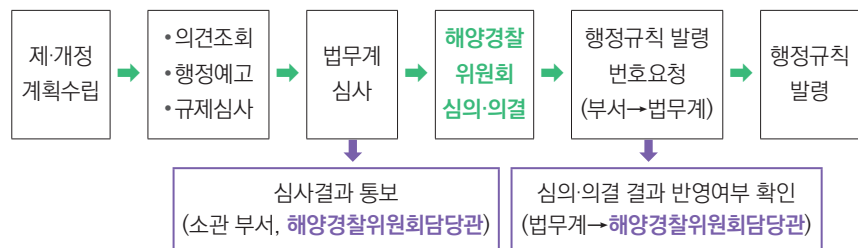
조 문	주 요 내 용
위원장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당선
총무위원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의 사전검토,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 총무위원은 의안에 대한 자료수집과 전문적인 조사연구, 각 위원과의 연락 협조,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 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회 의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소집,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음 회의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례→위원장 인사→월간 주요 업무계획→안전 심의·의결
의안의 제출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 위원이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회의 소집 3일 전까지 총무위원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표결방법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 이의가 있을 때는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표결방법을 정함
서면의결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의결 가능

4) 회의 상정안건 선정체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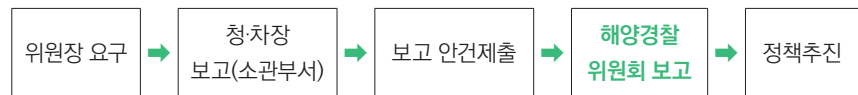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회의안건의 지속적인 상정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안건 선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상정안건을 심의·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심의·의결안건은 위원회에서 의제나 안건을 논의하고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해양경찰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보고안건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의 보고를 요구한 안건으로 해양경찰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 법령 및 행정규칙 안건선정 체계



▶ 보고안건 안건선정 체계



03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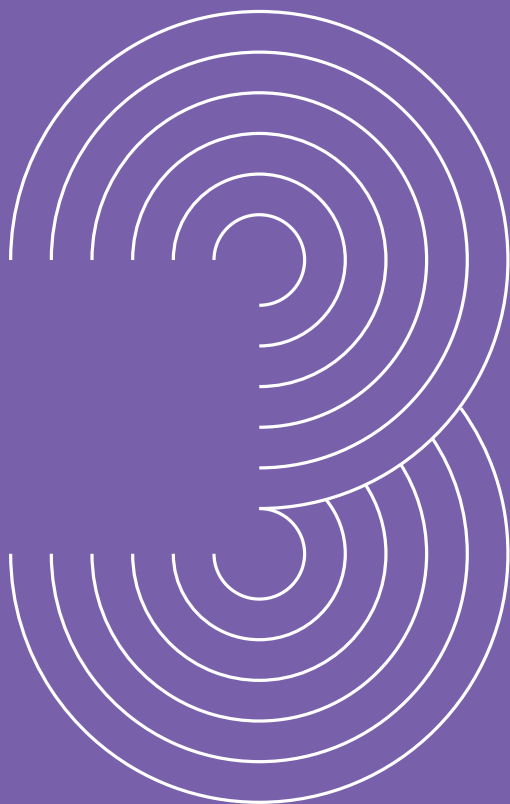
'20년 2월 21일 「해양경찰법」 시행일에 맞춰 해양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출범식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재하였고,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 및 내부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위원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초대 해양경찰위원 7명에 대해 임명장을 전수하였고, 해양경찰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현판 제막식 후에는 종합상황실로 이동하여 해양안전·치안 현황을 청취하였고,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여 회의실을 비롯한 위원장실, 총무위원실 및 여성위원 휴게실 등을 둘러보았다.



또한, 이날 행사 종료 후 즉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제1대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 선출과 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하였으며, '20년 해양경찰청 주요 정책 및 수사 구조개혁에 따른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PART



해양경찰위원회

운영



1.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42
2. 해양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개요	43
3. 회의별 안건 및 의결결과 주요내용	46

01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등의

「해양경찰법」 제11조에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년 3월 3일, '21년 12월 2일, '23년 1월 3일에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를 위한 임시회의가 총 3회 개최되었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시작되었고, 국민의례, 개회선언, 상정안건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안 설명, 청장 후보자 인사말씀, 질의 및 답변, 가·부 투표 및 의결, 청장 후보자 인사, 폐회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회의결과 해양경찰청장 후보자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

▶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를 위한
임시회의 개최



02

해양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개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며,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개최한다. 회의 개최 시, 해양경찰청에서는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국장 및 과·계장이 참석하며, 간사인 기획재정담당관과 법적질의 답변을 위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상시 참석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출범식 후 위원장·총무위원 선출 등 첫 회의와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를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20년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후 3년('20.2.21~'23.2.20.) 동안 총 7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중 정기회의는 67회, 임시회의는 4회, 서면회의는 2회 개최 하였다.

▶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서면의결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실시된다. 위원회에서 서는 직제 시행규칙 관련 심의가 이에 해당하여 총 2회¹⁾ 서면으로 의결하였다.

해양경찰위원회 상정 안건은 총 427건으로 심의안건 302건(71%), 보고안건 120건(28%), 기타 5건(1%)으로 회의 당 평균 5.8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기타 5건은 위원장 선출, 총무위원 선출, 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이다. 심의·의결 302건 중 원안의결 126건(42%), 수정의결 171건(57%), 재상정의결 5건(2%)으로, 수정의결의 비율이 높았다.

상정안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규칙 209건(69%), 법령 68건(23%), 정책·계획 25건(8%)으로 행정규칙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보고안건은 해양경찰청 월간 주요업무계획 및 분기별 의결안건 추진사항 등 정기보고와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진행 상황 보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 방안 등 위원들의 관심사항이나 현안사항을 보고 받았다.

각 국별 안건 제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0.2.21. ~ 2023.2.20.]

▶ 각 국별 안건 제출현황

구 분		합 계	직 속	기 획	경 비	구 조	수 사	정 보	방 제	장 비	기 타
합 계		427	41	166	40	63	52	11	19	30	5
			10%	39%	9%	15%	12%	3%	4%	7%	1%
심의 안건	소 계	302	34	92	36	47	42	10	17	23	1
	원안 의결	126	13	56	15	17	12	1	4	7	1
	수정 의결	171	21	33	20	29	30	9	13	16	0
	재상정 의결	5	0	3	1	1	0	0	0	0	0
	보류	0	0	0	0	0	0	0	0	0	0
보고안건		120	7	72	4	16	10	1	2	7	1
기 타		5	0	2	0	0	0	0	0	0	3

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3.26.),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20.12.24.),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맞춰 위원회에서는 기존 대면회의를 '20년 12월 21일부터 화상회의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의·회식 관련 특별지침
(인사혁신처) 11.23(월) 시행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의·회식 관련 특별지침(인사혁신처)11.23.(월) 시행

- ☐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 ☐ 필요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 ☐ 대면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식사(다과 등) 최대한 자제
- ☐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화상회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해 실시하였으며, 위원장 위임으로 총무위원이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였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 6명은 사무실(자택 등)에서 온라인 출석을 하고, 차장과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해양경찰청 안건 소관 국·과장들은 위원회 회의실에 출석하였다.

화상회의인 점을 감안하여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위원장 인사말씀, 심의·의결, 폐회순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의 방법과 질의순서를 미리 안내하여 화상회의의 진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였다. 또한 위원장이 총무위원에게 회의진행을 위임한 만큼 총무위원이 의안처리 여부를 위원장에게 문의 하는 등 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의결토록 진행하였다.

화상회의는 정부의 코로나19 복무지침 변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하였으며, 3년간 총 73회 회의 중 화상회의는 46회 개최하였다.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화상)회의



03

회의별 안건 및 의결결과 주요내용

제1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2.21.(금) 13:30 ~ 15:3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차장, 국·관 및 해당 과장 등 12명

▶ 상정안건

6건

심의·의결 사항 3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선출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제1대위원장('20.2.21.~'23.2.20.) 선출	선출	해양경찰위원회 담당관
2	예규	「해양경찰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해양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정 의결	
3	선출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선출안	제1대 총무위원('20.2.21.~'23.2.20.) 선출	선출	

보고 사항 3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20년 주요 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수사구조개혁 추진현황	수사과
3	해양경찰위원회 운영계획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검증된 경찰위원회 운영세칙을 원형으로 하되 해경의 특수성 가미 필요

제2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3.3.(화) 20:00 ~ 21:4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청장 후보자, 기획조정관 등 6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1명

▶ 상정안건

1건

심의·의결 사항 1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동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원안 의결	해양 수산부

주요 질의 사항

위원	주요 내용
박찬호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조업에 대해 외교적인 갈등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무기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 해군과 공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후보자로 발탁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함혜리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고, 자랑하고 싶은 일 두 가지는? ● 세월호 관련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노력 필요함. 국민과 소통 방안은? ●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현재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이고, 앞으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김효선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유는? ● 국민은 세월호에 대한 정확한 진상과 대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후보자의 생각은? ● 일과 가정의 양립, 복지에 대한 생각은? ● 모든 조직의 성평등이 국가적 과제인데 계획이 있는지?
이은방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사망사고 줄이기 목표치를 가지고 계신지? ● OSC의 비상대응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해양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방안, 철학 등이 있는지? ●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가장 먼저 투입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위 원	주요 내용
윤 석 회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권 조정 관련 인권보호 방안은? ● 영장심사관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 세월호에 대한 해경청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분명히 짚고 가야함
남 상 옥 총무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색구조 관련 국내·외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의향이 있는지? ● 민간세력과 확실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 ● 연안 10마일권 내 사고에 대한 대응, 예방책이 있는지? ● 해양경찰법 제정 이후 첫 자체 청장 후보자임. 국민과 소통하는 멋진 해양경찰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함
사공영진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겠음 ● 권위의식과 과도한 의전 행사 탈피를 위해 많은 노력 바람 ●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바람

제3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3.16.(월) 14:00 ~ 16:4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차장 대리), 안건 해당 국·관 및 과장 등 14명

▶ 상정안건

5건

심의·의결 사항 1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정책	경비함정 영상녹화제도 도입·운영	육상에 설치 운영 중인 영상녹화제도를 경비함정으로 확대하여 불법조업 외국인 대상 현장조사 시 투명성 제고와 인권보호 강화	원안 의결	외사과

보고 사항 4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해양경찰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감사담당관
2	해양권익 350, 해양안전 5000 경비전략 계획	경비과
3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의 변화 /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수사 진행사항	특조위 지원 TF
4	밀입국 단속 관련 인권보호 및 난민 문제 대책	외사과

주요 토의 사항

경비함정 영상녹화제도 도입·운영

- 해상 특성에 맞고, 전원이 차단되어도 작동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첨부하는 등 현장 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비 도입 필요
- 공정한 법 집행 및 외교적 대응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녹화 장비 보급 후 사전에 충분한 교육, 시범운용 기간 필요

제4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4.6.(월) 14:30 ~ 17:3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1명

▶ 상정안건

7건

심의·의결 사항 4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대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19.12.3.)에 따라 법률의 적기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원안의결	해상교통관제과
2	부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3	훈령	「해양경찰청 방제비축기지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방제비축기지에 비축된 방제기자재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비축기지 점검자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수정의결	방제기획과
4	예규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	방제장비·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방제장비점검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수정의결	

보고 사항 3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결과	혁신행정법무담당관
2	2020 수난대비 집행계획	수색구조과
3	1/4분기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추진현황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안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위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 재위임하므로 향후 검토 필요

「해양경찰청 방제비축기지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제2조 정의에서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규칙(예규) 일부개정안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방제장비, 방제자재 정의를 통일하여 수정
- 제5조 방제비축기지 운영 및 관리 담당자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은'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로 수정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

- 제2조 정의에서 해양경찰청 방제비축기지 운영규칙(훈령) 일부개정안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방제장비, 방제자재 정의를 통일하여 수정

제5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4.20.(월) 14:30 ~ 17:1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1명

▶ 상정안건

4건

심의·의결 사항 2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예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해양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및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및 임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 규정	수정 의결	수사과
2	예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3.4.)에 따라 용도폐지된 함정에 대해 무상 양여 전 정비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2020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	해양안전과
2	수사민원 Care Plus+ 서비스 추진계획	수사과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 원활한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장 직무대행, 정기회의 개최 횟수, 위원 해촉방법 등 수정, 의사정족수, 위촉장 발급 및 위촉대상 관리, 보궐위원 임기규정 추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일부개정안

→ 제2조(정의)에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에 대한 정의 추가, 각호의 순서는 제1조(목적)와 논리적으로 맞도록 경비함정, 특수함정, 부선, 부선거, 연안구조장비, 함정 정비, 함정 수리, 함정 개조, 선저외판 검사, 중대복구 수리 順으로 수정

제6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5.4.(월) 14:30 ~ 16:5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1명

▶ 상정안건

6건

심의·의결 사항 3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정책	2020년도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0년도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추진계획	원안 의결	감사담당관
2	부령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 시에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보수교육의 사전이수나 연기 신청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증명서류 일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수정 의결	수색구조과
3	고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일부개정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에 따라 검인업무 대행기관 명칭변경 및 재검토 기한을 연장	원안 의결	해양오염 예 방 과

보고 사항 3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5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2020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수상레저과
3	2020년 제1차 해양경찰위원회 현장방문 계획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2020년도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추진계획

-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범적이고 해경을 대표할 수 있는 청렴한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필요가 있음
- 기관 이미지 및 평가자 감정에 따라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화재선박 선원구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할 필요가 있음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준수 및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에 전자우편 추가, 항목 체크란 등 서식 수정
- 수상구조사 합격률이 낮으므로 많은 사람이 취득하도록 등급 구분(1~3)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지(마크) 지급 및 홍보 필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일부개정안

- 대행기관과 체결한 협정서에 기술자료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완 필요

제7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5.18.(월) 14:30 ~ 16:3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8명

▶ 상정안건

3건

심의·의결 사항 1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훈령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해양경찰청 양성평등 T/F 운영계획(안)	기획재정담당관
2	해양경찰 수사역량 고도화 추진계획	수사과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 제5조제1항 각 호에 직무를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므로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를 '공무원은'으로 수정

제8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6.1.(월) 14:30 ~ 17:0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7명

▶ 상정안건

7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고시	「선박교통관제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6.4.)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반영 등 개정	수정 의결	해상교통 관제과
2	훈령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3	훈령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추가하고, 조항순서 변경 등 개정	수정 의결	
4	훈령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기존 관제시설 관리로 한정된 내용을 관제시설의 설치·관리 등으로 확장하여 운영상 미비점 개선	수정 의결	
5	예규	「해양경찰 직제의 영문표기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직 및 직위의 영문 표기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수정 의결	국제협력관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결과	해상교통관제과
2	6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선박교통관제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제1조(목적)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은 유사입법례와 같이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법문 표현 형식에 맞게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
- 제2조(적용 범위)에서 선박교통관제관서는 관제구역이 아닌 육상에 위치하므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의 관제대상 선박에 적용한다’로 수정

「선박교통관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 제25조(녹음 등 보존기간)제2항에서 관제통신 녹음정보 등 보존 연장 요청 기관이 ‘해양사고 수사 소관부서’에서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사 및 심판 등’에 수사가 포함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 및 심판 등’을 ‘조사 및 심판, 수사 등’으로 수정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제5조(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절차)에서 위원회 관련 조문은 행정기관위원회법령에 따른 위원회 구성 원칙을 준수하여 수정
- 제2항 ‘간사는 해상교통관제과장’을 ‘간사는 교육훈련계장’으로 수정,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로 수정
- 제3항 ‘위원은 5명 이상’을 ‘위원은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직원과 민간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수정
- 제5조제5항 ‘신청서’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제5조제7항과 같이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로 수정

「해양경찰 직제의 영문표기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 서해5도 특별경비단 영문표기를 단순 직역된 표현이 아닌 관서특성을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FIVE WEST SEA ISLANDS’을 ‘WEST SEA’로 수정

제9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6.26.(금) 10:00 ~ 11:1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0명

▶ 상정안건

5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수정사항, 본청 훈련총괄 기능 강화 및 정비창 소요정원(순경6명) 반영	원안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2	훈령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신설되는 사무 내용을 반영하고, 부서별 수행업무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부서 명칭 개선 사항 심의	원안의결	
3	훈령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신설되는 사무내용을 반영하고, 부서별 수행업무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부서 명칭 개선 사항 및 사무내용 전결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위한 개정	수정의결	
4	고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기준일 제정 및 합격확인서 신설로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상구조법」 개정사항 반영	수정의결	수색구조과
5	훈령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청 소속 구성원의 외국인 접촉 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의 유출 방지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개정	수정의결	외사과

주요 토의 사항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제4조(합격자 발표)제3항에서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주소는 제2항에 나와 있어 중복되므로 '수상구조사 종합정보(<https://imsm.kcg.go.kr/CLMS/main.do>)'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로 수정

→ [별표 1] 채점표 과목과 상위규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과목이 일치하도록 '장비기술'을 '구조장비 사용법'으로 수정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일부개정안

→ 제5조제1항과 2항은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은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적 오류가 있으므로 제1항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를 '소속 방첩담당관에게 통보'로 수정

제10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7.6.(월) 14:30 ~ 16:5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1명

▶ 상정안건

6건

심의·의결 사항 1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시 등록증 반납 면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임시검사 사유 추가 및 동력수 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 규정 신설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보고 사항 5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해양경찰 성평등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및 훈령제정 추진	운영지원과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제·개정 보고	인사담당관
3	「해양 유·도선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개정 계획	해양안전과
4	「국가긴급방재계획(NCP)」 개요 및 개정 현황	기동방제과
5	7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 임의 변경 시 처벌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 등'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37조의2(안전 검사 상태유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 등을'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로 수정
- 의무 부과 대상자 및 처벌대상자를 소유자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37조의2(안전 검사 상태유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 검사를 받은 사람은'을 '소유자는'으로, 제58조(벌칙)제1호의4 '임의로 변경한 사람'은 '임의로 변경한 소유자'로 수정

제11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7.20.(월) 14:30 ~ 16:4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1명

▶ 상정안건

5건

심의·의결 사항 3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고시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6.4.)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내용을 고시	원안의결	해상교통관제과
2	예규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정의결	수상레저과
3	훈령·예규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등 17건	감사담당관실 소관 규칙(훈령·예규) 17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수정 등 전반적으로 보완 행정규칙 일제정비	원안의결	감사담당관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해양경찰청 양성평등 균형인사 방안 보고	인사담당관
2	2/4분기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추진상황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정안

→ 내수면 지원반의 구성에 대해 두 개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고, 지원반 인력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병합하여 '내수면 지원반은 수상레저 또는 수사 및 형사 업무 담당 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은 삭제

- 제3항은 제2항으로 수정하고 내수면 지원반 구성원의 계급이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위계급 경찰공무원 1명을 지원반장으로 지정'을 '선임 경찰공무원을 지원반장으로 지정'으로 수정, 제4항은 제3항으로 수정
-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병합하면서 '수상안전지원센터'를 삭제하여 제정안에서 제2조제2항 정의 조항만 남게 되고, '수상안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조제2항 '협조해야 한다'를 '협조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상안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 [별지 제1호서식]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반 근무일지 제3항 '점검 및 단속 실적'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수면 지원반의 임무(순찰, 지도·단속, 안전 교육, 홍보, 현장의견 청취 등)를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실적'으로 수정

제12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8.3.(월) 14:40 ~ 17:3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1명

▶ 상정안건

6건

심의·의결 사항 2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훈령	「경미범죄사건 심사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자 감시 양산을 방지하 기 위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정 의결	형사과
2	훈령 · 예규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등 12건	해경청 행정규칙의 체계 및 자구를 전반적으로 보 완하여 완성도를 향상하기 위한 일제정비에 따른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규칙(12건)의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운영지원과

보고 사항 4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파출소 연안구조정 인력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혁신행정부무담당관
2	신조함정 건조시 여경 거주시설 개선 계획 보고	장비기획과
3	해상 특수 기동대원 피복류 등 개인 물품 지급 관련 보고	장비관리과
4	8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 제7조제1항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위원을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한 것은 경찰서 내부직원과 외부 민간인을 구분하려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문에 많이 표현하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수정
- 위원도 외부위원과 마찬가지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항 ‘지명한다’를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위원장(서장) 부재중에 위원장 직무대리자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제3항에서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삭제, ‘위원장 및 정부위원이 부득이한’을 ‘내부위원이 부득이한’으로, ‘위원장 및 정부위원이 미리 지명한’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으로 수정
- [별지 제4호서식]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심사의견’ 항목에 판단 및 참작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판단 및 참작 사유’ 추가

제13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8.24.(월) 14:40 ~ 16:5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0명

▶ 상정안건

3건

심의·의결 사항 1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선박통제규정」 전부개정안	「어선안전조업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8.28.)에 따라 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및 조항순서를 변경하는 등 현 실태에 맞게 정비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중부지방해양경청 신청사 부지선정 경과보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2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 방안	감사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선박통제규정」 전부개정안

- 개정안 적용대상을 어선으로 한정하므로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2조제5호 '선박패스(V-Pass)장치'를 '어선용 선박패스(V-Pass)장치'로 수정
- 제8조제3항은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준용문 규정 방식에 따라 '대행신고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로 수정

제14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9.7.(월) 14:30 ~ 17:0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1명

▶ 상정안건

9건

심의·의결 사항 7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20년 하반기 소요정원(+68명) 반영	원안 의결	혁 신 행 정 법무담당관
2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3	훈령	「해양경찰청 자체규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자체규제심사 관련 '규제입증요청제'를 명시, 건의 자·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회의운영방 식 개선	원안 의결	
4	훈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전부개정안	재직 중 수여받은 기장(약장)만을 패용토록 재정비 하고 기념장 제작 근거와 수여 대상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 개선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
5	훈령	「국민방제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교육·훈련, 경비지급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 하여 훈령 정비	수정 의결	기동방제과
6	고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 대행자 고시」 폐지안	기존 업무대행자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의 업무대행자 지정 반납 요청에 따라 관련 고시를 폐지	원안 의결	해양오염 예 방 과
7	고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 기준」 전부개정안	방제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국가표준 등을 적용하고 실효성이 낮은 시험항목 폐지 또는 신고사항으로 변경	수정 의결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2021년 예산(안) 편성 결과보고	기획재정담당관
2	9월 주요업무계획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전부개정안

- 기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폐지된 후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이 각 훈령으로 제정하여 달리 시행하고 있으며, 상징표지 또한 다르므로 경찰청 경찰공무원 기장의 제식과 동일한 형태로 보이는 [별표 1] 경찰공무원 기장의 제식 중 지휘관장 정장 및 약장, 근속기장(성실장, 봉사장, 충성장, 평생장) 정장에 사용되는 ‘독수리 조각, 경찰마크’를 현 해양경찰청 상징표지로 변경

「국민방제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 제18조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규정되어 중복되므로 불필요한 제2조제3호 ‘심의위원회’ 정의를 삭제
- 제2조제3호 삭제에 따라 약칭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이하 ‘대원’이라 한다)’도 삭제되므로,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되는 제3조제2항 ‘해양자율방제대는 대장 1명, 간사1명 및 일반대원으로 구성한다’를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대장 1명, 간사 1명 및 일반대원으로 한다’로 수정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고시」 폐지안

- 방제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국민들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및 안내 바라며, 시험결과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 철저한 준비 필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전부개정안

- 오일펜스 모양의 구분기준만 표로 설명되어 있고, 치수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 1] 4. 오일펜스 가. ‘오일펜스는 모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치수에 따라 A, B, C형으로 분류한다’를 ‘오일펜스는 ……., 치수에 따라 A, B, C형으로 분류하며 그 기준은 다.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중 5) 부유시험 판정기준 다)를 따른다’로 수정

제15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9.21.(월) 14:30 ~ 17:0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1명

▶ 상정안건

7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예규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원안 의결	스 마 트 해양경찰 추진단
2	훈령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 규칙」 제정안	소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제도 등을 명문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근거 기반' 마련	수정 의결	혁 신 행 정 법무담당관
3	훈령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권고에 따라 소송대리인의 특정변호사 편중을 방지하고, 능력이 부족한 소송대리인의 재선임을 제한	수정 의결	
4	훈령	「기획재정담당관실 소관 행정규칙(3건)」 일부개정안	해경청 행정규칙의 체계 및 자구를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완성도 향상을 위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기획재정 담당관
5	훈령	「인사담당관실 소관 행정 규칙(5건)」 일부개정안			인사담당관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해양경찰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진행사항 보고	운영지원과
2	일반적 수사준칙 제정안 주요 내용	수사과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 규칙」 제정안

- 제11조제3항에서 보궐위원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인 표현과 다르게 규정되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원회 관련 유사입법례와 같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
- 제23조제1항제4호 경찰청과 공동적용 받던 인사법령을 독자적인 체계로 개선하였으므로 개선 법령에 맞도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로 수정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소송대리 변호사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 세부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하므로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유사입법례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훈령)」 등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쟁입찰 절차를 따르도록 수정
-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므로 그에 따른 수행 능력 평가 및 선임 해지 등에 대해서도 통일되고 일관성 있도록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주체를 '소송총괄관'에서 '소송수행부서의 장'으로 수정

제16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0.19.(월) 14:30 ~ 17:2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0명

▶ 상정안건

9건

심의·의결 사항 6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대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임시운항허가 제도 신설 등의 법률 개정에 따른 임시운항 허가 신청 및 반납절차 규정 신설 등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2	부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임시운항허가의 세부 절차 마련 및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원거리 활동 예외 허용 등	수정 의결	
3	훈령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신고포상금제도 지급에 대한 상위법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 등 제외 근거 및 운영결과 평가 근거 마련 등 미비점 개선	수정 의결	수사과
4	훈령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일부개정안	유치장 환경개선 사업에 따라, 유치장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내용 반영 등	수정 의결	
5	예규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규칙」 일부개정안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긴급방제자금(방제운영비·민간위탁금)을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 신속한 방제 및 사고수습 유도 등	수정 의결	기동방제과
6	예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안	해양사고 시 적극적 환경위해 방지를 위해 민간방제세력 동원경비에 대한 원인행위자 청구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인자 책임원칙 확립 등	수정 의결	

보고 사항 3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빠르고 안전한」 구조를 위한 구조보드 도입 보고	수색구조과
2	해양 선박·항공기 사고 표준대응절차 개요 및 개정 현황 보고	
3	3/4분기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추진상황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임시운항허가증은 법률에 따라 임시운항 기간이 만료된 후 반납해야 하므로 [별지 제34호의4서식] 유의사항 제2호 ‘임시운항허가일로부터’를 ‘임시운항 기간 만료일로부터’로 수정
-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7조의2제2항제1호 ‘운항거리 :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는 실제 운항한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하고자 하는 운항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운항거리 : 출발항으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로 수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제1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2호 단서로 신설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 제11조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 표현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해 ‘위원은 해당 관서장이 계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 4명을 지명하여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해당 관서장이 지명하는 계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한다.’로 수정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일부개정안

- 제5조제1항에서 상정안의 유치실 수용자 1인당 최소면적은 2.64㎡이므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구금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1인당 3.4㎡)을 충족하도록 유사입법례인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과 같이 수정
- 제17조제2항에서 유치장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무 경찰관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유사입법례인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과 같이 보안시스템에 금속탐지기를 추가하고, 그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 제17조제2항제5호 금속탐지기 설치기준 신설에 따라 상정안 제5호는 제6호로 수정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규칙」 일부개정안

- 제2조제2호 민간위탁금의 정의는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우므로, 그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이란 해양오염 사고시 방제초치 등에 발생한 비용지급을 위하여...(중략)’으로 수정
- 제7조제2항에서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표기하여 명확히 규정

제17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1.6.(월) 15:00 ~ 17:2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8명

▶ 상정안건

7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훈령	「해양경찰청 양성평등 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마련 등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수정 의결	운영지원과
2	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정안	해양경찰 교육훈련 체계 및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청 소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규정 마련	수정 의결	교육훈련 담당관
3	훈령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규칙」 제정안	함정·파출소 등 현장부서의 훈련체계 전반에 대한 규정을 마련, 복합사고 상황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제고 추진	수정 의결	
4	부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연안체험활동 및 안전교육, 민간 연안순찰요원에 관한 내용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 편의 증대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5	훈령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발생 여부,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 현장적용이 용이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개정	수정 의결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중국어선 조업동향 및 대응방안	경비과
2	11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제5조제1항에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보다 많은 외부위원 및 여성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1항 ‘11명 이내의 위원’을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
- 제5조제3항제1호 내부위원 규정에서 ‘교육훈련담당관’ 대신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내부위원으로 지정하며, 보다 많은 여성 내부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 1명 이상’으로 수정
- 제5조제6항 내부위원 궐위 시 지정권자를 유사입법례와 같이 내부위원장으로 수정하며, 선정대상 폭을 넓히고 직무대리자인 계장 등이 내부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수정
- 제6조제1항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에게 포함되므로, 제1항에서 불필요한 ‘외부위원장을 포함한’을 삭제하고, 내부 여성위원 인력풀은 본청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제3항의 내용도 제6조 위원 임기 규정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 제4항 보궐 외부위원의 임기는 유사입법례와 같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수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정안

- 국내교육훈련과 동일하게 국외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의무 기간에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제3항 ‘제1항의 복무의무 기간에는’에서 ‘제1항의’를 삭제
-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우수한 교수요원 선발을 위해 유사입법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3(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등과 같이 징계처분에 대한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직위해제처분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수정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규칙」 제정안

- 제정안 제명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규칙’과 제1조 목적의 문구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이 맞지 않으므로, 제정안의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훈련’으로 수정
- 제6조 제목 ‘훈련의 통합·운영’이 조문의 내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포함하고 대표할 수 있는 ‘훈련의 신설·폐지 협의 등’으로 수정
- 제9조에서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지도·감독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외조항을 제3항 단서로 신설하고,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점검 대상·주기에 대해 현장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규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별표 3] 가. 일반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에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근거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수정
- [별표 3] 나. 수상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에는 「수상구조법」에 따른 수상구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수상구조사 자격규정 삭제

→ [별표 3] 3. 안전장비의 종류 및 배치기준에서 유·도선법과 같이 일률적으로 소아용 구명조끼 10%를 갖추도록 규정하는 것은 본 규칙과 맞지 않으므로 체험활동자에 맞는 구명조끼를 갖추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적합한(성인용 또는 소아용) 구명조끼'로 수정하고, 후단 '이 경우 전체 구명조끼의 10%는 소아용으로 한다'는 삭제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제16조제2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설물의 표준화 및 설치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

제18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1.16.(월) 14:30 ~ 17:0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1명

▶ 상정안건

7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해양경찰 채용후보자의 임용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승진·시험심사 비율을 개선하며, 채용시험 과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 방안 제도화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
2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근무성적평정의 직장훈련 배점 향상, 직무관련 자격증을 산설하는 등 심사승진 가점 개선, 채용시험 응시자격·방법을 개선	수정 의결	
3	고시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사항을 반영, 수상레저 기구 검사 대행기관 안전검사에 대한 법정 교육 근거 마련 등	원안 의결	수상레저과
4	고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자격관리지침」 일부개정안	래프팅가이드 평가항목 중 급류기준(2급이상→1급이상) 제한적 완화 등	수정 의결	
5	훈령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보관 등 전 과정에서 무결성, 신뢰성 등 사법절차상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하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표준업무 처리절차 규정	수정 의결	과학수사과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후속조치 검토보고	해양안전과
2	고정의 기내식 및 위생처리 관련 검토 보고	항공과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별표 4]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추가 대체함에 따라 합격자 결정 방법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 점수를 제외하고, 그 대상을 순경까지 확대하므로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정안 내용과 부합하도록 별표 4 비고 제1호에서 '경정'을 '경정 및 순경'으로 수정하고, '한국사는 별표 7의2의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를 추가
- [별표 5]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의 비교에서도 영어 검정제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내용과 부합하도록 비교에 '한국사는 별표 7의2의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를 추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별표 4]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중 팔다리의 기준을 '팔다리가 완전'에서 '해양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사용이 가능'으로 개선하므로, 개정안 내용과 부합하도록 비교 '팔다리가 완전한지'를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사용이 가능한지'로 수정
- [별표 9] 인명구조요원의 근거 법령을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명구조요원에는 별표 9에서 상위 평정점(0.4점)으로 구분한 수상구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상구조사를 제외한 인명구조요원을 명시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요원의 근거 법령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으로 수정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자격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 제27조제5항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제6조제3항)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편의 및 알권리를 위해 '취소·정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보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수정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 '21.1.1. 시행예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제5항에서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12조에 제5항을 신설하고, 제5항은 제6항으로 수정
- 제31조에서 내사편철·미제편철한 사건이 내사재개 또는 수사절차로의 전환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압수한 전자정보의 삭제·폐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여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제2호 '즉시 삭제·폐기'를 '삭제·폐기'로 수정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삭제·폐기는 증거물 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르도록 제3호를 신설

제19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2.7.(월) 14:30 ~ 17:5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2명

▶ 상정안건

10건

심의·의결 사항 8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계선부표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해수부 소속기관 직제 및 「항로표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 보완	수정 의결	경비과
2	예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신속한 상황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동조치대응반·상황대책팀을 재정립하고, 現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 수정·보완	수정 의결	종합상황실
3	훈령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수정·보완 하고 근무방법 및 복무 기준을 상황관리팀과 동일하게 규정	수정 의결	
4	해수 부령	「해양경찰수사규칙」 제정안	해양경찰 수사의 책임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범죄수사규칙(훈령)에서 규정하던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규정 등을 수사규칙(부령)으로 제정	수정 의결	수사과
5	훈령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목적으로 훈령 개정	수정 의결	방제기획과
6	훈령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방제대책본부의 그간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효율적인 대책본부 운영 및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수정 의결	기동방제과
7	훈령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규칙의 기본적인 체계·자구를 수정·보완하고 일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연장	원안 의결	
8	훈령	「경찰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상황지휘와 구조본부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4시간 공용차량을 사용하고 대기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수사개혁에 따른 「해양경찰법」 개정안 주요 내용	수사과
2	12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계선부표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 제15조에서 계선부표를 주로 이용하는 소형정은 수중점검이 가능한 인력·장비가 없으므로 수중점검의 주체를 ‘함·정장’에서 ‘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 소형정은 항박일지가 아닌 함정일지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도록 수정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제8조의 상황담당관이 휴가 등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 대행자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위 상급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므로,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비국장, 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 안전총괄부장(안전총괄부장이 없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으로 수정

「해양경찰수사규칙」 제정안

- 「해양경찰법」에서는 해양경찰 사무를 규정하지 않고,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를 직무로 해석한다고 하여도 「해양경찰법」에 규정된 직무에는 수사와 관련이 없는 수색·구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규칙의 적용 범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제2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 「경찰수사규칙」 적용 범위를 인용하여 수정
- 약칭 규정에 맞도록 제4조의 ‘수사준칙’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으로 수정하고, 제5조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를 ‘수사규칙’으로 수정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 제5조에서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방제함정에 대해 필요 시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으므로 지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해양경찰청장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장도 방제함정을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
- 제7조제1항제2호에 승선 가능한 인력을 확대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맞게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된 사람 중’을 삭제하여 ‘소형방제작업정: 운항담당자는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

- 제7조제2항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직 공무원을 화학방제함 또는 방제정의 승조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전체 조문 수정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 제6조의2 해양경찰청에 ‘차장’이라는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부처 사례와 같이 부분부장(차장)을 신설하고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제6조의2 ‘대응계획부장’을 ‘부분부장 또는 대응계획부장’으로 수정
- 중앙방제대책본부 규모에 맞게 각 부장은 본청 국장급으로, 일부 반장을 지방청 과·계장급으로 변경하며, 공보관을 ‘지방청 홍보계장’에서 본청 ‘대변인’으로 수정
- 중앙방제대책본부 구성 변경에 따라 광역방제대책본부의 공보관 ‘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을 ‘지방청 홍보계장’으로, 오염평가반장 ‘해안오염조사평가팀장’을 ‘경찰서 예방지도계장’으로 수정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 공보관인 ‘경찰서 홍보실장’ 직위는 없으므로 홍보담당을 총괄하는 ‘경찰서 기획운영계장’으로 수정

「경찰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 제6조제1항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금지 규정에 대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표현을 인용하여 수정

제20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2.21.(월) 14:00 ~ 17:3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6명

▶ 상정안건

19건

심의·의결 사항 18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범죄수사규칙」 전부개정안	「수사준칙」, 「해양경찰 수사규칙」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내용 삭제하고, 수사권개혁 입법 내용 및 취지를 수사실무절차에 반영하는 등 수사절차규정 정비	수정 의결	수사과
2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일부개정안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라 유치인 또는 유치장 관련 사건사고 '보고'를 '협의'로 변경	수정 의결	
3	예규	「수사이의사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수사이의'를 '수사심의'로, '수사과오 평가'를 '수사심의신청 조사'로 정정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공정성, 객관성 확보	수정 의결	
4	훈령	「변사사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 수사규칙」 및 「범죄수사규칙」 근거 조항 반영	수정 의결	
5	훈령	「내사사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수사준칙」 및 「해양경찰 수사규칙」 제정 사항 반영 내사사건 기일연장 규정 신설 등	원안 의결	
6	훈령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개금지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기 위해 '제2장 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신설 등 조문체계 재정비 포도라인 규정 삭제 및 사건관계자 출석 정보 공개 금지 명문화	수정 의결	
7	훈령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수사자료표 작성대상을 '불기소 의견'을 '불송치 결정'으로 수정	수정 의결	
8	훈령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범죄통계원표 작성 범위에 "불송치 결정" 포함	수정 의결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9	훈령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경찰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구체화하고, 해양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관련 사건의 관할 지정 조항 신설	원안 의결	수사과
10	훈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지정 근거 마련, 「해양경찰 수사규칙」 및 「범수규칙」 근거 조항 반영	수정 의결	
11	훈령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폐지안	범죄수사규칙에 통합하여 규정, 폐지	원안 의결	
12	훈령	「지명수배 규칙」 폐지안	범죄수사규칙에 통합하여 규정, 폐지	원안 의결	
13	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2년간 평균 육아휴직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 규정	원안 의결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14	훈령	「해양 유·도선 재난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해양 유도선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상황실장 변경 등) 반영 및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 훈령 개정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15	예규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의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16	계획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1~’25)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원안 의결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단
17	계획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21~’25)	선박교통관제법시행 첫해로서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조직적·기술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원안 의결	해상교통 관제과
18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해 「경찰공무원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해양경찰청 인사법령을 일부개정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2021년 국회 예산심사 결과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범죄수사규칙」 전부개정안

- 제98조제1항제1호에 범행·범인을 의미하는 접미사 ‘범’이 살인, 강도 등 행위에 결합될 수 있도록 쉼표(,) 대신 가운뎃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방화, 폭력, 절도범’을 ‘살인·강도·성폭력·마약·방화·폭력·절도범’으로 수정
- 제101조제2항 및 제5항에서 공개수배 위원회가 신설되었으나 위원을 누가, 어떻게 지명할 것인지, 기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개수배 위원회는 긴급하고 신속하게 개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2항 ‘7명 이상 11명 이내’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수정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일부개정안

- 제27조제4항에서 상위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및 유사입법례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7조(급식 등)와 같이 생리 중인 여성 유치인에 대한 물품지급 내용을 추가하도록 수정
- 제31조 제목을 ‘질병에 대한 조치’로 하게 되면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부, 산부 및 고령자’에 대해 오인할 수 있으므로 조 제목을 ‘질병 등에 대한 조치’로 수정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 제9조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경찰청과 같이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제3항 ‘위원장은 수사 부서의 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로 수정
- 제9조제4항제1호에서 폭넓은 법률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자격요건에서 ‘법과대학’을 삭제하고, 외부위원 자격요건에 관해 설명하는 규정에 맞도록 ‘법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를 ‘부교수 이상의 법률전문가 등’으로 수정

「변사사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 제12조제1항에 변사사건 현장보존과 부합하도록 상위법 「해양경찰 수사규칙」 제27조(검사의 주의사항)와 현장 보존에 대해 보다 상세히 규정된 「범죄수사규칙」 제165조(현장보존)를 근거법령으로 병기하도록 수정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제19조제2항 수사사건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답변에 대해서는 교육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본 규칙에서는 삭제

「해양 유도선 재난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제4조에 설치되지 않은 수습본부의 본부장이 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비논리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해양경찰청장이 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수정

「해양경찰청 합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 제13조에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하여야 하고, 불출석 위원이 제출한 서면의견에 출석한 위원과 동일하게 인정 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사례에 따라 행정기관위원회법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인용하여 수정
-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제14조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의무규정 신설

제21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1.4.(월) 14:30 ~ 16:5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전 소관 국·과장 등 7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4건

심의·의결 사항 2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정안	정책연구 추진부서의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의 필요성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의견 입법화	수정의결	기획재정담당관
2	계획	2021년 해양경찰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시행계획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5조,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원안의결	운영지원과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2021년 해양경찰청 주요업무 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2021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침	수상레저과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정안

→ 제6조제3항 내부위원은 00과장, 00팀장이 아닌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므로 조문 내용과 맞지 않는 '내부위원(당연직)'을 '내부위원'으로 수정하고, 외부위원은 당연히 위촉하므로 의미가 중복되는 '외부위원(위촉직)'을 '외부위원'으로 수정

-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을 하더라도 최대 임기는 4년이므로 그 의미가 중복되는 제1항 단서규정 '단, 연임·중임 시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중임에 따른 총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삭제하고, 내부위원은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연직이 아닌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므로 당연직 내부직원에 대한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제3항을 삭제
- 제8조제4항은 군사기밀 관련 사항 등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에 대해 외부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제2항 후단뿐만 아니라 전단까지 포함되어야 하므로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수정
- 제17조에서 연구자의 선정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제2항에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수정, 상정안 제1항제1호는 수정안 제1항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며, 이에 따라 상정안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상정안 제2항은 제3항으로 수정
- 제21조제2항에서 표절 등 부정행위가 명백한 경우 정책연구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참여 제한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유사입법례와 같이 제한 기간을 규정하도록 수정

제22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1.18.(월) 14:00 ~ 16:2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건 소관 국·과장 등 12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7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대령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제11조 제9항 및 제15조의2 제1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	원안 의결	수사과
2	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해양경찰법」 개정에 따른 「해양경찰 수사 부서의 장」 외부 임용 규정 신설에 따라 채용방법 등 일부 개정	수정 의결	교육훈련 담당관
3	예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부담 수령의 엄중처벌을 위해 이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4	계획	2021년 해양경찰 교육훈련 계획	'20년에는 교육훈련체계 전면 개편 및 학습 인프라 구축 등 『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함, '21년에는 내실 있게 시행하며 『안정화』에 중점	원안 의결	교육훈련 담당관
5	계획	2021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20년도 연안사고 및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연안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21년도 중점추진과제를 제시	원안 의결	해양안전과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해양경찰법 국회 상임위 수정의결 주요내용 보고	수사과
2	2020년 해양경찰위원회 운영 결과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제28조의2 수사 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연스러운 법문 표현이 되도록 제2항 '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를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은 제25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로 수정
- 제3항에서 서류심사위원회가 수사 부서의 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수사부서의 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를 '해양경찰청에 수사 부서의 장 임용후보자 서류심사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로 수정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별표 2] 징계양정 기준에서 비위유형과 부당수령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서식을 수정하고, [별표 2]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무 위반 비위유형과 징계양정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서식 수정하고, [별표 6] 징계양정 기준에서 유형과 징계양정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서식 수정

제23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2.1.(월) 14:00 ~ 16:0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전 소관 국·과장 등 13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7건

심의·의결 사항 6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	기능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한 부서 신설 및 통폐합에 따른 사무분장 규칙,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	수정 의결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2	훈령	「해양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3	예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정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및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 감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4	훈령	「항만교통관제센터의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선박교통관제법, VTS행정규칙(4건) 및 해수부와 의 MOU에 同 공동운영규정 내용의 대부분을 반영, 실효성이 없어 폐지	원안 의결	해상교통 관제과
5	고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 명칭을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개정하고, ‘경인연안 VTS’와 ‘태안연안VTS’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신규 지정	수정 의결	정보통신과
6	계획	2021년 수난대비계획	‘수난대비기본계획(‘18~’22)’을 바탕으로,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효율적인 수난구조를 위해 年 단위 집행계획 수립	수정 의결	수색구조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2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 제6조의2제2호제다목 3D 프린터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어 규칙에서 신장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3D 프린터 등 신장비'를 '첨단장비'로 수정
- 제8조에서 수사·정보조직 개편 등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021.1.14. 공포·시행)되어 국제협력관, 정보과 및 외사과를 국제정보국으로 재편하고 국제협력과를 신설하였으므로, 제8조 국제협력관은 삭제
- 제15조제2호제바목 대테러작전업무 시 해군과의 협조뿐만 아니라 육군 및 공군 등과의 협조도 필요하므로 '해군과 협조 및 연락관 업무'를 '군과 협조 및 해군 연락관'으로 해당 조항 수정
- 제6조의2제1호부터 제35조제1호에 해당하는 각 부서에 규정된 업무 중 '그 밖에 0000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및 '00 내 서무에 관한 사항'을 각 부서 마다 달리 표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된 표현으로 수정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정안

- 제5조제2항에서 교재감수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자체 위원회 위원 임명·위촉권자와 같이 해양경찰청장으로 규정하도록 수정
- 제7조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뿐만 아니라 영상회의, 전자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를 '서면 등 다른 방법으로' 수정,
- 제7조제4항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교재감수위원회는 교재감수 이외에 제정안 제11조에 따라 우수 교재를 선정해야 하므로,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의를한다'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
-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원회는 교육교재의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논의하므로 위원회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감수'를 '감수·평가'로 수정

제24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2.15.(월) 14:00 ~ 15:1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전 소관 국·과장 등 9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5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21년도 소요 정원(516명)을 상반기 배정, 정원 조정 및 총액 인건비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는「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2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3	훈령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 총흔시설 외 지역별로 설치된 순직자 흉상에 대해 일관되고 균형 있는 예우 유지와 통일된 흉상설치를 위해 흉상 설치 표준안을 신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수정 의결	운영지원과
4	고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영흥수도 레이더 설치 완료에 따라 인천VTS 관제 구역 등을 확대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5	계획	2021년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안)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21~'25)을 시행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2021년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안)』 마련	원안 의결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 제28조제3항에서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직무분장의 직제순 나열 필요

– 사무분장의 순서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9조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의 직제순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개정 시 반영 필요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수부령, '20.3.31 공포·시행)에 규정된 부서 명칭에 맞도록 '교육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수정
- 별지 제1호 서식에서 '해양경찰충훈탑 위패봉안 신청서' 하단의 근거 규정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명과 조항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수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별표 3]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내 각 VTS의 정보 현행화 필요
- [별표 3], '관제대상선박 이동 및 승선·하선 관제통신 방법'에 표기되어 있는 정보와 각 VTS 홈페이지 정보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수정 필요
- [별표 1]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정의하는 단어의 적절성 검토 필요
 - 선박교통관제구역을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으로 정의하였으나 '해면'은 구역이 아닌 표면을 뜻하므로 교통관제에 적절한 단어로 수정 검토 필요

제25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3.2.(화) 10:30 ~ 11:3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전 소관 국·과장 등 7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3건

심의·의결 사항 2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부령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비법 개정(’21.3.30.시행)에 따라 대테러 인력·장비 확충, 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해양대테러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수정 의결	경비과
2	고시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국가기관 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신설 및 확장 등 변화된 해양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해중요 시설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	수정 의결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3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 별표에서 경위도를 나타내는 좌표계의 기준이 다양하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측량 기준에 따라 세계측지계(WGS-84)로 표기하고, 경위도 좌표에 사용된 영어 및 기호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로 수정

제26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3.16.(화) 10:30 ~ 11:5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국·과장 등 6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3건

심의·의결 사항 2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계획	「2021년도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안)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4조 <대통령령>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원안의결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단
2	계획	「'22~'36 해양경찰 장비증강목표기획서」 개정(안)	국·내외 해양환경과 치안수요 변화를 고려, 다양한 해양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장비증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장비증강 목표기획서 개정	원안의결	장비기획과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해양경찰 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사항	장비기획과

주요 토의 사항

「2021년도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안)

→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당해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사유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진행상황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2~'36 해양경찰 장비증강 목표기획서」 개정(안)

- 회전익 장비증강소요 산출을 위한 상황대응목표 시간 현실화가 필요하고, 독도 전담경비 고속함정은 일본순시선과 대치 상황을 고려하여 무장 수준 상향 검토 필요
- 「'22~'36 해양경찰 장비증강 목표기획서」 '4쪽, 2. 가' 내용 중 '한·중·일간 해양경계선에 대한 협정을 체결' 하였다는 문구 수정 필요

「해양경찰 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사항

- 해양경찰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황관리시스템 등 중요 소프트웨어도 법률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제27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4.5.(월) 14:00 ~ 15:4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국·과장 등 6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4건

심의·의결 사항 1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예규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칙」 제정안	긴급신고전화(112, 119) 및 권익위 국민콜(110)의 효율적 연계, 신고폭주 방지,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 관련 절차 마련	수정의결	종합상황실

보고 사항 3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4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1/4분기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추진상황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사항 보고	수색구조과

주요 토의 사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칙」 제정안

- '긴급기관'은 제2조제1호에서 사용한 '긴급신고대응기관'의 약칭이며,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목적조항에서 약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므로 제1조의 '긴급기관'을 '긴급신고대응기관'으로 수정
- 제2조제1호에서 '긴급신고대응기관'을 '긴급기관'으로 약칭하면서 '긴급신고대응기관' 뒤쪽에 위치하지 않고 '긴급신고대응기관'이란의 뒤쪽에 위치하여 부적절하므로, 약칭의 사용을 '긴급신고대응기관' 뒤쪽에 위치하도록 수정
- 제2조제2호에서 '비긴급기관'을 '권익위'로 약칭하여 약칭 자체만으로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권익위'로 약칭하여 사용하도록 수정
- 제2조제4호에서 문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발생 시'를 '긴급상황이 발생하여'로 수정

제28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4.19.(월) 14:00 ~ 16:3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5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전 소관 국·과장 등 9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4건

심의·의결 사항 2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예규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수사이의사건 처리 규칙」에 규정된 ‘수사이의심 사위원회’에서 수사심사 관련 사항도 심의 가능하 도록 위원회 명칭·임무 등 개정	수정 의결	수사과
2	훈령	「수사인권관 운영 규칙」 제정안	수사경찰(총경 이하)의 공직기강 및 부서장의 지휘 권 확립과 수사사무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한 자체 운영 규칙을 제정	수정 의결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사항 보고	해양안전과
2	2021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계획 보고	

주요 토의 사항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 제2조제1호는 수사심의신청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므로 신청 주체인 ‘사건관계인’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수정
- 제2조제2호는 ‘경찰에 이첩된’ 의미가 육상 경찰에 이첩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찰’을 ‘해양경찰’로 수정
- 제2조제3호는 ‘본래사건’의 정의에서 ‘이의제기’란 제2조제1호의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의제기’를 규칙 전반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수사심의신청’으로 수정

- 제7조제1항의 '해양경찰관서'에는 해양경찰청이 포함되어 문장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접수 할 때는 상급 관서 수사과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
- 제9조제2항에서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을 한 개 조항에서 규정하도록 정리하고, 성별을 고려하는 부분은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하도록 수정
-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수사과오에 대한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되어있으므로 별지의 '수사과오 평가결과'의 최종 결재자를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규칙에 사용된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심사'를 '심의'로 수정

「수사인권관 운영 규칙」 제정안

- 제2조제2호는 '수사인권 활동'의 정의에 인권활동이라는 용어 정의에 적합하도록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 업무를 추가
- 제4조제5호에서 수사인권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인정하는 주체를 '수사인권관 선발위원회'로 명확히 표기하고, 조 본문 내용의 자격 사항과 어울리도록 '인정되는 사람'을 '인정될 것'으로 수정, 이에 따라, '수사인권관 선발위원회' 용어가 최초 사용되므로 해당 조항에서 '위원회'로 약칭
- 제12조 '누리집'은 홈페이지의 순우리말이며, 혼동의 소지가 없도록 온라인 주소(www.kcg.go.kr)를 함께 표기

제29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5.3.(월) 14:00 ~ 17:4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건 소관 국·과장 등 14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8건

심의·의결 사항 6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예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 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해양경찰 수사 부서 의 장' 채용에 관한 사항 마련	재상정	교육훈련 담당관
2	고시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패러세일 활동 특성을 고려한 정원기준 정비 및 법 령 개정 사항 반영,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전 반 자구수정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3	훈령 예규	「수사국 소관 행정 규칙(9개)」 일부개정안	수사국 출범(1.14.) 후 부서명칭("수사정보국" → "수사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수사국 소관 9개 행정규칙 일괄개정	원안 의결	수사기획과
4	훈령	「해양경찰청 방제 비축기지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방제비축기지의 관리 및 효율적 자원 보급, 방제기 술 교육·지원을 위해 방제비축기지에서 광역방제 지원센터로 변경 추진	수정 의결	방제기획과
5	고시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 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정안	해양경찰청 소속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구성 등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수정 의결	해양오염 예방과
6	계획	2021년도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추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대비 계획 수립	원안 의결	감사담당관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2021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수상레저과
2	책임수사 강화를 위한 수사 인력·조직 개선 기본계획	수사기획과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방제비축기지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제5조의2는 관할 해경서장이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탁 대상이 불명확하므로, 현재 대산·울산·광양 방제비축기지의 운영과 방제기자재 관리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 관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위탁 대상을 명확히 표기
- 제5조의4는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연간 유지보수 계획이 당해 연도계획인지, 다음 해 계획인지 명확히 표기하고 당해 연도 유지보수 결과도 함께 보고하도록 수정
- 제8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방제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로 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3항은 '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제8조제1항의 각호를 항으로 나누어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이 구분되도록 하고, 제8조제1항의 인계·인수서 및 서약서 작성 규정을 별도 항으로 구분하여 수정하고, 제2항의 '제1항제2호의'를 '제2항의'로 수정하고 제2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며, 제3항은 제5항을 신설하여 이동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정안

- 제2조제1항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수정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1항에서 '자격'이 아닌 '사람'을 각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
- 제2조제2항은 명예감시원의 위촉에 관한사항으로 제3조제1항·제2항과 중복되므로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조 제목을 본문 내용에 맞게 '명예감시원의 자격'으로 수정
- 제2조제2항의 삭제에 따라 제3조제2항의 약칭 용어 '민간단체'를 본래 용어인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로 표기하고 약칭 '민간단체'를 사용하도록 수정
- 제6조에서 문장의 문맥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만료되기 전에'를 '만료일 전에'로 수정하고, 위촉장(별지 제4호서식)에 위촉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위촉의 경우라도 위촉 기간 연장을 위한 재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문 후단을 삭제

제30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5.17.(월) 14:00 ~ 15:0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건 소관 국·과장 등 7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3건

심의·의결 사항 2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예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 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해양경찰 수사 부서 의 장' 채용에 관한 사항 마련	원안 의결	교육훈련 담당관
2	훈령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 시행규칙」 개정 사 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	수정 의결	운영지원과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5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 제4조제1항의 '소속기관'은 제2조제15호 정의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을 소속기관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제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경찰청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소속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제1호·제4호는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직책을 열거하였으나 단장, 대변인, 종합상황실장이 생략되어 이를 모두 포함하도록 수정
- 제5조제2항의 각호는 위원 및 간사뿐만 아니라 위원장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조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를 '위원회의 구성'으로 수정하고,

-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위원의 지명권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에 ‘위원장 지명하는’을 추가하여 수정
- 제5조제5항 보안심사위원회는 보안과 관련된 많은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 기구로서 가부 동수인 경우의 의결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회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규정하도록 수정
- 제7조제1항은 보안심사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임보안담당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6조의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안담당관의 임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안담당관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지 제1호 서식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이므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수정
- 제8조제2항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누구에게 재의하도록 지시해야 하는지 그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지시 대상을 ‘심의요구자’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

제31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6.8.(화) 10:30 ~ 12:1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전 소관 국·과장 등 9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6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해양경찰청) 범죄수사 규칙」 일부개정안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감독 및 보고를 해양경찰청에서 수사국장으로 변경 하고 자구 등을 수정	수정 의결	수사기획과
2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8년 개선된 해양경찰 복제의 제식 및 디자인(색상·재질)과 넥타이 착용 방법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한 규칙 개정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3	훈령	「특수직무경찰관 복제 규칙」 일부개정안	특수제복 착용 부서별 일부 제식, 재질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령 개정	수정 의결	
4	훈령	「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조직개편에 따른 무기·탄약고 주기별 점검자를 변경하고, 자구 수정 및 불명확한 문장, 용어 등을 정비	수정 의결	
5	훈령	「해양경찰청 진압장비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해상에서의 진압장비 적용 범위 및 함정 구분(경비 함정·특수함정 등)을 신설하고, 자구 수정 및 불명확한 용어 등 정비	수정 의결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6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안

- 제61조에서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 수사국장, 지방청장, 해경서장 등 3명 모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해양경찰청 수사국 소속 경찰관은 수사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수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제7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5호, 제12조제3항제7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및 별표 4에서 개선된 자수계급장은 폴리우레탄으로 제작되어 '자수(刺繡)' 의미에 부합하지 않고, 유사입법례와 같이 계급장을 복장별로 착용하는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므로, '금속계급장'은 '정장(正章)'으로, '자수계급장'은 '약장(略章)'으로, '어깨표장'은 '예장(禮章)'으로 수정하되, 복장을 규정하는 조문에는 예장(禮裝), 정장(正裝)과 혼동이 없도록 '계급장(정장)', '계급장(약장)', '계급장(예장)'으로 수정
- 제10조, 제12조제1항제7호, 제12조제3항제6호, 제13조제1항제6호, 제14조제1항제5호, 제15조제1항제4호 및 별표 6에서 '근무복 허리띠'는 근무복에만 착용하지 않고 예장, 약식예장, 정장, 기동복장 등 모든 복장에 착용하므로 별표 6의 '기동복 병행 활용'은 삭제하고, 명칭을 '허리띠'로 수정하여 조문에 일괄 반영하도록 수정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일부개정안

- 제2조제1항, 제2조제1항제1호~제10호, 제2조제2항 상위법령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서 특수복 착용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복명칭만으로도 착용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본문으로 수정하고, 조문이 다른 법령 및 규칙 간의 관계를 규정하므로 제목을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로 수정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 제11조제5항제1호·제2호의 '120분'을 '2시간'으로 간략히 표현하고, 제1호의 '단시간'은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2시간 미만'으로 수정하며, 제1호는 훈련을 위해 무기를 '출고'하는 절차를 규정하므로 '입고'를 삭제
- 제19조제1항은 부사 '즉시'와 동사 '회수하다'의 관계가 명확하도록 부사위치를 이동하여 '즉시 회수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무기·탄약의 회수기준이 모호하여 유사입법례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제2항을 참고하여 조문 수정
- 별지 제6호서식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서식의 설계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만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해양경찰청 진압장비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 제2조제5호 ‘진압장비 등’ 용어가 불명확하므로 ‘진압장비, 진압 및 보호장구, 진압용 채증장비’로 표기하고 약칭을 사용하도록 수정
- 제4조, 제4조제1호~제3호, 제5조제1항~제5항, 제8조 및 제10조에서 중복되는 조항의 정비와 조문의 간결성을 위해 제4조 제목을 ‘(진압장비 등의 구분)’, 제5조 제목을 ‘(진압장비 등의 보유기준)’으로 각각 수정하고, 각 항에 진압장비, 진압 및 보호장구, 진압용 채증장비의 종류와 보유기준을 명시하도록 수정
-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제6조제3항·제4항, 제9조 및 제11조 진압장비, 진압 및 보호장구, 진압용 채증장비 관리책임자가 동일하도록 ‘진압장비’를 ‘진압장비 등’으로 수정하고, 그에 대한 관리사항을 제2항 각호 및 제3항에서 규정하도록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 필요

제32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6.21.(월) 14:00 ~ 16:2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5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전 소관 국·과장 등 9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6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대령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공포 (4.13.)에 따라 법 시행 시기(10.13)에 맞춰 법률 상 위임사항 등 정비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2	부령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수정 의결	
3	대령	「수상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수상구조법」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법제기관의 권고를 이행하는 한편,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자체 발굴사항을 반영한 하위법령 정비	수정 의결	수색구조과
4	부령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수정 의결	
5	예규	「위험·유해물질 사고 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일부개정안	화학사고 대응 장비·자재 확보목표 확대, 장비 신규도입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운용 규정 정비	수정 의결	기동방제과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연구센터 발전방안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주요 토의 사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6항에서 각급 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당연직 및 추천직 위원이 아닌 경우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확히 표기
- 제3조제6항 및 제4조제8항 법령 내 각급협의회 회의의 소집 및 의사·의결정족수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없으므로 제3조의3, 제4조의3을 각각 신설하여 규정하고, 제3조제6항 및 제4조제8항의 간사에 대한 규정은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이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신설조문에 추가
- 제3조의2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은 각급협의회 외부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을 각각 ‘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과 ‘광역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으로 수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제6조제5항제2호는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목의 중복되는 문구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해당 문구를 인용하는 제7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인정’을 ‘위촉’으로 수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제8조에서 구난작업 신고서를 여러 곳에 제출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으므로, 표현방법을 변경하여 의미가 명확하도록 수정

「위험·유해 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운용 규칙」 일부개정안

- ‘해양경찰청 업무포탈에 게재된 사고대응장비 등의 사용방법’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어 해당 문구가 불필요하므로 삭제

제33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7.5.(월) 14:45 ~ 17:0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7명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건 소관 국·과장 등 9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11건

심의·의결 사항 8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훈령	「해양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국제업무약정심의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미비점 보완	수정 의결	국제협력과
2	예규	「해양경찰청 외국함정 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의 운영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수정하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함정을 포함하여 현행화	수정 의결	
3	예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의 영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영문직제 재정비 추진	수정 의결	
4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총액인건비제 개정 및 계 단위 부서 명칭변경, 경 찰서 간 관할구역 일부조정 및 하부조직 설치기준 개정, 직제부터 사무분장·위임전결규칙의 기능별 사무내용 세분화·구체화	수정 의결	혁 신 행 정 법무담당관
5	훈령	「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		수정 의결	
6	훈령	「해양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안	총액인건비제 개정 및 계 단위 부서 명칭변경, 경 찰서 간 관할구역 일부조정 및 하부조직 설치기준 개정, 직제부터 사무분장·위임전결규칙의 기능별 사무내용 세분화·구체화	원안 의결	
7	훈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수정 의결	
8	훈령	「해양경찰청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고객만족도 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조사의 종류를 명문화한 규칙 마련	재상정 의 결	

보고 사항 3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7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2/4분기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추진현황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3	국민청원 관련 진상 및 재발방지대책	감사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제7조제3항에서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르면 ‘간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의사·의결정족수 다음 순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여, 제7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이동하고, 기존 제8조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수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제5조에서 문장 부호 사용이 어색하므로 ‘EDUCATION-TRAINING’을 각각 문구에 맞게 ‘EDUCATION, TRAINING’과 ‘EDUCATION AND TRAINING’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39호 ‘ICT’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정보통신기술)의 약어이며, 조직 영문표기에 약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고 약어를 병기하는 것이 의미 전달이 명확하므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ICT) MANAGEMENT DIVISION’으로 수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통상 ‘PSI’로 표기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과 통일된 용어 사용을 위해 ‘WMD-PSI’를 ‘PSI’로 수정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 제15조제3호나목 및 마목 동일한 규칙 내에서 타 부서 사무는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규칙 등 제·개정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타 기관과의 협력 역시 관련 분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드론 분야’를 규정에 삽입하여 구체적인 분야 특정하여 수정

→ 제28조제1호사목 국제협력과 사무 중 제28조제1호사목의 ‘성과관리, 통계관리 등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은 자목의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어 수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제2조, 제3조 및 제3조제1호 ~ 제7호에서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규정의 순서는 ① ‘목적’, ② ‘정의’, ③ ‘적용범위’, ④ ‘다른 훈령·예규 등과의 관계’이므로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와 제3조(정의)의 조문 순서를 변경하여 수정

「해양경찰청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제2조제2호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대내외적 정책에 대한 정책수혜자’는 제2조제1호에서 고객으로 정의하였으므로 ‘고객’으로 수정 필요
- 제16조제3항 고객만족도 조사의 종류 중 안 제4조제1항제4호 ‘정책모니터링’의 ‘정책의 목적 달성 여부’와 ‘정책 실효성’은 주요정책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정책 ‘시행 이전’에 조사하는 항목인 ‘정책의 방향성’ 추가하고 시행 전과 시행 후를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수정
- 제7조 ‘자료의 보존’에 대한 유사 입법례인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해경청 훈령)을 참고하여 조사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조문 신설

제34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7.19.(월) 14:00 ~ 16:5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건 소관 국·과장 등 10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7건

심의·의결 사항 6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훈령	「수사경찰 인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수사부서장의 인사 추천 범위 명확화 및 수사 조사 간부 선발, 수사경과 유효기간 변경(5년) 등 인력 관리 효율화 방안 반영	수정 의결	수사기획과
2	훈령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을 위한 수사경과 부여 및 교육·인력(선발인원 등) 내용반영, 초동조치 우수 전담요원에게 표창 등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신설	수정 의결	
3	훈령	「형사기동정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형사기동정을 수사과 소속 형사2계로 개편함에 따 라, 임무·근무지침 등을 개정	수정 의결	형사과
4	훈령	「변사사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유족 등에게 2차 자살예방 등을 위한 국가지원정 보 제공을 제도화하는 등 개정	수정 의결	
5	훈령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전부개정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과 과학수 사관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신설, 감정 결과 신뢰성 제고 및 해양과학수사 특성화 기법 현 행화	수정 의결	과학수사과
6	훈령	「해양경찰 정보 경찰 활동규칙」 전부개정안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 칙상 미진한 부분을 개선 보완	수정 의결	정보과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수사국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수사기획과

주요 토의 사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 제5조제3항은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소속 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속 부서의 장’을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수사 부서의 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00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수정
- 제10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은 선발의 원칙보다는 선발의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을 ‘(선발의 방식)’으로 수정
- 제8조에서 수사경력자가 부족한 해양경찰관서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수사 부서의 과장·계장으로 보직할 경우 해당 관서의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구체적으로 표기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 제12조에서 같은 조 내 불필요한 조문 인용으로 문맥이 어색하므로, 인용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수사경과를 부여 선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에 맞게 ‘제13조제2항’으로 수정

「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제2조제2호의 형사기동정장 보직에 관한 부분은 제6조 ‘보직기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기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순차적으로 뒤 조항으로 이동하며, 기존 제6조제1항의 ‘형사기동정 직원’은 각호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형사2계 직원’으로 수정
- 제13조제1항 주어진 ‘형사2계장’과 술어인 ‘피향해야 한다’의 관계가 어색하고, 목적어가 생략되어 문장이 불명확하므로, 목적어 ‘형사기동정’을 추가하여 ‘형사기동정을 안전해역으로 피향시켜야 한다’로 수정
- 제15조는 훈련 등 필요시 착용할 수 있는 복장에 대한 근거를 ‘관련 규정’으로 표기하여 불명확하므로, 해양경찰청 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 제2조제7호의 ‘과학수사요원’은 관련 규칙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서 정의한 ‘과학수사관’과 대상이 같지만, 용어 및 정의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되어있어,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서 정의한 ‘과학수사관’과 용어와 의미가 일치하도록 수정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전부개정안

- 제9조제1항 및 제3호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제3호의 ‘사안에 대해 심의가 필요할 때’를 ‘사안에 대한 심의’로 수정하고, 제1항의 ‘결정’을 ‘심의·결정’으로 수정

- 제12조제2호다목은 사건 현장의 보존을 위해 시설물이나 물건의 위치, 상태 등을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시설물 또는 물건의 위치, 상태 등을 변형시키기 전에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고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미가 배치되므로, 현장보존 중이라도 증거물을 수집·채취해야 할 경우 전후의 상황을 촬영하고 기록하도록 조문 수정
- 제30조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피검사자가 불복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후단을 신설하여 변호인 참여 제한에 대해 준항고 제기가 가능함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

제35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8.2.(월) 14:00 ~ 14:4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전 소관 국·과장 등 6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3건

심의·의결 사항 1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국민만족도 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조사의 종류를 명문화한 규칙 마련	수정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8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현황	교육훈련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제1조 '해양경찰청'과 '국민만족도' 사이에 '실시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문맥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에 필요한 부분만을 규정하는 한정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제명과 같이 포괄적 의미의 '조사에 관한'으로 수정
- 제4조제1항제1호 조문 내 '신고', '민원' 및 '신청'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신고하거나 민원 등을 제기한 국민에 대해'로 수정
- 제5조제5항제2호 '부대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중복용어를 삭제하고 문구를 간결하게 '부대시설 및 그 시설'로 수정

제36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8.17.(월) 10:30 ~ 12:0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전 소관 국·과장 등 10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5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21년 소요정원 검토 결과에 따른 하반기 정원(+92명) 배정으로 현장인력 보강	원안의결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2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의결	
3	대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제시설 기술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제통신의 보존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기술개발 절차·활용·인력양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수정의결	해상교통 관제과
4	부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대학·고교 등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5급 향해사 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선박교통관제사 자격기준으로 인정	원안의결	
5	훈령	「바다 의인상 규칙」 일부개정안	구조안전에 헌신한 민간인 포상을 위해 운영 중인 바다의인상('17년 신설)에 대해 법률 개정사항 반영, 위상제고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수정의결	수색구조과

주요 토의 사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제12조 조 제목 '기술개발의 추진·지원 등'과 상위법령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같이 추진에 필요한 사항(제2항~제5항)과 예산지원(제1항) 순으로 항의 순서를 조정하여 제12조제1항은 제5항으로 이동하고 기존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동

- 이에 따라, 제12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은 상위법령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법 제23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3항의 '제2항'은 '제1항'으로 수정
- 또한, 제12조제2항은 기술개발 추진 시 세부계획을 임의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기술개발은 업무의 중요도가 높고 예산지원도 수반되므로 의무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어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해야 한다'로 수정

「바다 의인상 규칙」 일부개정안

- 제1조, 제2조제1호·제2호, [별표 2] 및 [별표 3] '의인'은 유사입법례인 「119의인상 운영 규정」에서 정의한 용어와 중복되고, 범위가 해양에서의 구조·안전업무로 한정되므로, '의인'을 '바다의 의인'으로 수정하고, 규칙 내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수정하고, 수여대상자의 공적에 따라 상장·상패의 문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목에 '예시' 문구 추가
- 제5조제1호·제2호 수여대상 기준의 조난·재난 사고유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명확히 하고, 직접적인 구조나 사고 예방에 대한 공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1호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방지에 대한 표현이 어색하므로 '위험의 발생'으로 수정
- 제5조제1호 및 2호에서 수여대상 기준의 조난·재난 사고유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명확히 하고, 직접적인 구조나 사고 예방에 대한 공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1호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방지에 대한 표현이 어색하므로 '위험의 발생'으로 수정
- 제8조제2항은 위원장이 제4항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권고 방식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위원수 증원(7→9명) 및 외부위원 비중상향(3→7명)과 외부위원 중 위원장 선출을 통해 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정
- 제8조제3항은 외부위원의 위촉기준과 임기에 대한 규정이 생략되어 제4항에서 위원 구성 기준과 외부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8조제5항의 위원의 해촉 등 규정은 위원 임기(1년), 포상주기(연 1회) 등 고려 시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기존 제4항의 위원회 소집 및 의사·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일반적인 법문 표현에 맞도록 수정하여 제5항으로 이동

제37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사·장소

'21.9.6.(월) 14:00 ~ 15:4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전 소관 국·과장 등 10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7건

심의·의결 사항 4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해수산업 고교 대상 우수인재 경력채용 근거 마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근속승진 우대, 직위해제에 따른 승진 소요 연수 산정 개선조항 마련 등	수정의결	인사·교육 훈련담당관
2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채용시험 진행 시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과도한 제출을 방지, 체력검사 종목 중 약력측정 과락규정을 추가하여 체력능력 미달자 배제 규정 신설	원안의결	
3	훈령	「해양오염방지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규칙」 일부개정안	일반직 VTS 센터장의 통솔력과 지휘권 강화의 일환으로 지휘관표장 패용 추진	수정의결	해상교통 관제과
4	예규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내구연한을 초과한 함정과 사고 및 심각한 장비손상 등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불량한 함정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수정의결	장비관리과

보고 사항 3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9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2022년 예산(안) 편성 결과보고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법제처 심사결과	교육훈련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2항 각 호는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각각의 비율을 의미하지만, 조문 내용은 각각의 시험에서 획득한 성적의 비율로 잘못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안

- 제5조는 제목을 착용할 때 갖춰야 할 차림새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을 ‘제복의 차림’으로 수정하고, 제6조 및 제7조 제목의 ‘제식’은 정해진 양식을 뜻하므로 조 제목을 내용에 부합하도록 ‘~요원의 제복 착용’으로 수정
- 제5조제1호의 근무복 차림새 중 넥타이, 넥타이핀은 평상시 착용하지 않고 공식행사 등에 한정하여 착용하고 있으므로, 개정 중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착용하도록 수정
- 제7조제1호의 ‘평상의 업무를 수행할 때’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과 같이 ‘평상시 근무할 때’로 수정하고, 해상교통관제요원이 행사에 참석 할 경우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수정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 제2조제9호의 비파괴검사에 관한 법령을 인용하여 비파괴평가에 대한 종류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
- 제9조제2항의 외부위원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수정하고, 제9조4항의 내부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격을 높이도록 수정
- [별표 6] 각 분야별 등급점수에 따른 안전도 평가의 최종등급에 대한 산출 방법이 불명확하므로, 각 표에 제목과 산출 방법 등을 추가하여 최종등급의 판정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제38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10.5.(월) 10:30 ~ 11:3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전 소관 국·과장 등 8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5건

심의·의결 사항 2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예규	행정규칙 일몰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안 (훈령 67, 예규 25)	「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7조제4항에 따라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 조문 삭제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 법무담당관
2	고시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유처리제 유동점 검정 판정 기준의 완화 및 유흡착제 검정 시료발체 기준 명확화를 통해 업무 수행 중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함	원안 의결	해양오염 예방과

보고 사항 3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2022년 소요정원 요구 정부(안) 결과 보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2	10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3	3/4분기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추진상황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일부개정안

- [별표 1~3]의 자재·약제의 검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을 규정하는 문구가 불명확하므로, 위원 의견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 의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현저한’, ‘쉽게’, ‘충분히’, ‘크게’ 문구는 불명확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치나 범위 값을 표시하는 등 명확한 기준 필요
- 제4조의 각 호에 명시된 한국산업표준(KS),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검토 필요
- 1,000kg마다 1개의 시료를 발체하여 검사하는 유흡착제 흡유량 시험 등은 1,000kg 미만일 때 검사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전체의 일부분(%)에 대한 시료를 발체하여 검사하도록 기준 개선 필요

제39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10.18.(월) 14:00 ~ 16:1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전 소관 국·과장 등 8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5건

심의·의결 사항 3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예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①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및 ②성 비위 피해자 등에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③성 폭력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도록 개정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2	훈령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청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 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수정 의결	
3	예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상벌상계제 실시 규칙」 폐지안	이 규칙에 포함된 상벌평점기준표 등은 '승진업무 처리지침' 및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칙」과 중첩되어 폐지하려는 것임	원안 의결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 프로젝트	혁신행정부무담당관
2	해양경찰청 고소·고발사건 반력 현황 및 대책	수사과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별표 1] <비고>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일반적인 법문 표현에 맞게 목단위 명칭에서 온점을 삭제하고, 개정안에 추가되는 2가지 의무 위반행위 유형에서 '2차 피해' 용어는 관련 법률의 정의를 인용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나, '피해자 등',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없어 불명확하므로, 상위 규정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정의를 참고하여 <비고> 제6호 및 제7호에서 보다 명확히 정의하도록 수정
- [별표 6], [별표 7] 표의 공란은 잘못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없음'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공란에 줄표 '-' 표기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제명, 제2조제2호·제3호, 제4조, 제5조제목·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제1호 '내부공익신고센터' 명칭은 물리적 조직체로 오해할 수 있어,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신고접수시스템이므로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로 수정
- 제2조제1호~제3호 및 제5조제1항 규칙 내 여러 조문에서 '부패행위'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있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근거로 하여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기존 제1호~제3호를 뒷호로 이동
-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의 '콘텐츠'는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내부공익센터'를 '콘텐츠'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안 제2조제1호의 '콘텐츠'는 '시스템'으로, 안 제5조제1항의 '콘텐츠'는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로 수정하고, 제2조제3호는 불필요하므로 삭제
- 제2조제2호는 '신고한 공무원' 문구가 중복되므로,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여 간결하게 수정
- 제7조제2항 신고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신고사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명확하게 규정
- 제8조제1항 및 제3항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과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는 모두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전담책임관'을 의미하므로 '전담책임관'으로 수정
- 제11조제1항의 '표창 추천'에 대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내부공익신고자 대상의 '포상심의위원회' 명칭을 다른 포상심의위원회와 명확히 구분하도록 '내부공익포상심의위원회'로 변경

제40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11.1.(월) 14:00 ~ 15:1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전 소관 국·과장 등 8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5건

심의·의결 사항 3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대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경찰장비법」 제정('21.4.13)에 따라 법 적기 시행('22.4.14)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안전도 평가 등 법에서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정 의결	장비기획과
2	부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경찰장비법」에서 위임된 착·중도금 지급기준, 중요탑재장비 선정 절차, 해양경찰장비의 기록·관리, 경광등 설치 기준 등을 규정	수정 의결	
3	부령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및 「수상구조법 시행규칙」의 규제조문 7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지정하는 조문 신설	원안 의결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11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21년도 국정감사 주요지적 사항 보고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제3조제2항의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은 법 제4조제4항에 동일한 문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
- 제5조제2호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안 제3조에서 기본계획으로 약칭하였으므로 '기본계획'으로 수정하고, 동일한 사유로 제정안 제5조제3호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
-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6호에 '그 밖에'를 추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규정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
- 제8조제1항의 '각호의 하나에'는 일반적인 법문표현에 맞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제1호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이므로 삭제
-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와 취소하는 경우에 고시하는 방법이 서로 상이하므로,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동일한 문구로 수정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제2조제1호~제3호 및 제5조제1항 '기성대가', '납품대가', '기납대가'는 이해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법문에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로 수정
-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요탐재장비'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약칭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안 제4조제1항에서 '함정·항공기 도입 시 장비의 성능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탐재장비'를 '중요탐재장비'로 약칭하도록 수정

제41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11.15.(월) 14:50 ~ 16:4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6명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건 소관 국·과장 등 8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4건

심의·의결 사항 4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양 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 → '해양정책관',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 '수사국장', '국제정보국장'으로 직제 명칭 수정 반영	원안 의결	기획재정 담당관
2	예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해경청의 총원·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 분야 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규칙 제정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
3	훈령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해경청에서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를 위하여 사전점검표 신설, 관리체계 명문화,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규칙 개정	원안 의결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4	훈령	「해양경찰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규칙」 전부개정안	성희롱·성폭력과 동일하게 2차 피해도 예방 및 구제 범위에 포함하고, 해경청 및 소속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건처리 일원화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수정 의결	양성평등 정책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제4조제2항은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불명확하므로, 인력관리의 주체인 '해양경찰청장'을 표기하여 의미가 명확하도록 수정하고, 제5조제1항에서 사용한 약칭 '청장'을 해당조항에서 사용하도록 수정

-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에서 각 조 제1항은 각 계획의 수립주체가 불명확하므로, 각 계획의 주체인 '인사부서장' 또는 '채용부서장' 등을 표기하여 명확히 하고, 제2항의 주요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립 목적을 간결하게 수정
- 각 조 제2항은 일반적인 법문 표현에 맞게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
- 제13조제1항은 다른 조와 동일한 구조가 되도록 목적만 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수립 일정 등을 규정하도록 수정

「해양경찰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규칙」 전부개정안

- 제2조제3호에서 '2차 피해' 용어는 '~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정의된 용어가 조문에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수정
- 제12조제1항 고충상담원이 소수인 경우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수정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및 해설」(‘21.6.2.)에서 권고하는 2차 피해에 대한 외부위원 구성 기준을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

제42회 임시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12.2.(목) 19:40 ~ 21:2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위원 등 7명

해 양 경 찰 청 해양경찰청장 후보자, 기획조정관 등 5명

해 양 수 산 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 상정안건

1건

심의·의결 사항 1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동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정 동의안		원안 의결	해양수산부

주요 질의·발언요지

위원	주요 질의·당부사항
박 찬 호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자랑할 만한 일 □ 주변국의 공세적 활동에 대한 해경의 대책 및 전력 증강 방안 □ 해양경찰교육원장 직급 상향 필요성에 대한 생각
함 혜 리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장이 된 후 가장 먼저 신경 쓸 부분 □ 해상 근무 요원의 안전강화 방안
김 효 선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중 꼭 이루었으면 하는 한 가지 □ 직원의 사기 증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복지대책 □ 해양경찰교육원 제2캠퍼스 설립취지와 계획 □ 성평등 및 세대별 갈등 해소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개혁방안
이 은 방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해양치안환경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연구원 설립 등 R&D 정책에 대한 생각 □ 경험해보지 않은 재난적 해양사고(HNS 등)에 대한 대책 □ 선박사고에서 입체적인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위한 생각이나 철학 등 □ 해양과 연안에서 인명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
윤 석 희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미래발전계획에 따른 조직운영 방향 □ 인천 종간소를 휴기난동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전문성 있는 현장대응을 위한 대책 □ 조직 내 다양한 출신의 인력 운영방안
남 상 옥 총무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수사의 차이 □ 수사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생각 □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 관련 여수시에 사전 설명 여부 □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 관련 신임 등 교육과정 지장 여부
사공영진 위 원 장	<p>〈당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점 점검과 개선 필요 □ 조직전체 사기진작을 위해 청장 자신의 자긍심 필요 □ 국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스마트한 해경을 위해 현장과 소통 필요

제43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12.6.(월) 14:00 ~ 14:5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국·과장 등 7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5건

심의·의결 사항 4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데이터 전담인력 증원 및 총액인건비 활용 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책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국 기능 재조정 및 수사과에서 수사심사과로 명칭 변경, 복수승조·상황실·항공단 신규인력 평가기간 연장	원안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2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의결	
3	훈령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해경청 조직개편 및 구조본부 비상단계 개선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각급 구조본부의 근무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운영 훈령 정비	수정의결	수색구조과
4	고시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해상구조조정본부(RCC) 사무규정을 신설하여 RCC의 임무를 명시하고, 해경청 조직개편에 따른 선위통보 수신처 현행화 등을 위한 개정	원안의결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12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 제15조제2항은 선발된 운영요원이 전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대체요원 선발을 위한 행정이 불필요하게 반복되므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속부서장이 수색구조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고 대체인력을 정하여 통보하도록 수정

제44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12.20.(월) 14:00 ~ 15:1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국·과장 등 9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9건

심의·의결 사항 8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지방청 채용자(17년~) 교류인사 근거 마련, 외국어·장비 등 직별 신설 등 그간의 개선 필요사항 개정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
2	훈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상위위법인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21.1.1.)에 따라 근거 조문 일부조항 개정	원안 의결	
3	훈령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 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해 2년간 평균 육아휴직 범위(253명) 내로 별도정원을 운영하도록 개정	원안 의결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4	정책	「'23~'37 해양경찰 장비증강목표 기획서」 개정안	국·내외 해양 환경과 치안수요 변화를 고려, 다양한 해양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장비증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장비증강 목표기획서 개정	원안 의결	장비기획과
5	고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선박교통관제구역 출입신고 간소화, 도선사 승하선 관제통신 방법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수정 의결	해상교통 관제과
6	훈령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며, 직원사무 명시, 교대근무 방법 등을 보완	수정 의결	
7	훈령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절별 관제시설 점검, 점검결과와 전산입력 등 필요사항을 보완	원안 의결	
8	훈령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현장직무교육 강사 교육 이수 자격기준을 상향하고, 현장직무교육에 대한 평가 요건을 추가하는 등 교육 체계를 정비	수정 의결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2022년도 국회 예산심사 결과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 제8조제4항은 국장급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회 간사를 지명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간사를 맡는 것이 적합하므로, '인사운영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수정
- 제10조제1항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제2항에서 임명권자의 근거 조항으로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제1항에 따른 국장 또는 과장'을 '추천위원회의 소속 국장 또는 과장'으로 수정하여 임명권자를 명확히 하고, 이를 '국장 등'으로 약칭하여 다른 조항에서 간결하게 표현하도록 수정 필요
- 제24조제5항은 5급 일반직공무원이 소속기관 내 연속 근무가 가능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나, 단서조항에서 원칙과 동일하게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예외적 사항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해상교통관제 분야 5급이 소속기관 내 해상교통관제센터별로 각각 3년 이내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수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제9조 및 제9조제2호에서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속력뿐만 아니라 지정된 항로와 항법도 예외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2호의 관련문구는 삭제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제2조제10호는 관제팀장을 정의하면서 그 자격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간결하게 정의하기 위해 관제팀장의 자격을 별도 조문(제16조)을 신설하여 분리하고 기존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는 순차적으로 다음 조항으로 이동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제6조제4항의 현장점검은 관제사 교육 실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장이 하고, 위원회는 해양경찰청장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전문교육기관 지정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하도록 수정하고, 제7조제1항에서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수정하고, 제3항은 해양경찰청장이 현장점검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수정

제45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1. 3.(월) 14:00 ~ 15:4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1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9건

심의·의결 사항 6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정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절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훈령 제정	수정 의결	운영지원과
2	계획	2022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시행계획(안)	복지 5개년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위험하고 열악한 직무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질적 복지향상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해양경찰 조성	원안 의결	
3	훈령	「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	양성평등정책팀과 해양치안빅데이터팀 신설 사무를 반영하고, 수사국 개편에 따른 수사심사와 변경 등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22년 상반기 조직 관련 행정규칙 개정	수정 의결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4	훈령	「해양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안		수정 의결	
5	훈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수정 의결	
6	훈령	「해양경찰청 항공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지속적인 일부개정으로 약화된 체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조·항 재편성 및 신형헬기 도입, 직제 개편 등 항공기 운용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신규 반영	수정 의결	항공과

보고 사항 3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1월 주요업무 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2021년 해양경찰위원회 운영 결과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3	2022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침	수상레저과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정안

- 제6조는 청사시설 안전점검의 종류와 시기만 규정하고 안전점검 시 점검내용과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점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조문 신설
- 제15조 본문은 회의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목의 ‘제재’를 ‘제한’으로 수정
- 제16조 및 제17조는 모두 ‘체력단련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2개 조를 1개 조(제16조)로 병합하고, 기존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순차적으로 앞 조로 이동
- 청사 내 총별 안내도 및 사무실 안내 표지판을 정기 점검을 통해 필요시 일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 제21조제2항은 공사 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시설관리관이 설계변경에 따라 필요한 서류만 요청하도록 수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제14조 해양경찰서의 등급 결정은 별표 3을 기준으로 하되, 각 해역별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전부개정안

- 제2조제31호 ‘기술유지’ 용어를 ‘행위’로 정의하기에 부적절하므로 ‘것’으로 수정별지 제7호서식 일반적인 법령 및 행정규칙 표기법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명을 문장부호와 함께 명확하게 표기
- 별지 제10호 및 제13호서식의 불필요 문구를 삭제하고, ‘해양경찰청장’을 직제 영문표기법에 맞게 ‘COMMISSIONER GENERAL’로 수정

제46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1. 17.(월) 14:00 ~ 16:1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12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11건

심의·의결 사항 9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원 및 사무 조정 등을 반영한 개정	원안의결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2	예규	「해양경찰 현장 운영규칙」 제정안	新현장 제정('21.1)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현장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현장가치 구현과 담당하고 멋진 해양경찰을 만들기 위한	수정의결	
3	훈령	「해양경찰청 법제 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법령 제·개정 시 위원회 심의 시기변경, 행정규칙 일몰제 심사 관리 도입 등 환경 변화를 규칙에 반영	재상정의결 *	
4	훈령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효율적인 구조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개선 정책 반영 및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	원안의결	수색구조과
5	계획	2022년 수난대비 집행계획(안)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5년 단위)인 수난대비기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해 매년 집행 계획을 수립	원안의결	
6	계획	2022년 연안사고예방 시행계획(안)	「연안사고예방법」 제7조에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21년도 연안사고 및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연안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22년도 주요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함	수정의결	해양안전과
7	계획	2022년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안)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1~'25)에 따른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2022년(2차년)도 시행계획	원안의결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단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8	계획	2022년 교육훈련계획(안)	신임·기본·전문 과정을 개선하고, 주요보직역량강화·미래전략기술과 스마트 해양경찰 등 필요한 교육과정을 신설	원안 의결	교육훈련 담당관
9	계획	2022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안)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21~’25)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2022년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안)』 마련	원안 의결	해상교통 관제과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2022년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소속기관 현장소통 결과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 현장 운영규칙」 제정안

- 제3조제1항의 「해양경찰법」상 임무와 연계된 바람직한 해양경찰의 모습과 제2항의 ‘바람직한 해양경찰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완수’ 문구는 내용이 중복되고 표현이 모호하며 현장의 대내적인 가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
- 제3조제2항의 ‘임무’는 해양경찰 임무와 관련된 법령인 「해양경찰법」 제2조 및 제14조를 명시하여 수정하고, ‘~에 대한’ 문구의 반복 사용으로 문맥이 어색하므로, ‘대국민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서 ‘~에 대한’을 삭제하고 ‘대국민 정책 수용성’으로 수정
- 제6조제2항 및 별표 3의 ‘게시대상 및 장소’는 의미가 어색하므로 ‘게시장소’로 수정하고, 별표 3의 제목 칸은 불필요하여 삭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 ‘제8조(법령안에 대한 자체 심사)’ 관련, 법령안에 대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자체 심사 시 ‘법령심사위원회(가칭)’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제15조제2항의 웹 주소 표기 시 ‘https://’를 추가하여 전체 주소를 명시

→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는 관련 근거조문이 없어 활용목적이 불명확하므로, 필요성 검토 필요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 규칙 내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에 관한 규정사항 외 구조직별 전체에 관한사항은 별도 행정규칙을 마련하여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방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구조직별 경찰관 체력측정 관련, 여성 경찰관의 연령별 점수기준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2022년 연안사고예방 시행계획(안)

→ 비전의 '국민이 행복한'은 문맥상 의미가 모호하므로 삭제하고, 목표 수치를 '10%'에서 '10% 이상'으로 수정

제47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2. 7.(월) 14:00 ~ 14:5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과장 등 7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5건

심의·의결 사항 4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훈령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상위 법률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신설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과 불일치 조문은 정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절차 마련	수정 의결	스 마 트 해양경찰 추진단
2	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사천해양경찰서와 그 하부조직에 장비관리운영팀 신설, 동해청장(경무관→치안감) 등 주요 직위 부서장 직급 상향(84명) 및 본청(+8명)·소속기관(+263명)의 인력 증원 내용을 법령에 반영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3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4	예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2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 제5조 및 제6항제3항에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각급 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외부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업별심의위원회는 사업별로 구성되는 위원회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
- 또한, 안 제5조는 총괄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 소집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정족수 등을 규정하는 조항 앞에 위원장이 필요할 때 회의를 소집하도록 조항 신설
- 제34조 및 제35조는 기술료 등의 '감면'과 '납부 유예' 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라 '납부 유예', '감면'의 순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제34조를 제35조로, 제35조를 제34조로 수정
-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의 '기술료 감면·유예'의 '유예'는 '기술료 납부유예'를 의미하므로,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기술료 감면·납부유예'로 수정
- 제34조제3항의 '산업위기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의한 용어에 맞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수정하고, '소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대상 용어이므로 '~에 있는'으로 수정

제48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2. 21.(월) 11:00 ~ 11:5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건 소관 국·과장 등 10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2건

심의·의결 사항 2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해양경찰청) 수중 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해양 특성화 과학수사 분야인 수중과학수사에 대한 수중감식관의 전문성 향상, 감식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통일된 절차 마련 등을 위한 규칙 제정	수정의결	과학수사과
2	훈령	「해양경찰 함정 보급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기존 함정에 한정되어 있던 정수물품 관리 규정을 파출소·구조대·항공대 등 현장부서 전체로 확대하고 물품정수표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	수정의결	장비관리과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제4조는 수중감식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보유 인력 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장비 보유 상황에 따라서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비에 대한 개념도 포함하여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보유 인력'을 '보유 자원'으로 수정
- 제4조제2호는 '주간'의 뜻이 불명확하므로,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내용을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
-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항은 수중감식결과보고서 서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5호의 내용은 본문에 추가하되 문장이 간결하도록 본문을 2개의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
- 규칙은 수중과학수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항 또한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에 대한 규정이므로 점검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제18조제5항 '과학수사장비'를 '수중과학수사 장비'로 수정
-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에는 대·중·소로 구분된 장비의 분류항목을 기재하게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없어 불명확하므로, 서식 하단에 '비고'를 추가하여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의 수중과학수사 장비에 대한 분류 기준에 맞게 기재하도록 수정

「해양경찰 합정 보급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 제6조제4항 '정수물품 운영위원회'는 내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 자문을 위한 외부위원 위촉은 불필요하므로 관련 조항 삭제
- 제13조 정수물품 지도점검의 실시 주체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었으므로 제2항 본문에 추가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행정지원팀장)도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제49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3. 7.(월) 14:00 ~ 15:1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조정관, 안전 소관 국·과장 등 9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3건

심의·의결 사항 2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고시	「학교에서의 선박교통 관계 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 에 위임된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 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	수정 의결	해상교통 관 제 과
2	대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에 신종 수상레저활동인 웨이크서핑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3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계 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교육 분야별 일반과목과 필수과목에 대한 이수 기준이 서로 중복되어 불명확하므로 제1호와 제2호를 병합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제2호로 이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별표7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파도를 생성하는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파도를 생성하는 기구’를 ‘웨이크 서핑보트’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웨이크서핑보트’를 해당 기구의 예시로 활용하도록 수정

제50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3. 21.(월) 14:00 ~ 15:1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조정관, 안건 소관 국·과장 등 11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3건

심의·의결 사항 1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해양오염물질 분석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청 조직 개편에 따른 분석기관 변경 등 운영 규칙 일부 개정	수정 의결	해양오염 예방과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경비함정 「색터 관리제」 운영계획	경비과
2	해양경찰 취약해역 종합안전망 구축 계획	해양안전과

주요 토의 사항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 제6조는 해양경찰서장이 관할 분석기관에 시료에 대한 '감식'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 내 '분석'은 해양오염물질 시료에 대한 '시험'과 '감식'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9조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의뢰에 대한 결과로 '분석결과' 및 '분석 결과서'로 각각 표기하고 있으므로, 제6조 제목 및 제1항·제2항과 제7조제1항의 '감식'을 시료의 '시험'과 '감식'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분석'으로 수정

제7조제2항은 시료의 '시험'에 대한 규정이므로, 제1호의 '분석조건'은 '시험조건'으로, 제3호의 '분석결과'는 '시험결과'로 각각 수정

→ 규칙 내 '안전교육'과 '분석안전교육' 용어를 혼용하여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안전교육'을 제12조제1호, [별표 4] 제목, [별지 제6호서식] 제목과 같이 '분석안전교육'으로 수정

경비합정 「섹터관리제」 운영 계획

→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정책추진이며, 부서단위 인센티브 및 향후 관련 훈령 제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해양경찰 취약해역 종합안전망 구축 계획

→ 민간협력을 통해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수집과 취약해역 등급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비자원 배치 방안 등 검토 필요

제51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4. 4.(월) 14:00 ~ 15:0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조정관, 안건 소관 국·과장 등 7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4건

심의·의결 사항 2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훈령	「어로보호협의회 규칙」 전부개정안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에 따라 조업보호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법령과 관련 용어(어로→조업)의 변경 및 협의회 위원 구성과 운영방법의 구체화 등 전체 조문 수정	수정 의결	경비과
2	훈령	「통합방위 작전태세 점검 규칙」 전부개정안	통합방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성을 유지하고 훈련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명의 수정 및 점검 주관기관과 수검기관, 점검 방법, 용어 등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여 전체 조문 수정	수정 의결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4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2022년 1/4분기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추진상황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어로보호협의회」 전부개정안

→ 제2조제2항제2호의 '조업질서 및 조업안전 유지를 위한' 문구는 같은 조 제1항의 조업보호협의회 설치 목적과 중복되어 불필요하므로 삭제

-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위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을 광의(廣義)로 정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에 군(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군의 기관을 포함하는 용어로 ‘행정기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공공기관위원’을 ‘행정기관위원’으로 수정

「통합방위 작전태세 점검 규칙」 전부개정안

- 제4조제4항은 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수검기관에 대한 점검 주관기관의 연 1회 정기점검을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점검’이라는 용어 대신 ‘검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법령 및 관련조항을 표기하고 ‘점검’을 ‘검열’로 수정
- 또한, 통합방위본부 주관의 검열을 실시한 경우 검열을 받은 수검기관에 대해서만 제2항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의미를 명확히 하여 수정
- [별표 7]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파도를 생성하는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파도를 생성하는 기구’를 ‘웨이크서핑보트’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웨이크서핑보트’를 해당 기구의 예시로 활용하도록 수정

제52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4. 18.(월) 14:00 ~ 15:1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조정관, 안건 소관 국·과장 등 10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4건

심의·의결 사항 3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훈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전부개정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 19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 훈련에 필요한 계획 수립, 훈련의 기간, 훈련종목 및 실시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전체 조문 수정	수정 의결	교육훈련 담당관
2	대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과태료 감경규정은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적용되는 정상참작 규정으로 과태료 체납위 반자에 대한 감경제외규정 신설	원안 의결	수상레저과
3	부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권고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처분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명확하게 개정	원안 의결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법제처 심사결과 보고	장비기획과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전부개정안

→ 제2조는 조 제목을 '적용 범위'로 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훈련 대상자는 올해부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전체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적용 범위'는 범위가

충돌되지 않도록 한정하여 적용할 때 사용하고 있어, 본 조문 제목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조 제목을 '직장훈련 대상'으로 하고, 본문을 '직장훈련 대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로 수정

→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은 직장훈련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안전관리에 추가하여 사고 발생 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 119구급대·응급구조사·간호사·의사 등 자격을 갖춘 '구급요원'도 함께 배치하도록 조문에 명시

제53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5. 2.(월) 14:45 ~ 15:5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조정관, 안건 소관 국·과장 등 9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4건

심의·의결 사항 2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예규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 5. 19.) 예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게 지침 제정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2	훈령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정안	함정·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필수 예비품을 사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시 정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도모하고자 관리규칙 제정	원안 의결	장비관리과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5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해양경찰청 소송 진행 사항 보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 제7조는 채용대상자에 대한 ‘확인서’ 제출 제외대상을 법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채용대상자의 예외사항으로 부적절하므로, 확인서 제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수정

→ 제11조제1항은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속 해양경찰서, 그 감독기관,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열거된 모든 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제1항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에 열거된 기관을 상위법령과 같이 각 호로 구분하고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수정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정안

→ 함정·항공기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조문이 불명확하므로 향후 법령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갖추도록 검토 필요

제54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5. 16.(월) 14:00 ~ 15:5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조정관, 안건 소관 국·과장 등 12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9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의 벤처형조직 운영 기한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직제 시행규칙, 사무 분장규칙, 위임전결규칙 개정	원안 의결	혁 신 행 정 법무담당관
2	훈령	「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3	훈령	「해양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 개정안		원안 의결	
4	훈령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정안	해양경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사항 을 규정하고,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 성 및 운영,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빅데이 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수정 의결	빅데이터팀
5	훈령	「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경찰의 정보역량을 강 화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의 인증 및 지원·관리에 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문 내용 정비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수정 의결	정보과

보고 사항 4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해양경찰청 국정과제 선정 결과	기획재정담당관
2	합정요원(순경) 경채 승선경력 추가 검토보고	교육훈련담당관
3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청 대응방향	수사기획과
4	항공 교육훈련 현황 및 '22년 중점 실시 계획	항공과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제4조, 제5조 및 제7조는 조 제목 간결화를 위해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삭제하고, 제5조제3항의 ‘경정 및 5급 이상’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경정 또는 5급 이상’으로 수정하며, 제7조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앞서 법률 제명이 명시되었으므로 간결화하여 ‘같은 법 시행령’으로 수정
- 제11조제1항의 조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에 대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 제12조제2항제3호의 빅데이터 플랫폼의 기능 중 ‘데이터를 활용한 시각적 통계지원’은 의미가 불명확하고 잘못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의미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 시각화 및 각종 통계지원’으로 수정
- 제13조제5호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해양경찰 사무인 ‘오염방제’에 대하여도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하도록 제5호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기존 제5호는 제6호를 신설하여 이동

「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 제2조제2호의 ‘인증’은 ‘어떠한 행위 등이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능력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뜻하는 의미로는 부적절하므로, 전문정보관 인증을 위한 평가·심의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인증심사’로 수정
-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인증신청자에게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주체를 ‘인증신청권자’로 약칭하였으나, ‘인증신청권자’ 용어의 표면적 의미는 앞서 약칭을 사용한 ‘인증신청자’와 유사하여 혼동될 수 있고,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것 보다 추천순위를 정하는 것이 주된 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인증신청권자’를 ‘인증추천권자’로 수정
- 제7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은 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에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을 두었으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르면 ‘간사’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의사·의결정족수 다음 순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제7조제4항은 제8조제3항으로, 제10조제5항은 제11조제3항으로 각각 이동하고, 제7조제4항의 해양경찰청 정보과 소속 계장은 정보기획계장, 정보협력계장, 정보상황계장 등 총 3명으로 누구인지 불명확하므로, 해당 조문을 ‘간사는 해양경찰청 정보과 소속 계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명확하게 수정
- 별표의 영문 ‘일자’를 영문표기법에 맞게 ‘월’, ‘일’, ‘년’ 순으로 표기하였으나, 한글 순서와 맞지 않아 잘못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한글 어순과 동일하게 ‘년’, ‘월’, ‘일’ 순으로 수정

제55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6. 13.(월) 14:00 ~ 15:5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7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과장 등 9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6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계획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대비 계획 수립	원안의결	감사담당관
2	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과 상이한 임용 시기의 특례규정 등을 현행화하고, 해수산계 고교 채용규정 정비	원안의결	인사·교육 훈련담당관
3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승진심사 절차 정비, 업무대행공무원 및 대우공무원 제도를 개선하고, 채용관련 종합적성검사 활용 및 체력기준 정비	수정의결	
4	고시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안전교육 제도 신설('06년) 이후 동일한 교육내용, 답습되는 교육자료, 강사에 따른 강의 편차 등에 따라 안전교육 내용 변화 반영	수정의결	수상레저과
5	예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일부개정안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교재 세부내용 변경에 대한 우수교육교재 평가표 마련	수정의결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6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 청렴 등급 상향을 위해 ①경찰청, 검찰청 등 유사기관 청렴도 평가 기준에 맞추어지도록 노력하고, ②수사 피의자 및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준수 등 철저 필요
- 수사 피의자 및 내부 징계자 등 이해관계자의 왜곡된 평가가 청렴 등급에 반영될 수 있으나, 정당한 법 집행도 중요하므로 수사 및 감찰 조사 시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 필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별표 6]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22.1.13.) 출범으로 포상 실적 평정기준의 포상 훈격에 광역시장급의 ‘특례시장’ 추가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 제5조제1항제2호의 ‘시험선의 고장’은 정비 소홀로 인한 단순 고장도 포함될 수 있어 기상특보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삭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일부개정안

- 제6조제2항의 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에 관한 법령에서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출석회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회의방식 예외규정에 따라 안 제6조제2항 각호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수교재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및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규정에 따라 교재 선정을 위원회가 아닌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조제1항 단서조항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

제56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7. 4.(월) 14:50 ~ 16:1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6명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과장 등 10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6건

심의·의결 사항 4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훈령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제정안	「국어기본법」에 따라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수정 의결	대변인
2	훈령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안	개정 「국가소송법 시행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 도개선 권고를 반영	수정 의결	혁 신 행 정 법무담당관
3	훈령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규칙」 일부개정안	훈련 조직 명칭, 도상훈련 주기, 각종 훈련 계획 마 련 시기 등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 훈련 규정」 및 현장부서의 실정에 적합하게 개정	수정 의결	교육훈련 담 당 관
4	고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신설되는 강릉 안인 화력발전부두 입출항선 안전 관리를 위한 동해항 관제구역 확대 및 선박교통 관제 서비스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관제구 역 육상 안쪽 경계 명확화	원안 의결	해상교통 관 제 과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7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2/4분기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추진상황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 제3조제1항은 위원 구성 시 5명 이상으로 인원의 하한을 정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원의 하한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제1항의 '5명 이상' 문구를 삭제
- 제3조제2항의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에는 제3항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2항의 위원의 지명·위촉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4항으로 이동하고 '위원'을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여 수정하며, 기존 제4항은 제5항을 신설하여 이동
- 제7조제1항 전문소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위원장'으로 명확히 표기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안

- 제35조제2항제1호 '이해관계가 있는'은 이해관계가 상반되거나 동일한 경우 모두 포함되어 의미가 포괄적이므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으로 수정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규칙」 일부개정안

- 제2조제2호가목은 '종합상황실'에 대한 근거 규정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22조, 제30조로 규정하였으나, 해당 법령 제6조를 제외한 제22조 및 제30조는 '종합상황실'의 설치 근거로 규정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종합상황실'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4조를 근거로 하도록 수정하고, 제2조제2호아목은 '해양경찰구조대'의 근거 규정을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조제1호로 하였으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경찰구조대'를 더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거 조항을 해당 법령으로 수정

제57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7. 18.(월) 14:30 ~ 17:1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과장 등 11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7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해양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안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이수 시간을 변경하고, 익명 상담 제도 명문화 및 사건 관련자의 보호에 필요한 규정 정비	수정 의결	양성평등 정책팀
2	훈령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경과자의 수사 부서 배치 확립, 젊은 경찰관의 유입 확대, 근무 기피 해소 등 수사경과 확보의 양적·질적 개선 등을 정비	수정 의결	수사기획과
3	예규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전부개정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비	수정 의결	장비기획과
4	예규	「함정건조감독관 복무 규칙」 전부개정안		원안 의결	
5	고시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정안		원안 의결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2022 국제 해양·안전 대전 개최 결과	장비기획과
2	해상 화학사고 대응 역량강화 추진현황	방제기획과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안

- 제2조제3호 문맥을 자연스럽게 하고, 상위 법령에서 정의한 표현에 맞게 문구 수정
- 제5조제1항의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상급자의 적절한 대처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전담 처리 기구(고충상담창구)에 통보하도록 관련 문구 추가
- 제6조제3호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조문을 구성하도록 수정
- 제27조제7항 ‘간사 몇 명’의 표현은 의미가 불명확하고 어색하므로, 인원을 특정하지 않고 간사를 둘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도록 수정
- 제30조제4항의 ‘의원면직’*에 대한 권한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있고, 관계 규정에서 임용권자인 해양경찰청장은 일부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해양경찰청장에게는 ‘면직’에 대한 권한이 없음. 따라서, 규칙 내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하는 용어인 ‘기관장’은 의미가 맞지 않으므로, ‘임용권자’로 수정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전부개정안

- 제4조제2항 ‘해양경과, 특임경과 및 정보통신경과’와 ‘수사경과자’의 연결관계를 자연스럽게 하도록 ‘해양경과자·특임경과자 및 정보통신경과자’로 수정
- 제8조제1항제3호는 수사경찰을 전보할 때 수사부서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을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경감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10년 → 8년, ‘21.1월)되어 일부 ‘경위 직위(정원)’에 경감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의 추천대상자를 ‘소속 수사 부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수정
- 제11조제1항 본문의 각호는 수사경과 선발 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의 표현에 맞게 ‘지난 사람’을 ‘지난 것’으로 수정
- 제13조제2항의 선발시험 실시 공고에 대한 주체가 생략되어 불명확하므로 선발시험 실시 공고의 주체인 ‘해양경찰청장’을 표기
-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위원회 근거 조항을 표기하여 명확하게 수정

「해양경찰 장비 도입 업무규칙」 전부개정안

- 제6조 및 제7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해양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사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조문을 ‘계획수립’→‘계획내용’→‘수립계획 반영’ 순으로 체계화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이동하되, 제8조의 제목은 ‘(수립계획 반영)’으로, 제6조제4항의 ‘제3항’은 ‘제1항’으로 수정하고, 기존 제6조의 제목의 ‘(계획수립 등)’에서 ‘등’은 삭제하고, 기존 제8조부터 제64조까지는 제9조부터 제65조까지 순차적으로 이동

- 제25조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어진 '장비기획과장'을 문장 서두로 이동하고 문맥을 자연스럽게 수정
- 제29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문에 열거된 구매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각호로 구분하여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본문 내용에 맞게 조 제목을 '(항공기 구매계획서 작성)'으로 수정
- 제49조 각 위원회 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항'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수정
-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4항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외부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회의 참석'과 '위원 구성' 간의 행정 절차상 시점의 전후관계가 맞지 않아 부적절하므로 '참석'을 삭제
향후 각 위원회에 적용되는 공통 규정 및 개별 규정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검토 필요
- 별지 제3호, 제4호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할 시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서약받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문구 삭제

제58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8. 1.(월) 14:30 ~ 15:4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 안건 소관 과장 등 11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6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훈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칙」 전부개정안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 규정이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0조)」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9조)」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	원안 의결	교육훈련 담당관
2	훈령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에 따라 직제상 변경된 부서명칭 등을 정비	수정 의결	
3	고시	「학교에서의 선박교통 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선박교통관제 교육을 시행 중인 대학·고교에서의 변화하는 교육환경(과목명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교육분야별 과목을 추가	원안 의결	해상교통 관제과
4	부령	「해양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수사인권관과 수사인권상담관 운영 등 수사인권보호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정 의결	수사심사과
5	부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종면허를 보유한 국민이 해외에서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쉽게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카드형 면허증에서 상장형 조종면허 증명서로 확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	원안 의결	수상레저과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8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제10조 제목 및 제1항 '대표협의회'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협의회의 취지에 맞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대표협의회'로 약칭하도록 수정
-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에 '해양경찰 상징' 및 위촉대상의 '소속' 등을 추가하여 통일된 양식을 갖추는 등 표준화된 서식을 사용토록 개선 필요

「해양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 제1조, 제2장제8절(제50조~제52조) 및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경찰관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본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아 불필요하므로, 제1조 목적조항에서 관련내용과 제8절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조항을 삭제하고, 제53조부터 3개 조씩 앞 조항으로 순차적 이동
-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영상녹화의 대상을 피의자, 사건관계인, 피해자에 대하여 함께 규정하여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며, 피해자는 사건관계인에 포함되어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영상녹화의 대상을 ①피의자와 ②사건관계인으로 간결화하여, 제1항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서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영상녹화의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조문을 체계화

제59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8. 16.(월) 14:30 ~ 16:0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국장 및 과장 등 9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8건

심의·의결 사항 8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예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세분화하여 반영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2	예규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 상벌·상계제 실시규칙」 폐지에 따라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별지 서식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	수정 의결	
3	훈령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일부개정안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감찰 조사 출석요구를 연기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의 가명조서 작성 및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수정 의결	
4	훈령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재정비	수정 의결	경비과
5	부령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	‘내사’ 용어를 ‘입건전조사’로 개선하고, 입건전조사 사건종결 결정의 사유를 불송치 결정 사유와 같이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사건종결의 투명성 마련	원안 의결	수사기획과
6	훈령	「(해양경찰청) 범죄수사 규칙」 일부개정안	「스토킹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시행 관련 사법경찰기관으로써 수사절차 등 정비	원안 의결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7	훈령	「(해양경찰청) 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칙」 전부개정안	참고인 등과 검안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범위를 확대, 지급방법을 완화하여 적용 개선	원안 의결	수사기획과
8	예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비 취급 규칙」 폐지안	수사예산 집행지침 매년 개정관리시행에 따른 수사정보비 취급 규칙 폐지	원안 의결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별표9의 불문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표의 '견책'에 따른 감경된 징계안을 삭제하고 별도로 명시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용 규칙」 일부개정안

- 제3조에서 규칙의 적용 대상을 '공무원'으로 약칭하였으므로, 규칙 내 유사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 '직원', '사람'을 모두 통일하여 '공무원'으로 수정
- 제5조제3항 경위서 처분 시 경위서 제출 요구권자 및 대상자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안 제4조제3항을 고려하여 각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도록 수정
-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4항 ~ 제6항의 한 개의 조항에서 벌점 상계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제8조제2항과 제9조제4항을 병합하고, 제8조제2항 본문의 '(불문경고는 제외한다)'는 삭제
이에 따라, 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은 제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이동하고, 안 제9조제6항의 '제4항'은 '제8조제2항'으로 수정
- 제8조제3항 및 제4항 조문에 장려의 상점에 대한 상계만 규정하고 표창장의 상점에 대한 상계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표창장'에 관한 사항 추가
-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경고장' 및 '장려장' 문안의 문맥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촉구함'을 '촉구합니다'로, '수여함'을 '수여합니다'로 수정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일부개정안

- 제1조 이 규칙의 적용 대상에는 의무경찰도 포함되므로 제1조 목적조항의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수정
-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주어 및 동사의 호응관계를 자연스럽게 수정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 제2조제6호는 다른 호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결합하는 것으로 약칭에 가까우므로, 안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운용자등’을 처음 사용하는 제5조제1항에서 통제관, 조종자 및 보조조종자를 ‘운용자등’으로 약칭하도록 수정
이에 따라, 제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제12호는 삭제
-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의 ‘승인권자’ 및 ‘허가권자’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승인·허가인지가 불명확하여 약칭 자체만 보고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약칭한 용어에 각각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비행승인권자’ 및 ‘촬영허가권자’로 수정 필요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안

- 수사 관할이 정확히 어느 관서에 해당하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이 어려우므로, 해역과 육지를 포함하여 관한 구역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제188조 ‘외국 선박 내의 범죄’의 수사기준은 UN해양법 제27조 ‘외국선박내에서의 형사관할권’에 비해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향후 UN해양법에 맞춰 수사기준 확대 필요

제60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9. 5.(월) 14:30 ~ 15:3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안전 소관 과장 등 9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7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예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제척, 기피 등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수정의결	수사심사과
2	훈령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청 수사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경찰청 인권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 수사준칙과 해양경찰수사규칙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심야조사 시간의 범위 등을 개정	수정의결	
3	훈령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일부개정안	유치인 및 호송피의자 등에 대한 경찰장구의 바른 사용과 수갑 미사용 대상자에 '미성년자'를 추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원안의결	
4	훈령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해양경찰청 수사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 및 부서장 명칭 등을 변경된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 준용 규정의 현행화와 조문 체계 및 용어 정비	원안의결	
5	대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단순 자문위원회로서 정비대상에 포함되는 「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기존 위원회 성격에서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문 정비	원안의결	해양안전과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9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해수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 경과	혁신행정부무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제13조제1호 위원의 해촉은 위원 당사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므로, 당사자의 행위와 무관한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회피에 관한 사항만 규정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일부개정안

- 제15조 ~ 제20조 및 제20조제3호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규정하는 순서에 맞게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임무)을 먼저 규정하고 구성과 운영을 그 뒤에 규정하도록 조문 체계 수정하고, 안 제20조를 제15조로,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수정
- 제20조제3호의 인권위 임무 중 하나로 '해양경찰 관련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시설이 광범위하므로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 시설'로 한정하도록 수정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내부 직원인 피해자전담경찰관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심리 분야 교육과정 신설과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마련 등에 대한 장기적 검토 필요
- 해상사건의 특성상 실종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중요하므로, 해당 지원 체제 마련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제61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9. 19.(월) 14:30 ~ 15:4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 위임으로 총무위원이 위원회 회의실에서 주재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과장 등 7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5건

심의·의결 사항 4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훈령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제정·시행에 따라 규정의 현행화 및 용어 정비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2	훈령	「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신고 접수·처리,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정 의결	
3	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경찰공무원 중 경위에서 8년 이상 근무해온 근속 승진 대상자가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이른 시일 내 임용되도록,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
4	훈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수정 의결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2023년 예산(안) 편성 결과보고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 제21조의2는 상위 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을 준용한 규정으로, 제21조의2제5호를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제5호에 맞게 수정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일부개정안

- 별지 제17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는 안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해양경찰관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서식 내 ‘OO해양경찰서장 귀하’ 삭제

「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제7조제1항의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은 해양경찰관서별로 그 직책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1항에서 책임관의 근거와 임무를 명확히 하여 제2항에서 관서별 책임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제2항은 제3항을 신설하여 이동
-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수증 제목 오른쪽에 괄호를 사용하여 용도를 병기토록 수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 제2조는 승진소요기간 뿐만 아니라 승진기준일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에 ‘등’을 추가

제62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10. 4.(화) 10:30 ~ 12:0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5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과장 등 8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7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이용자 혼선 방지를 위한 제명·용어의 수정, 영해 밖 수역에서의 관제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의무 폐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	재상정의결	해상교통관제과
2	고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정안	연안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과 함께 예방하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	재상정의결	해양안전과
3	훈령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	수정의결	
4	고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와 연안 체험활동 안전교육 수수료 기준을 정비	원안의결	
5	고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수중단체 정보를 제공하고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수정의결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10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2022년 3/4분기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추진상황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문명칭(Vessel Traffic System)의 의미와 관제 대상이 '선박'인 것을 고려하여 기존 제명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제3조제3항의 관제에 대한 선장의 의무를 직무대행자(항해사 등)까지 확대하는 것은 선박 운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는 사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므로 관련 조항(제3조제3항) 삭제 필요
- 제14조제2항은 어순을 정비하여 문장을 자연스럽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관제에도 불구하고'는 선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관제사는 책임을 회피하게 해주는 이해충돌적인 표현이므로 '관제와는 별개로'로 수정 필요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정안

- 제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서는 외부위원 임기,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원회 간사 규정은 의사·의결정족수 규정 다음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제6조제3항에서 외부위원의 임기를 일반적인 2년으로 규정하고, 제4항에서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 필요
- 간사 규정인 안 제4항은 순서에 맞게 제6항으로 이동하고 기존 제6항은 제7항을 신설하여 이동
- 제7조 조 제목 및 제7조제1항의 국민에게 알리는 '고시'의 성격에 맞게 조 제목을 '지원 자격'으로 수정하고, 본문의 서술어를 '~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필요
- 제9조제1항의 연안안전지킴이로 최종 선발된 사람에 대한 위촉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므로, 현행에 맞게 6개월로 규정 필요
- 제12조 본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각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연결이 어색하므로 제12조 본문을 적절한 문장으로 수정 필요
- 제13조제1호의 '사망·실종 사고'는 육상에서 발생한 사고와 구분이 필요하므로 연안과 관련된 수식어구 등 추가 필요
- 제15조제1항의 '상대방'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삭제 필요
-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불필요한 문구 삭제 필요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제2조 및 제7조제2항의 위탁기관이 어떤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상위 법령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임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 조문 추가가 필요하므로, 제7조제2항에서 사용한 약칭은 제2조에서 사용하도록 수정
- 제8조제1항 조문 전반에 걸쳐 '수강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에 대한 정의나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규칙에서 '수강자'의 의미로 적절한 안 제8조제1항의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수강자'로 약칭하여 의미가 명확하도록 수정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별지 제1호서식 '검토'의 주체인 '해양안전과'는 해양경찰청 소속이며, '결재'의 주체인 '지정 위원장'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토'와 '결재'의 주체를 '해양경찰청'으로 수정

제63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10. 17.(월) 14:30 ~ 15:5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과장 등 10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10건

심의·의결 사항 9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을 하달하여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2	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지휘부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유능한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 기회가 확대되도록 총경에게서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와 경력평정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제도를 개선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
3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4	훈령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정안	해양에서의 범죄동향 수집 및 잠재범죄 탐지 활동에 관한 세부근거를 마련하고 해양범죄정보가 융합되는 정정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수사첩보 수집 활동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정 의결	수사심사과
5	고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정안	연안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과 함께 예방하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6	대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 2건, 시행규칙 2건 규정 정비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7	부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 2건, 시행규칙 2건 규정 정비	원안 의결	수상레저과
8	대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원안 의결	
9	부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수정 의결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2022년도 승진업무 기준 및 절차 등 보고	인사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제8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의 별표 내용을 규정하는 관련 조문의 순서에 맞게 별표 순서를 변경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정안

→ 제6조 후단은 부정 사건청탁이나 허위 사실 기재 금지 등 수사첩보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첩보의 작성에 관해서는 제4조 ‘(수집 및 작성)’ 조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제4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제6조 후단을 제4조 후단으로 이동

→ 실무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첩보 업무 표준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이 규칙의 제정·발령과 함께 배포·활용 예정이므로 「실무지침」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항 신설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정안

→ 제5조의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장 소속이 아닌 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를 ‘해양경찰서에’로 수정

-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 하여 차별적인 규정을 두지 않도록 조문에서 연령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제2호의 '건강 상태 양호'는 선발 기준으로써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상태일 것'으로 수정
-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 뒷면의 내용 중 조문에 규정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문구 삭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 제3조제2항 해양경찰청장이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에 맞게 수정
-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의 '공공기관'은 용어를 정의하지 않아 의미하는 대상·범위가 불명확하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인용 조문을 명시하고 약칭을 사용하도록 수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별표 4] 연도는 원칙적으로 4개 숫자로 표기하므로 이에 맞게 수정

제64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11. 7.(월) 13:40 ~ 14:10,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과장 등 6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3건

심의·의결 사항 1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영해 밖 수역에서의 관제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의무 폐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 * 제62회 정기회의의 재상정 의결 안건	원안의결	해상교통관제과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11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2022년도 국정감사 주요지적 사항 보고	

제65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11. 21.(월) 14:30 ~ 15:4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과장 등 12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6건

심의·의결 사항 6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내 용	심의 결과	부 서
1	예규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제정안	해양경찰청 소관법령상의 모든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절차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순서도로 만든 행정규칙 제정	원안 의결	혁 신 행 정 법무담당관
2	훈령	「(해양경찰청)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범죄신고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중복되는 규정 개정	수정 의결	수사기획과
3	계획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 ('23~'27)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원안 의결	장비기획과
4	계획	'23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시행계획		원안 의결	
5	훈령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정안	함정직원 개인별 담당장비 작동,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 확인,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제정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6	훈령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해양경찰청 소속 근무자의 순직·실종 발생 등에 대비,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확대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헌혈 참여 근무자의 혈액을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 개정	원안 의결	해양경찰 연구센터

주요 토의 사항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 제8조제1항의 일반적인 위원회 기능은 관련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표현이 적절하므로 '심사'를 '심의·의결'로 수정
-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사건 유형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달리하는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이므로, 보상금 지급 소요가 있어 보상금 심사가 필요할 때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제1항 조문을 인용하여 제8조제2항에 근거 규정 마련 이에 따라, 제10조제1항은 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수정
- 제8조제4항은 후단에서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 계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급을 '경위 또는 7급 이상'으로 간결하게 수정하고, 직위에 관한 문구는 삭제하고, 후단의 문장 주체를 '위원'으로 하여 문장을 자연스럽게 수정
- 제10조제3항 조문의 간결성을 위해 불필요 문구 삭제
- 제12조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만 해당하므로 '전문가'를 '외부전문가'로 수정
- 제12조의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금액'뿐 아니라 '지급여부'에 대해서도 심사·의결하므로 '심사결과'란의 보상금 표기사항과 서식 하단의 '보상금 지급율' 문구 삭제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정안

- 제8조제3항의 해양경찰서 이외 다른 소속기관도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기관은 장비관리과가 없으므로, 각호를 신설하여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장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명확하게 규정
- 해양경찰서 이외 다른 소속기관도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기관은 장비관리과가 없으므로, 각 호를 신설하여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장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명확하게 규정
- 또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관서'로, '장비관리과장'은 '장비담당과장'으로 약칭을 사용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조문 내 '해양경찰서장' 및 '장비관리과장'은 '해양경찰관서의 장' 및 '장비담당과장'으로 수정
- 제11조제1항은 경비구조과장을 점검 단장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관서에는 경비구조과장이 없으므로 관서별 담당부서의 장을 각호로 구분하고 '점검단장'으로 약칭을 사용하도록 수정.
이에 따라, 제11조제3항, 제18조제2항의 '경비구조과장'을 '점검단장'으로 수정
- 제11조제2항의 탑재장비 작동방법 숙지 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 분야를 각호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일부 관서의 담당 부서장과 명칭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해당 관서는 담당 분야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제66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12. 5.(월) 14:30 ~ 15:5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과장 등 10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8건

심의·의결 사항 7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국정과제 추진,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 정원 조정 등을 반영한 직제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원안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2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의결	
3	훈령	「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의결	
4	훈령	「해양경찰청 위임 전결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의결	
5	훈령	「자율기구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원안의결	
6	훈령	「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를 민주적 방식에 맞게 개선하고, 규칙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문 체계를 정비	수정의결	형사과
7	부령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민간 해양구조 참여세력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수난구호 관할해역에 신설 해양경찰서를 반영한 규정 정비	원안의결	수색구조과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12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이 서로 맞지 않으므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표현하고 있는 「민법」을 준용하여, 안 제4조제2항제1호의 ‘아동’을 ‘미성년자’로 수정
- 제5조에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감경결정 여부’뿐만 아니라 감경결정 시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므로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여부’를 삭제,
- 제12조에서 위원회의 안건은 피의자가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사 처리될 사건을 감경시키는 피의자 개개인의 이익과 결부된 중요한 사안으로 안건의 경중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등 충분히 출석회의를 통해 심의가 가능하므로, 서면 심의에 관한 규정인 안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안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수정하고, ‘화상회의’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추가

제67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12. 19.(월) 14:30 ~ 16:0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소관 과장 등 13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6건

심의·의결 사항 6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해양경찰청 청원 심의회 운영규칙」 제정안	「청원법」 전부개정으로 새로운 청원제도 시행에 따른 청원업무 주관부서 지정,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원안 의결	운영지원과
2	훈령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 과 그 소속 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정원을 매년 산정하여 규칙에 반영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3	훈령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사격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격장 주관부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의 체계와 자구 수정 반영	수정 의결	교육훈련담당관
4	예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일부개정안	상위 법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채용과 관련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반영	수정 의결	
5	고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직제 개정으로 신설될 예정인 목포·군산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선박교통관제구역, 관제대상 선박 신고 방법, 관제통신 제원 등에 반영	원안 의결	교통관제과
6	훈령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방제함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방제함정 출·입항 시 출동계획과 출동결과를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칙에 반영	수정 의결	기동방제과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 제5조제1항은 관리요원을 지정하는 주체가 생략되어 현행에 맞게 실시부서의 장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제1호의 내용과 병합하여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수정
- 또한, 사격훈련은 훈련 중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리요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관련 지식과 자격이 요구되므로, 안전요원 및 구급요원은 관련된 업무에 능숙하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밖의 요원은 사격훈련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실시부서의 장이 지정하도록 수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일부개정안

- 제13조의2에서 비공개로 통제된 장소에 격리되는 출제위원과 단순히 서류전형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은 시험의 공정성을 위한 제척과는 큰 관련이 없으므로 제척사유 확인이 필요한 면접·실기 시험위원에 대해서만 제척 규정을 두고 안 제7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소관 시험위원장이 평가에서 배제하도록 수정하고, 시험위원 중 출제, 서류 전형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은 응시자에게 비공개 사항으로 기피 대상이 될 수 없고, 회피해야 하는 시험위원은 면접위원과 실기위원만 해당되므로 시험위원을 면접위원 및 실기위원으로 수정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 제2조 정의규정 중 ‘바지선’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로 ‘부선’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명과 정의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제바지’를 ‘방제부선’으로 수정
- 제7조의2 제2항은 순환전보의 예외적 사항으로 방제함정 필수 운항 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요원을 지정하는 규정인 제3항보다 먼저 기술되어 조문의 순서가 어색하므로, 제3항의 방제함정 필수 운항 요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의 앞쪽으로 이동하고, 제3항은 필수 운항 요원의 해제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수정

제68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3. 1. 2.(월) 14:30 ~ 16:1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과장 등 10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6건

심의·의결 사항 3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계획	「2023년 교육훈련계획(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에 따라 2023년 해양경찰청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원안의결	교육훈련담당관
2	계획	「2023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원안의결	해상교통관제과
3	훈령	「해양경찰청 항공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적시적인 관련 항목을 개정하고 운항절차, 신규 도입헬기 배치 기준 및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	수정의결	항공과

보고 사항 3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1월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2022년 해양경찰위원회 운영 결과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3	2023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침	수상레저과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제10조제7항의 해양에서 실종자 수색작업 등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휴무 1일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항공단장이 장기간 출동 등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1일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
- 제13조제4항제1호의 위원장과 제2호의 위원구성이 별도로 규정되어 의사정족수의 산정 기준인 '재적위원'에 위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회의 소집에 대한 규정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제1호에서 위원구성을 규정하여 위원장이 위원에게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제2호에서는 위원장과 위원 지명에 대해서, 제3호에서는 회의소집 및 의결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고, 기존 제3호 간사 규정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결정족수 규정 뒤에 위치하도록 제4호로 이동
- 제47조제2항 및 제4항은 각급 자격심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면서, 위원장이 위원에게 포함되는지 규정하지 않아 불명확하므로 안 제2항과 제4항의 본문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위원 구성'으로 수정
- 제47조제2항 및 제4항의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사는 위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 조항의 제3호를 삭제하고,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권고 사항에 따라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제48조제4항을 제47조제5항으로 이동하고, 각급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제6항에서 규정하도록 수정. 이에 따라, 안 제4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수정
- 제47조제4항제2호의 중앙 자격심의 위원회 위원 중 '항공단장'과 '항공대장'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 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므로 심의 대상과 위원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항공단 소속 위원'을 '심의 대상자가 소속되지 않은 항공단 위원'으로 수정
- 제50조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문구가 반복되어 어색하므로 제4호의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수정
- 제50조 및 제63조는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 및 기술검토 실무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소집에 대한 규정이 생략되었으므로, 안 제50조제3항과 제63조제6항의 본문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
- 제63조제5항 간사 규정은 의사·의결정족수 규정 뒤에 위치하도록 제6항과 순서 변경
- 제63조제3항 본문의 '구성하되', '구성한다' 문구가 반복되어 문맥이 어색하므로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2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로 수정

제69회 임시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3.1.3.(수) 09:00 ~ 09:5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장 후보자 온라인 출석, 기획조정관 등 3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온라인 출석

▶ 상정안건

1건

심의·의결 사항 1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동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정 동의안		원안의결	해양수산부

주요 질의·발언요지

위원	주요 질의·당부사항
박찬호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국과의 해양경계미확정 수역에서 당면한 현안사항 □ 우리의 해양주권 확보 및 유지 방안 (해군과의 협력 중심)
함혜리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담당관실 근무 시 초당대학교 학사과정은 어떻게 이수했는지, 학업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 같은데 조직 내에서 차별을 느꼈는지 □ 해경의 실추된 이미지 관련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 현장에서 뛰는 해경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
이은방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 해양경찰이 직면할 가장 개연성이 높은 재난적 해양사고 영역과 그 영역에 대한 대책 또는 대비 방안 □ 해양경찰 업무 성격상 민간 또는 국제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해양경찰의 협력증진 방안 □ 해양경찰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임기(2년)가 잘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윤석희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조직 발전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장이 되시면 이루고자 하는 실천 3가지 □ 육경과 다른 해경 수사의 전문성 및 수사 부서 근무 기피에 대한 대응 방안 □ 해상에서의 마약사범의 증가 현황과 대책, 문제점, 대응방안 □ 양성 평등한 조직 운영 및 MZ세대 등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방안
남상욱 총무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조업 단속 관련 단속요원의 안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현재 운용 중인 중국산 드론에 대한 보안대책 □ 지난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
사공영진 위원장	<p>〈당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로서의 직무자세 확립 ※ 진정성 있는 민원응대, 바람직한 직업정신, 직무자세 확립 필요 □ 현장 전문성 강화

제70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3. 1. 16.(월) 13:50 ~ 15:10,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과장 등 10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10건

심의·의결 사항 9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국가계약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	수정 의결	운영지원과
2	훈령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정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	수정 의결	
3	훈령	「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	'23년 정기인사를 대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개편과 명확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를 신설 또는 조정	수정 의결	핵심행정 업무담당관
4	훈령	「해양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5	훈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6	훈령	「함정 운영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정박 중 대기근무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22년도 국정감사 시정권고의 이행 및 함정 정비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	수정 의결	경비과
7	대령	「수상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취득 수요에 맞춰 자격 관리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험장의 시설기준과 교육기관의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	원안 의결	수색구조과
8	부령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9	고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보고 사항 1건

연번	안 건 명	부 서
1	2023년도 해양경찰청 예산 보고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 제3조제1항 계약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로 적절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임을 고려하면, 위원회가 최소 5명으로 구성될 때 내부위원 선임이 가능하므로, 위원회 구성 시 최소인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수정
- 제3조제2항 내부직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하였다면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제2항의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수정
- 별지 제3호서식에서 서약 내용을 위반할 시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서약받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문구 삭제하고 간결하게 수정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정안

- 제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소집과 의사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아 불명확하므로, 실무에 맞게 사업 부서의 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시 개의하도록 하는 2개 항을 추가하되, 기존 제3항의 외부위원에 관한 규정을 제2항과 병합하고, 조항 순서를 위원회의 '구성', '운영' 순으로 하되, '운영'에 관하여는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간사' 순으로 규정하도록 조정
- [별표 2]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할 시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서약받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문구 삭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 제23조제1호타목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지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지도'를 '운영'으로 수정

「합정 운영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 제18조제3항은 '서특단 경비구역'을 '서특단 구역'으로 약칭하고, 제19조제2항에서 한 번만 사용하여 문구를 약칭한 실익이 없으므로, 제18조제3항의 약칭 사용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19조제2항의 '서특단 구역'을 '서특단 경비구역'으로 수정

-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별지 서식에 대한 근거 없이 안전관리 점검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제1항 및 제2항의 안전관리 점검표 관련 문구는 삭제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제3항에서 지도·점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함정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명확히 하여 수정
- 제21조의10제1항부터 제5항에서 모든 승조원에게 적용되는 직무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과 정장 또는 그 밖의 승조원에게 적용되는 함정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항으로 규정하여 보직 기준이 중첩되고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제1항의 각호를 신설하고 예인정 정장 및 그 밖의 승조원의 보직 기준을 한 개의 조항에서 모두 규정하도록 수정하고, 기존 제4항 및 제5항은 제2항 및 제3항으로 이동

제1회 정기회의

회의개요

▶ 일시·장소

'23. 2. 6.(월) 14:30~15:55,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위원회 출석, 위원장·위원 등 6명 온라인 출석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안전 소관 과장 등 7명 위원회 출석

▶ 상정안건

7건

심의·의결 사항 5건

연번	형식	안건명	내용	심의결과	부서
1	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23년도 소요직원 책정 결과를 반영하여 항공조종사(12명), 예인정장(2명)의 직급 상향(14명)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수행인력(1명), 목포, 군산, 제주 광역VTS 관제인력(31명), 노후 함정 증톤 대체 건조에 따른 함정인력(28명) 등 인력증원을 반영	원안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2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의결	
3	계획	연안사고예방 시행계획	「연안사고예방법」 제7조 및 제2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원안의결	해양안전과
4	예규	「해양경찰청 공무국외여행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해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출장 목적에 맞게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허가절차 등의 강화를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수정의결	국제협력과
5	예규	「해양경찰청 국제 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국제해양분야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국제해양법위원회의 실질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해촉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의 소집시기, 방법, 의결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수정의결	

보고 사항 2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2023년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담당관
2	2월 주요업무계획	

주요 토의 사항

「해양경찰청 공무국외여행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 제5조에서 ‘허가권자’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허가권자’로 약칭하여 조문 내 통일된 용어 사용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제6조제3호의 ‘제5조에 따른’은 삭제
- 별지제3호서식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물의 또는 중대한 보안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이라는 문구가 경각심 고취를 넘어 그에 관한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하여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서약서 제3호의 내용을 삭제하되, 보안사고 예방 및 보안사항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내용 추가하고, ‘서약집행자’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서약자’로 수정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 제3조제2항제4호 국제해양법위원회의 위원 추천방식을 ‘위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 추천을 받아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서 결정하는 사안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로 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므로, 제4호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사람’으로 수정
-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그 외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는 순서를 먼저 위원 전체에 대한 원칙적 사항을 제1항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
- 제1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하에 1년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에 대한 동의 방식이 불명확하므로, 앞서 위원회의 위원 추천방식(제3조제2항제4호)과 같이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수정하고, ‘연임’은 같은 임기로 재임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장’으로 수정

PART



해양경찰위원

논문 및 기고문



1. 사공영진 위원장	188
–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직무자세	
2. 남상욱 총무위원	200
– 해양경찰위원회 1기 위원회 활동 所懷	
3. 박찬호 위원	213
– 해양의 국제적 규제와 우리의 법제	
4. 함혜리 위원	231
– 당당한 해경, 국민 곁으로 먼저 다가가야 한다.	
5. 김효선 위원	235
– 양성평등과 인권경영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6. 이은방 위원	240
– 해양경찰(KCG)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고도화 방안 고찰	
7. 윤석희 위원	259
– 제1기 해양경찰위원회의 임기를 마치며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직무자세 - 어떤 마음가짐으로 민원인을 대할 것인가 -



사공영진

해양경찰위원장
법무법인 삼일 고문변호사

400jin@daum.net

I. 서언

1. 해양경찰위원회의 출범과 활동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전을 지켜온 해양경찰의 숙원사업이던 해양경찰법이 2019년 8월 제정되었고, 그 시행일인 2020년 2월 21일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해양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매월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개정,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해양경찰청장 임명 동의권 행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소속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해양경찰위원회의 역사적인 출발에 있어 초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으로, 해양경찰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막중한 역할과 책임, 국민의 해양경찰에 대한 높은 기대를 생각할 때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위원들의 드높은 식견과 적극적인 헌신에 힘입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

는 해양경찰을 만들고, 우리의 해양경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더 사랑받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여 왔던 지난 3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망찬 내일을 여는 해양경찰을 만드는 데 함께 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해양경찰위원회가 21세기 선진 해양경찰의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임기 만료에 따른 소회

해양경찰과 인연을 맺고 3년 동안 활동하면서 해양경찰의 다양한 업무내용과 노고에 대하여 비로소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해양경찰은 경비 구난, 해상 교통안전 관리, 해상 치안,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오염 방제, 국제 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 위협에 처하거나, 우리의 바다가 불법적으로 유린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역량을 발휘하여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산화하신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순직한 영웅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 주신 해양경찰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고, 우리의 바다는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거친 파도 속에서, 힘든 일선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해양경찰관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역할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일하다 보니 간혹 해양경찰관들의 실수나 기강해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해양경찰과 인연을 맺은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해양경찰위원회 제1기 임기를 마치면서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직업정신과 직무자세에 관한 줄고(拙稿)를 남김으로써 해양경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II. 민원인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

1. 민원인의 소중함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유명한 “오하라메(大原女) 콩떡” 사연을 소개하면서 민원인들이 왜 소중한지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본 “교토(京都)”에는 “오하라메”라는 유명한 콩떡이 있습니다. 그 떡은 찹쌀에 검은 콩을 꼭꼭 눌러 박은 불품없는 떡이고, 값도 아주 싼 동전 한 닢의 싸구려 떡입니다. 그런데 이 불품없는 떡은 “교토의 명물” 중의 하나입니다.

“오하라메(大原女)”는 “오하라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의 인근에 “오하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하늘이 동전만 하게 보이는 산촌이고, 논과 밭이 거의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이어서 도무지 먹고 살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 오하라 마을 여자들은 생계를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구해 한 단의 나무를 만들어 머리에 이고, 교토로 팔러 갑니다. 오하라와 교토는 차로 한 시간 거리이나, 머리에 한 단의 나무를 이고 걸으면 서너 시간 이상 걸려야 교토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죽 한 그릇을 떠먹고, 오전 내내 걸어 그녀들은 교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교토의 “니시키(錦)” 시장을 찾아 거기서 한 단의 나무를 팔게 됩니다.

나무 한 단이라야 요즘 돈으로 불과 5백 엔, 그녀들은 그 5백 엔의 돈으로 보리 두 되를 사서 다시 오하라로 돌아옵니다. 오후 내내 걸어야 해가 질 때쯤이면 오하라에 도착할 수 있고, 오하라 마을엔 그녀의 어린 자식들이 어머니가 돌아올 때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보리 두 되가 있어야 그날 하루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하라의 여자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만, 보리죽 한 그릇을 먹고 점심을 건너

똥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오히라로 나가는 교토의 “데마치야나기(山町柳)”거리에는 “다와라야요시토미”(俵屋吉富)라는 떡집이 있고, 그 집 좌판에는 먹음직스러운 콩떡이 있습니다. 오히라의 여자는 망설이고 망설이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도저히 오히라까지 걸어갈 기운이 없습니다. 그거라도 한 개 사 먹지 않으면 기진맥진해서 도저히 집에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떡 한 상자는 열 개, 한 상자를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콩떡을 하나만 팔 수 없냐고 물어봅니다만, 주인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옷차림은 거지나 진배없이 더럽고, 게다가 장작을 머리에 이고 오느라고 땀 냄새는 진동하므로, 떡집 주인은 행색이 너무나 초라한 그녀들에게 떡을 팔고 싶은 마음조차 없습니다.

처음에 떡장수는 그녀들에게 떡을 팔지 않았습다. 행색이 너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그녀들이 오히라 마을의 나뭇단 장수인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그녀들이 내민 동전 한 푼이 얼마나 힘들게 번 것인가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한 냥의 동전이지만 그녀들에게는 천금보다 더 소중한 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다음 날 떡집 주인은 오히라 여자들이 사 먹는 콩떡을 좀 더 크고 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개도 판매”라고 써 붙였습니다. 그녀들을 업신여겼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오히라메 콩떡”의 사연입니다.

“하찮은 액수의 손님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들의 동전 한 냥이 얼마나 힘들게 번 것인가를 생각하라. 손님을 차별하지 마라. 오늘 돈이 없다고 해서 내일도 돈이 없다는 보장이 있는가?” 일본의 상인들은 그런 사실을 “오히라메”의 나뭇단 장수들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히라메”라는 콩떡은 교토의 명물이 되었지만, 그 콩떡 속에 숨어있는 사연을 일본 과자 장인들은 알고 있기에 일본의 과자가게에서는 단 한 개의 과자를 사는 고객이라도 정성껏 그 한 개의 과자를 포장해 준다고 합니다. 오히라 여자들의 콩떡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토에서는 해마다 4월 셋째 주에는 “오하라메 마쓰리(大原女祭)”라는 축제를 합니다. 오하라의 나뭇단 장수처럼 나무 한 단과 깡충한 “하오리(羽織= 덧입는 겉옷)” 옷을 입고, 바로 그 오하라 여자들이 걷던 길을 나뭇단을 머리에 이고, 걸어보는 축제입니다. 참가비는 2천 엔. 그 옛날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던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충분히 공감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찮고, 볼품없고,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액수의 돈을 내미는 손님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들을 소홀히 대하면 언젠가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고, 결국 상점은 문을 닫고 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해양경찰청이라는 상점에서 고객이라고 할 민원인을 맞이하는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는 수많은 민원인, 즉 여러분의 고객이 하찮아 보이고, 배우지 못해 무식하다고,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오지 않는 정부 기관은 망하게 됩니다.

2. 기본적인 자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공직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공직자로서의 기본 마인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공직자로서 민원인에 대한 자세는 무엇보다도 겸손일 것입니다.

3. 겸손의 기본정신

겸손의 기본정신은 바로 첫째 주인정신(主人精神)이고, 둘째 일기일회의 정신(一機一會의 精神)이고, 셋째 벼룩의 정신입니다.

가. 주인정신(主人精神)

중국불교 선종 역사에 우뚝 솟은 임제 의현(臨濟 義玄)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임제종의 개조인데, 한국 조계종도 임제종의 법맥을 이은 것입니다. 그 분의 법문 중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구도자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든 주체적일 수 있다면,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된 곳이다(隨處作主 立處皆眞). 이렇게 되면 어떠한 경계에서도 잘못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또 종래의 나쁜 습기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카르마(業)가 있더라도 삶은 자연히 해탈의 큰 바다로 변한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모두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즉 간명하게 “어디서고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겸손의 기본정신은 바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정신, 그게 바로 겸손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해양경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청장님이나 차장님, 실국장님, 과장님입니까? 물론 그분들도 주인이지만 모든 해양경찰공무원 역시 주인입니다.

겸손의 기본정신은 바로 주인 정신입니다. 해양경찰관서를 찾아오는 수많은 민원인들은 손님입니다. 주인은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나. 일기일회의 정신(一機一會의 精神)

부모와 자식, 부부간, 친지, 친구간의 만남과 같이 지속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만났다가 다시는 만나지 못할 단 1회의 만남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만남이 모두 필연 같고, 섭리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인연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섭리 또는 인연의 실타래가 뭉쳐서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1) 임제(臨濟) 또는 의현(義玄)은 당나라의 선승(禪僧)이다. 선종(禪宗)의 일파인 임제종(臨濟宗)의 시조(始祖)이기도 하다. 황벽희운(黃檗希運)을 이어 중국 선종 11대 조사이다.

오래 묵힌 만남이든, 스쳐 지나가는 짧은 만남이든, 사람에게는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해야 할, 성의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 다도(茶道)의 비조(鼻祖)라고 할 센 리큐(千利休)²⁾가 주장하는 일기일회의 정신이고, 일기일회의 정신이야말로 겸손의 기본이 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센 리큐는 다도 정신을 한마디로 일기일회(一期一會)로 정리했습니다. 일기일회를 소박하게 해석하면 “나의 삶 가운데, 이 사람과의 만남은 오늘 이 자리에서 딱 한 번이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앉아 있는 저 사람은 이 차를 마시고 헤어진 뒤에 다시 만날 기약이 없으므로, 오늘 이 만남을 마지막 만남, 오직 유일한 만남으로 소중하게 여겨, 성심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람 역시 전에 한번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해양경찰관서를 찾아와 해양경찰공무원 앞에 선 민원인, 정말 두 번 다시 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다시 만날 길이 없는지 모릅니다. 옷깃만 스쳐도 큰 인연이라고 하지 않을까? 켜켜이 쌓인 속세의 인연법으로 만났으니, 정말 옷깃 스치는 그 만남, 절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베품의 정신

불교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는 것을 보시(報施)라고 하는데 바로 베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베품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베품에는 속된 표현으로 부처님 불전 앞에 시주를 많이 하고, 탑을 세우고, 절을 짓는데 돈을 많이 내놓는, 재물로 베푸는 것도 있고, 진리를 나누는 베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아닌 정신을 나누는 평안의 베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크게 재물로 베풀 수도 없고, 인생

2) 일본에서 일본 다도를 정립한 것으로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다(승려, 정치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다조(茶祖)라 부르기도 한다. 58세 때 오다 노부나가와 다도 스승이 되었으며 그가 죽은 이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선생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고언(古言)을 하다 미움을 사게 되어 사형을 명받아 1591년 2월 28일 할복하였다.

에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진리를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혜로 들어가는 관건인 베품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쉽게 베푸는 평안의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품은 겸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남을 대한다는 것은 결국 베푸는 것입니다. 가진 것 별로 없는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쉬운 것부터 민원인을 상대로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겸손해지는 방법

겸손해지는 방법은 바로 첫째 참는 것, 둘째 들어주는 것, 셋째 인간적으로 대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 참는 것

물은 바위를 뚫지만
바위는 물을 뚫지 못한다.

태풍은 나무를 꺾지만
뿌리를 만질 순 없다.

오늘 아침 부드럽게 쌓인 눈 위에
삼나무가 넘어져 있다.

영혼을 울리는 건 작은 힘
천 리를 날아가는 쇠기러기 울음도
한 점 부드러운 작은 깃털

- 송수권³⁾ 시인의 시

3) 시인. 전남 고흥 출생. 1975년 “문학사상”에 ‘산문에 기대어’가 신인상으로 당선되어 등단했다. 전통적인 서정시의 가락을 빌려 한민족의 한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애썼던 삶들의 실상과 의지를 노래했다. 시집으로 “산문에 기대어”(1980), “꿈꾸는 섬”(1982), “시골길 또는 술통”(2007) 등이 있다.

시의 내용이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직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낮은 데로 임하는 물이 되어 바위를 뚫고, 뿌리를 만지는 흙이 되고, 삼나무를 넘어뜨리는 부드러운 눈이 되고, 쇠기러기를 천 리 먼 길 보내는 깃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시인은 바위를 뚫고, 뿌리를 만지고, 삼나무를 넘어뜨리고, 쇠기러기를 천 리 먼 길로 보내는 것은 물이고, 흙이고, 부드러운 눈이고, 깃털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바로 겸손하고 친절을 말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관공서를 찾아오는 사람들, 정말 답답한 사람이 많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부분의 사람보다 공직자는 훨씬 잘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힘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아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끝까지 들어 줘야 합니다.

아함경(阿含經)이라는 불교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미수 허목(許穆)⁴⁾ 선생은 기언서(記言序)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힘만 믿고 날뛰는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한다. 이기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수를 만나게 된다. 도둑은 주인을 미워하고 백성은 윗사람을 원망한다. 군자는 천하의 위가 될 수 없음을 알아 아래에 처하고, 못사람의 선두가 될 수 없음을 알므로 뒤에 선다. 강하(江河)가 비록 아래로 흐르지만, 온갖 시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이다. 천하의 도는 친함이 없이 항상 착한 사람과 함께 한다.”

결국 참는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참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의 어느 백화점에서는 새로운 판매직원을 채용하면, 일단 신발매장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고개를 숙이고, 신발을 신겨드리는 훈련을 통해 자기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겸손의 첫 번째 방법은 참고 낮은 데로 임하는 것입니다.

4) 조선 시대 후기의 문신 및 유학자, 역사가이자 교육자 겸 정치인이며, 화가, 작가, 서예가, 사상가이다. 호는 미수. 평생 학문과 문학에 뜻을 두었다가 나이 예순이 넘어 대사헌에서 정승까지 올랐다. 그는 이황의 학풍을 이어받은 정통 성리학자였지만, 백성을 돌보는 것을 정치의 근본이라 여기고 현실적인 학문을 궁구한 실학자이기도 하다.

나. 들어주는 것

다음으로 검손의 두 번째 방법은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자세입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물 한 컵을 준다든지, 커피 한 잔을 시켜서 마시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이야기해도 충분히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말에 “입은 원수를 만들고, 귀는 친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 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기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기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민원인들이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소리를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손의 두 번째 방법은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 인간적으로 대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서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되었다고 불만을 가지는 경우보다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모욕을 줬다고 원한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못 밝혀내면 “고소인이 책동을 부리는 바람에 자신이 억울하게 되었다. 또는 사악한 피의자가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진실을 못 밝혀냈다”고 상대 고소인이나 피의자를 탓하지, 수사관을 일차적으로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친절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가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재산권이나 자유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인격권이나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적으로 대우해 준 것, 자세히 설명해 준 것,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고 인간답게 대하는 것, 그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정부 기관을 무서워하고 경원시합니다. 절대로 공직자의 눈과 민원인의 눈이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세 번째 방법은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5. 겸손의 결과

민원인에게 겸손하고 친절하게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만 좋은 일일 뿐일까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면 공직자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눈으로 민원인을 보지 마시고, 민원인의 눈으로 민원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평생 처음으로 관공서에 오는 사람이고, 두 번 다시 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다시 만날 길이 없는 소중한 사람이므로 그러한 사람에게 성의를 보인다고 생각하십시오.

겸손과 성의, 친절은 결국 여러분에게 되돌아오는 무량한 복덕입니다.

III. 결어

위와 같은 내용은 저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실천하지 못하였던 것들입니다. 공직 생활을 마치면서 그때 그렇게 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담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직에 계시는 우리 해양경찰 공무원들께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해양경찰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양경찰의 얼굴이며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겸손하고 친절하게 맞이할 때, 여러분의 조직은 국민과 유리된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해양경찰이 될 것입니다.

해양경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노력이 새벽하늘에 종소리 올리듯 온 세상에 은은하게 전달되어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말끔히 해소하고, 우리 해양경찰이 국민과 함께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하여야겠습니다.



해양경찰위원회 1기 위원회 활동 所懷

- 초대 총무위원 임기를 돌아보며 -



남상욱

해양경찰 총무위원

한국선급 전문위원

nsw0012005@naver.com

I. 들어가는 말(서언)

아니 벌써! 세월유수(世月流水)라는 말이 실감 난다. 해양경찰위원회가 발족된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다. 해양경찰위원회 제1기 활동을 마치는데 관련 기고문이나 논문을 썼으면 좋겠다는 위원회 담당관의 말을 듣고 스치는 생각이었다. 한편으로 ‘글재주가 없고 관련 논문을 쓸 만큼 학문적 성과도 없는데 무엇을 쓰지?’라고, 고민하며 쓰지 말까? 라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초대 위원회 활동이었고 또 위원들이 전원 교체되는 2기 위원회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할 위원회를 위해서 잘했으면 잘 한대로 못했으면 못 한대로 무엇이라도 남겨서 참고가 되거나 또는 반면교사 거리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지난 3년간 총무위원의 역할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적어 보기로 하였다.

1. 총무위원으로 선임되기까지

본인은 약 30년의 세월을 해양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운영하는 프로그램사업인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의 전문경력인사로서 목포해양

대학교에서 객원교수라는 직책으로 해양경찰에 봉직하며 체득한 경험을 해양경찰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수하고 있었다.

2019년 11월경 해양경찰위원회 설립추진단의 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2020년 2월에 출범예정인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을 할 의향이 있느냐? 있다면 3배수의 위원후보로 추천되며 인사검증 과정을 거쳐 청와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요지였다.

그 간 현직 후배들이 해양경찰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렵פות이 들었으나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해양경찰법이 2019년 8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 2월 시행에 들어간단다. 그 법에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근거로 해양경찰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단다. 여러 훌륭한 퇴직 선후배들이 있는데 내게 기회를 주겠다니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한편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크고 막중하며 특히 초대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부족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 선뜻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데 추천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 승낙해도 괜찮다는 담당자의 말에 위원후보를 수락했다.

그 후 잊고 있었는데 인사검증, 선임절차과정 등을 거쳐 2020년 1월경에 위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담당관실 담당자의 연락을 받게 되어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2. 임기를 시작할 때의 각오

제1기 위원회가 2020년 2월 21일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다진 각오는 ‘한술에 배부르랴?’는 것이었다. 즉 해양경찰위원회가 해양경찰 문민 통제를 위해 업무 전반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커서 위원의 영향력도 클 것이므로 마음먹으면 현직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여 보았다. 그러나 막상 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현직에서 하지 못한 것을 다 할 수도, 그럴 능력도, 그럴 여건도 안 될 것이라는 판단도 들었다. 그래서 크게 많은 욕심을 내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이 사랑하는 해양경찰이라는 큰 집을 짓는 터에 기둥을 세울 주춧돌 하나를 놓겠다는 심정으

로 그와 같은 위원회 활동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중국의 시인 이양연이 야설(野雪)¹⁾이라는 시에서 ‘오늘 내가 밟고 간 이 발자국이 뒷사람이 밟고 갈 길이 될 테니’(今朝我行跡 遂作後人程)라고 읊조린 그 심정으로 말이다.

3. 해양경찰법을 제정한 현직 후배들의 노고 치하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에서 독립하던 1996년 이래 숙원사업이었다.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해양경찰청법」 제정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잠시 회고해 보면, 1996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출범하였고, 기존 경찰청에서 분리되면서 해양경찰에 관한 규정이 「경찰법」에서 삭제되었다. 당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는 해양경찰의 직무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권력을 직접 행사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임무를 통해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직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2005년 ‘조직발전 T/F’를 구성하여 「해양경찰청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당시에는 지방해양경찰청이 신설되기 전이었던 까닭에 조직체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자체 중단되었다.

이후,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이상배 의원이 「해양경찰청법」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법제처 등 관련 부처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반대로 상임위 소위 심사도 받지 못한 채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11년 제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김을동 의원이 「해양경찰청법」을 재차 발의하였으나, 이 역시 국토해양부의 이견과 내부적인 반대의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한편으로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었다. ‘「해양경찰청법」이 제정되어도 크게 바뀌는 게 없으므로 실익이 없다.’, ‘조직을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개정이 곤란할 것이다.’, ‘해양경찰청장이 정무직화 될 것이다.’, ‘해양경찰신분이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로 전환될 것이다’ 등으로 우려를 하

1) 野雪(이양연) - 穿雪野中去(천설야중거) 눈을 뚫고 들판길을 걸어가노니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자
今朝我行跡(금조야행적) 오늘 내가 밟고 간 이 발자국이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뒷사람이 밟고 갈 길이 될테니

며 반대하였다. 이러한 내외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다, 2014년 ‘해양경찰60주년’을 계기로 제정을 재추진하고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세월호 사고에 따른 조직해체와 함께 「해양경찰청법」 제정 추진은 중단되었다. 그 후 필자는 2016년 말 퇴직을 하게 되어 잊고 있었는데 현직의 후배들이 힘과 뜻을 모아 추진하여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2019년 8월 20일 「해양경찰법」²⁾이 제정되었다.

해양경찰이 「해양경찰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배경은 첫째,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로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독립적인 외부 인사에 의해 정책을 평가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공권력 행사기관으로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재하였다. 즉, 해양경찰청은 검찰청·경찰청과 같이 국민의 신체와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 사법경찰권을 가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염려와 국민의 법적 안정성·예측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서 기관들이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 엄격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찰권을 행사함에도 법률유보가 없었다.

셋째, 해양경찰의 특수한 직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법제 현실이다. 해양경찰은 창립 초기에는 영해 경비와 어업자원보호 업무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각종 해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수색구조 및 안전’을 비롯한 ‘해양치안 질서유지’, ‘해양오염방제를 통한 해양환경보전’ 및 ‘독도·이어도에 이르는 해양주권수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업무가 추가되었다. 현재에는 육상에서는 볼 수 없는 국내 유일의 해양종합법집행기관으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과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해양경찰의 직무 범위와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데 반해 법·제도적으로는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계속되었다.

2) 처음에 출발은 해양경찰의 조직법임을 강조하여 「해양경찰청법」이라고 제명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해양경찰법」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해양사고 발생 시마다 꾸준히 지적받는 전문성 부족이었다. 해양경찰의 직무는 해양에서의 경찰업무에 더하여 안전과 종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해양지식이 겸비되어야 하는 특수한 분야이다. 특히 국가 간 대외업무의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해양경찰 조직이 안정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려면 다른 부처와 차별화된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여된 입법적 기반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역대 청장 16명³⁾ 중 14명이 경찰청 출신으로 해양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반복되었다.

다섯째, 조직의 기반 약화와 신분의 불안정성이었다. 1953년 내무부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이후 상공부, 내무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국민안전처 등으로 소속과 명칭이 자주 변경됨과 함께 업무의 범위도 변화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변천⁴⁾은 국민의 여망이나 소속 직원들의 의사보다는 주로 중앙정부 판단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직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직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왔다.

이같이 그간 「해양경찰법」을 추진하였는데 앞서 적시한 이유 등으로 폐기되거나 보류되어 지지부진하다가 2019년 8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해양경찰법」 제정이 완료됨으로써 비로소 해양경찰이 법적, 제도적으로 완전한 중앙부처로서 독립관청이 된 것이다. 독립 외청이 되고자 노력한 지 26년여만의 쾌거였다. 본인도 현직에 근무할 때 입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 법률 하나를 제정하는 데 무수한 어려움이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설득과 노력, 열정을 불태웠는지 알기 때문에 해양경찰법을 제정한 현직 후배들의 노고와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와 경의를 표한다.

3) 1996년 해양수산부외청으로 독립이후 해양경찰청장은 16명이다.(경찰청 출신 14명, 해양경찰청 출신 2명)

4) 1953년 내무부 치안국 해양경찰대, 1955년 상공부 해무청 해양경비대, 1962년 내무부 치안국 해양경찰대, 1991년 경찰청 해양경찰청, 1996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2008년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2013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2014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2017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II. 위원회 활동

1. 2020년 위원회 활동

2020년 2월 21일 위원회 구성 이후 2020년 기간 중 총 22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중 정기회의는 18회, 임시회의 2회, COVID-19로 인한 서면회의 2회 및 2회의 현장 방문 등이었다. 그중 기억에 가장 남음과 동시에 벅찬 감회를 느꼈던 때는 제1회 임시회의와 제2회 임시회의였다. 첫 임시회의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의결하고 해양경찰위원회 초대 총무위원을 선임하는 회의였으며, 두 번째는 해양경찰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였다.

첫 임시회의 때는 본인이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이 된 것만으로도 감회가 새로운데 총무위원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되어 더욱 잊지 못하게 되었다. 두 번째 임시회의는 아직 제1회 정기회의를 하기도 전에 「해양경찰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하는 자리였고 법률에 근거하여 자체에서 발탁된 첫 청장(과거에 두 번의 자체 청장이 있었으나 「해양경찰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기는 처음)이기에 감회를 넘어서 감격하였다. 물론 과거에 역임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해양경찰의 숙원이던 「해양경찰법」에 따라 청장이 임명된 것에 대한 감격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위원들의 질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해양경찰의 업무를 바라보며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날카롭게 물으면서도 해양경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 본인의 주요 질의:** 수색구조 관련 국내외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의향이 있는지? 민간세력과 확실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 연안 10마일 권내 사고에 대한 대응, 예방책이 있는지? 국민과 소통하는 멋진 해양경찰을 만들어 주길 기대함.

그렇게 시작된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의 활동이 매월 2회의 정기회의와 주 1회 정도 입청하여 정기회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부의될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 회의와 자료 수집 등을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현직 후배들에게 전화와 문자, 메일 등으로 소통하며 위원회 회의를 준비하였다.

특히 위원회 원년인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각종 법령의 현행화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위원회 담당관실 직원들에게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 결과 총 88건의 부의된 법령 중 32건은 원안 의결, 56건은 수정의결하고 그 밖에 보고안건 46건과 기타 3건의 안전을 처리하였다. 심의안건 88건 중 수정의결이 56건으로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여 위원회가 거수기의 역할이 아닌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감독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더하여 특히 기억나는 것은 남성이 대다수인 해양경찰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김효선 위원이 제기하여 2020년 11월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취해졌다는 점이다. 이로써 후에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양성평등위원회’의 발족과 양성평등정책팀이 정식 직제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해양경찰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 제고 교육,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운영 등 각종 양성평등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2. 2021년 위원회 활동

2021년에는 COVID-19의 여파로 24회의 회의 개최 중, 주로 화상회의를 하고 대면 회의는 3회에 그쳤다. 총 상정안건은 127건으로 의결안건 91건, 보고안건 35건, 기타 1건이었다. 의결안건 91건 중 원안 의결은 33건, 수정의결 56건, 재상정의결 2건, 기타 안건으로 동의를 1건이었다. 여기서 심의안건 91건 중 수정의결이 56건, 재상정의결 2건으로 전체 안건 중 수정 또는 재상정 의결은 64%를 차지한바, 제1기 해양경찰위원회 제2차년도 회기도 나름대로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의 인권피해와 수사권 남용 등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 법령·행정규칙을 면밀히 심의

하고, 태안해양경찰서 등 5개 관서 유치실 환경 개선⁵⁾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유치인 처우 향상에 기여하였고, 수사 행정 감시를 담당하는 수사 인권관의 자격 검증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사환경을 개선하였다. 그 외에도 해양경찰관 채용 및 인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 및 제한 등은 없애거나 완화하고 해양경찰 채용시험 체력 검사의 남녀 형평성 유지를 위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3. 2022년 위원회 활동

2022년의 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면 우선 숫자로는 총 23회의 정기회의 중에 다룬 의결 안건은 106건이며 이중 원안 의결 51건, 수정의결 52건, 재상정 의결 3건이며, 보고안건은 33건이었다. 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재상정 의결이 52%로 위원회 1차 년도나 2차 년도 회기에 비해서 다소 줄기는 했으나 법령 정비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이유를 말해 주는 한편으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였다. 즉 해양경찰청에서도 각종 법령에 대한 입안 준비를 철저히, 내실 있게 준비해 오고 있다는 의미이며 위원회의 법령제도 정비가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2022년 활동을 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심의안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수난대비 집행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비전을 명확히 표시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함으로써 집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의하였다.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전부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상위 법률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신설내용을 반영하고 현행규정과 불일치 조문은 정비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절차를 마련하였다.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계 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과 관련하여 매년 교육기관별 과목변경에 따른 재학생·졸업생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사과목 이수에 대한 학점 인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여 후에 조치 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피해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한 점 등이다.

5) 2021년 12월 태안해양경찰서 등 5개 관서 유치실 환경개선 공사 완료

Ⅲ. 차기 위원회에서 개선하거나 검토해야 할 사항

제1기 위원회 활동은 해양경찰의 입장에서는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찰위원회가 있어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었다고 담당관실 근무 직원들을 통해 들어왔고 본인 역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경찰위원회 사례를 살펴보고도 한 적도 있다. 경찰위원회는 1991년부터 운영되었으니 30년 이상을 운영하여 조직 기반이라든가 기능 등이 반석에 올라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경찰위원회의 위원들이 임기를 마치며 백서에 남긴 기고문이나 논문을 보면 아직도 정비하고 보강하고 보완할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위원회와 경찰청장 간 ‘균형과 견제’를 위한 위원회의 실질화로써 자문기관이 아닌 실질적인 합의제 기관으로의 자리매김, 위원장 상임제 그리고 위원회 구성 확대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30년 넘게 운영한 조직에서도 아직 위원회의 법적 성격이나 기능, 구성 등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 운영의 실질화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신생 조직인 해양경찰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는 시사점도 될 수 있다.

본인이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1기 위원회 활동을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만드는데 주춧돌 하나를 놓는다’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활동을 하였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렇게 했노라’고 스스로 위안은 하고 싶다.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필자가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위원회가 했으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본다. 이러한 바람은 오로지 본인 개인의 생각임을 전제로 한다.

먼저 조직 분야이다.

현재 담당관실 업무는 기획재정담당관실에 해양경찰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을 두어 기획재정담당관이 겸직하고, 회의안건 사전검토(경정 1), 검토보고서 작성(경감 1, 경위 1), 행사기획 및 홍보(일반 7급 1), 행정 및 예산업무(경사 1) 등 총 5명이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여기서 정원은 3명이고, 2명은 각국에서 유동 정원을 차출하여 운영하고 있다. 3년여간 위원회 운영결과 기획재정담당관이 기존

업무인 기획, 예산, 국회, 국유재산 등에 추가하여 해양경찰위원회 간사업무를 겸직함으로써 과중한 업무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담당관 소관 예산편성, 집행, 결산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으며 동시에 위원회 간사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기능 간 업무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다.

유사한 기관인 경찰위원회를 살펴보면, 기획담당관 1인이 국가경찰위원회 운영사무를 겸직하는 것은 업무량 과다 등의 현실적 한계로 15년부터 비직제 조직으로 경찰위원회 담당관(총경급)을 운영하다가, 22년 2월 국가경찰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정책지원담당관(총경)을 신설하고 예하에 안전심의의 전담인력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인력 총 13명의 정원을 배정했다고 한다.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은 해상과 육상에서 국민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한 일반 사법 경찰기관으로 위원회의 근거 법률, 소속, 사무운영이 유사한 체계이므로 경찰청과 비교하여 위원회 운영지원조직 체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양경찰위원회는 2020년 출범 이후 대면·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총 73회(월평균 약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총 302건의 의결안건 중 59%의 수정의결·재상정 의결 등을 함으로써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범사례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앞으로 조직보강에 대한 제안을 해보자면 상정안건의 사전검토 및 위원들에게 설명 등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수행능력 및 법령·행정규칙 등 법률적 지식을 고루 갖춘 전담담당관(간사 총경1)이 필요하다. 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쟁점 사항 발굴, 관련 법령 비교, 개선방안 및 대응책에 대한 검토를 위해 안전검토 담당 2명, 임시로 운영 중인 유동 정원 2명을 기준정원으로 전환도 필요하다.

둘째, 필요한 예산확보이다.

해양경찰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경찰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해양경찰의 주요정책과 법령·행정규칙을 심의·의결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이러한 기구가 해양경찰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보완하는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위원회 출범 이후 첫해에는 예산편성이 종료된 관계로 제외하고 21년에는 예산요구액의 26%, 22년에는 44%, 23년도에는 46%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부족한 예산편성으로 부족분은 해양경찰 행정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해양경찰을 감시하고 통제하여야 할 위원회가 해양경찰청에 예산집행이 종속됨으로써 독립적인 감시통제 기능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

앞으로 안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자료 수집·조사 등에 필요한 위원 수당과 백서 제작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수용비, 국내여비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셋째, 총무위원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해양경찰법」 제정 추진 시 해양경찰위원 중 1인은 정무직 상임위원으로 하도록 법률안을 마련⁶⁾ 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⁷⁾에 따라 전원 비상임으로 구성할 것을 제시하여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의견을 수용하여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수정 의결되었다고 한다.

한편 경찰청의 경우, 국가경찰 위원회 상임위원은 2009년 4월 ‘자문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1년에 「경찰법」이 제정되어 현재도 상임위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행정위원회(합의제행정 기관)가 아닌 위원회에 정무직 상임위원을 둔 사례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해양경찰위원회에 상임위원이 필요한 이유는 원활한 회의운영과 전문성 있는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회와 안전

6) 「해양경찰법」 의안 원문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7) 행정기관위원회법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목적에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적정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행정위원회)인 경우

소관부서와의 계속적·상시적 소통 및 업무 조율 등이 요구되며, 해양경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장 임명 등의 시 차관급 인사인 해양경찰청장 후보군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를 위해 상임위원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위원은 둘 수 없으므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해양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위원 7명 모두 임기의 시작과 끝이 같으며 일시에 다음 기수로 승계된다. 「해양경찰법」 제7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경찰법」 제정 당시 부칙⁸⁾으로 경찰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를 달리 규정하여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다음 기수와 1년간 중첩되도록 하였다.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모든 위원이 일시에 다음 기수로 승계되는 경우와 일부 위원의 기수 간 중첩 기간(1년)을 두는 경우를 살펴보면 장단점은 있는 듯하다. 우선 일시에 교체되는 경우, 모든 위원이 중첩 기간 없이 임기 시작과 끝이 같아서 기수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위원 간 친분과 유대감 형성이 잘되는 데 반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 진행 및 방식 등 위원회 운영 측면에서의 계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위원의 기수 간 중첩 기간(1년)을 두는 경우, 기수 간 중첩된 위원의 경험 등을 통해 그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 위원회 심의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기수에 대한 소속감이 저하되고 기존에 운영해 왔던 방식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경험이 있는 위원들의 의견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을 우려도 있다. 또한, 중첩 기간을 두는 위원을 특정직책(위원장 및 총무위원)이 있는 위원으로 할 경우, 임기 종료에 따라 선임 시 직책을 고려하여 선발하게 되므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장 선발에 대한 규정 준수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8) 경찰법 부칙(1991.7.31.시행) 제2조(최초위원의 임기)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7인중 2인(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3년, 5인은 2년으로 한다.

이러한 장단점을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운영은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요 업무·정책 보고 또는 현장 방문 등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2기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면 위원 임기에 관하여 법령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런 모든 활동이 가능하고 보람을 느끼게 해준 것은 우리 위원회 1기 위원님들과 담당관실 직원들이라고 생각한다. 사공 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해양경찰에 대해 조언과 질책 그리고 격려 등을 함으로써 해양경찰의 법령, 제도, 정책을 한 단계 끌어 올렸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해양경찰조직으로 나아가게 하는 초석을 깔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후방에서 위원들의 법령, 제도, 정책심사를 위해 자료 작성과 일정 조율, 각 부서 간 업무 조율 등 묵묵히 제때 제공하고 수행해 준 위원회 담당관실 직원들의 노고도 잊을 수 없다. 여러분 덕분에 해양경찰위원회 제1기 총무위원의 역할을 큰 과오 없이 수행했다는 생각에 오로지 감사할 뿐이다.

대한민국 해양경찰!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해양의 국제적 규제와 우리의 법제



박찬호

해양경찰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hpark@pusan.ac.kr

1. 서

2022년은 ‘바다의 현장’이라고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이하에서는 “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몰타(Malta)의 유엔대사였던 Arvid Pardo는 1967년 유엔 총회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의 수역과 자원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하고, 이를 규율할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들자고 주장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이 성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협약 성립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는 Pardo의 제안에 앞서 이미 미국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1966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Johnson은 해양의 광물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식민경쟁이 해양강대국들 간에 야기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해 아래 해저지역을 차지하려는 경쟁을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 심해저가 모든 인간의 유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해저위원회에 제출된 원칙선언 초안에 서도 심해저에 대한 국가의 주권 행사 및 주장을 금지하고, 국제공동체의 목적에 맞는 심해저 개발제도를 규율할 새로운 국제제도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1970년 닉슨의 해양정책선언 및 해저위원회에 제출된 국제심해저에 관한 협약 초안에

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인류 공동의 유산’ 원칙과 심해저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담당할 국제기구의 설립은 미국이 정부가 제시하고 수락한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심해저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약 규정들이 미국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약을 서명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도 협약의 비준에 소극적이었는데, 1994년에 심해저제도에 관한 선진국들의 입장을 반영한 이행협정이 채택됨으로써 협약의 심해저제도는 대폭 수정되었고 선진국들의 협약 참가도 증가하게 되었다. 협약은 1994년에 발효한 이후 2022년 12월 현재까지 168개국이 가입함으로써 보편적인 규범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해 탄생한 유엔해양법 협약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의 법제에 반영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해양법의 발전

2.1 해양에 관한 UN 이전의 입법화 작업

UN이 성립되기 전의 해양에 관한 입법화 작업은 주로 민간학술단체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에 공헌한 단체로서는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하버드 국제법연구회(Harvard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영해, 해양오염, 해저자원 등과 같은 해양의 여러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 및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관행을 수립하고 해석함으로써 국제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국제연맹에 의한 공식적인 입법작업은 1924년 연맹산하에 입법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동 위원회는 국가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연맹총회는 1924년에 국적, 영해, 국가책임 등 세 가지 문제를 입법화할 목적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1930년 3월 13일부터 4월12일까지 Hague

에서 개최된 최초의 국제법 입법 회의에서 영해에 관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으나 영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 초안 마련에는 성공하였다. 동 협약은 비록 협약으로 체결되지는 못했으나 이후의 해양법 입법화 작업에 기여한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2.2 Truman선언과 관할권의 확장

1945년 9월 28일에 미국 정부는 Truman선언이라는 2건의 해양관할권확장에 관한 선언을 하였다. 첫째 것은 대륙붕에 관한 것으로 미연방 정부는 미국의 영해에 인접한 대륙붕의 해저와 지하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두 번째 것은 공해어업에 관한 것으로 미국 영해 밖의 공해상의 어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Turman선언은 해양관할권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의 200해리 선언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1958년까지 20개국 이상이 해저 지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각기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관할권 확장 선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륙붕의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륙붕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대륙붕의 상부 수역에까지 관할권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가 1952년 1월에 일본 어선들의 한반도 주변에서의 어업을 규제하기 위해 선포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선언」(일명 평화선) 역시 이러한 국제선례에 자극받아 행해졌던 것이다.

그런데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상부 수역까지 확대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해상의 어업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항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대륙붕제도가 국제 관습법의 일부가 되었는가에 대한 논란은 1958년에 대륙붕에 관한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해결되게 되었다.

2.3 제 1차 UN해양법회의와 4개의 제네바 협약

Truman선언을 필두로 각국의 해양관할권 확장으로 인한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자 UN은 1958년 제네바에서 제1차 UN해양법회의(UNCLOS I)를 소집하였다. 동 회의

는 UN의 국제법위원회가 1956년에 완성한 초안을 기초로 작업을 하였다. 국제법 위원회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고무할 의무가 UN총회에 있다고 규정한 UN헌장 제13조에 따라 1947년 11월 21일에 설립되었다. 25명으로 구성된 국제법 위원회는 법전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법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총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임무를 띠고 있다.

86개국이 참가한 제1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해양에 관한 다음과 같은 4개의 협약이 채택되었다: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공해상의 어업 및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 이들 협약 중 앞의 세 개의 협약은 기존의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해양법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해상의 어업 및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은 관습법이 부과하는 기존의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것이 되지 못했다.

제네바 협약은 4개의 협약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국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비준을 하였기 때문에 발효와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해어업에 관한 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협약만을 비준했고, 일본은 공해어업 및 대륙붕 등 2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어느 협약에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부 기본적인 조항을 제외하고는 유보가 가능해서 제네바 협약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법 외적 요인으로서 해양개발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협약의 실효성은 더욱 감소하였다. 예를 들면 대륙붕에 관한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륙붕의 한계는 수심 200m까지라는 수심기준 및 200m를 넘는 곳에서는 자원개발이 가능한 곳까지라는 소위 개발가능성(exploit ability) 기준의 2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해양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개발가능성 기준에 의한 대륙붕의 한계 결정은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제1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해양관할권의 기준이 되는 영해의 폭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UN총회는 1958년 12월 10일의 결의에 따라 제2차 UN해양법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2.4 제 2차 UN해양법회의

1960년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88여 개국이 참가한 제2차 UN해양법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주로 영해의 폭과 어업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었는데, 의결정족수 2/3찬성에 단 한 표차로 6해리 영해에 6해리 어업수역을 인정한 타협안 채택에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영해의 폭에 대한 합의는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 작성된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채택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2.5 제 3차 UN해양법회의

2.5.1 성립배경

1958년 해양에 관한 4개의 제네바협약이 발효한 후에도 세계 각처에서는 해양관할권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그리고 일련의 대형 유조선 사고에 대한 해양 오염문제는 기존 해양법의 미비점을 노출하였고, 우월한 해양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에 의한 해저 자원개발 독점에 대한 개도국의 우려는 가중되었다.

더욱이 1958년 협약 성립에 참여하지 못한 신생 개도국의 수적 증가에 따라 기존의 해양규범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의 기운이 일었다. 이처럼 급속한 기술 혁신과 해양환경 보호, 다수 개도국의 등장으로 인한 국제 사회 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양법 질서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2.5.2 경과

가) Arvid Pardo의 제안

1967년 제22차 UN총회에서 Malta대표 Arvid Pardo는 UN으로 하여금 국가 관할권 밖의 해저와 해상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자원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관한 선언과 조약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국가관할권 밖의 해저 활동을 규율하고 감독하며 통제할 새로운 국제 제도의 설립을 요구하였다. 즉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선언하여 영유권 주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개도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인류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하자는 것이다. Pardo의 제안은 심해저가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의 독점물이 될 것을 우려한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나) 수시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의 설치

1967년 UN 총회는 Pardo의 제의를 받아들여 심해저의 평화적 이용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위하여 35개국으로 구성된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및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수시위원회(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를 설치하였다. 이 수시위원회는 1968년에 상설해저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로 변경되었다.

한편 1970년에 UN 총회는 해양 전반에 대한 국제규범을 설립하기 위한 해양법 회의 개최를 결정하고 위원회가 초안을 준비하도록 요구하였다. 해양법 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는 심해저 제도뿐만 아니라 공해, 대륙붕, 영해, 접속수역, 어업 및 공해 생물자원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 해양과학 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한 것은 해양공간의 문제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UN 총회는 각 소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무총장이 제3차 UN 해양법회의의 제1, 2차 회기를 개최하도록 요구하였다.

다) 제3차 UN해양법회의의 소집 및 경과

1973년부터 시작된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협상 의제들이 3개의 위원회에 각각 배정되어 심해저 문제는 제1위원회에서, 영해 접속수역, 해협,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등은 제2위원회에서, 그리고 해양환경의 보존, 과학조사 및 기술개발과 이전 문제는 제3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회의 진행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제1회기는 1973년 뉴욕 본부에서 개최되었는데, 회의 구성과 조직을 결정하였다. 제2회기는 1974년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되었는데, 표결에 관한 신사협정이 채택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해양문제는 상호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일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단일해양법 협약의 채택이 바람직하여 실질문제에 있어 컨센서스에 의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모든 노력이 끝날 때까지는 표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75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회기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교섭초안준비에 착수하여 비공식단일교섭초안을 작성하였다. 1976년 제4회기에서는 비공식단일교섭안(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을 바탕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수정된 비공식단일교섭안(Revised Single Negotiating Text)을 작성하였다. 1977년 제6회기에서 비공식통합교섭안(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이 작성되었고, 이의 수정을 거친 후에 제9회기 속제회의에서 협약 초안으로 발표되었다. 1982년 4월 30일 제11회기에서 찬성 130, 반대 4, 기권 17로 협약문이 채택되어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의 Montego Bay에서 서명식을 가짐으로써 「바다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마침내 성립되었다.

전문과 본문 320개 조문 및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이 협약은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하게 되는데 1994년 11월 16일에 이 요건을 충족하여 발효하였다. 이 협약 당사국 간에 있어서는 이 협약이 1958년 제네바 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협약 제311조)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에는 1958년 제네바 협약은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1996년 1월 29일 협약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여, 이 협약은 1996년 2월 28일부터 한국에 발효하게 되었다. 2008년 12월 19일 현재 157개국이 본 협약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데, 심해저제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은 아직까지 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선진산업 국가들이 반대하였던 심해저제도(협약 제11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는 협정(일명 이행협정)이 1994년에 채택되어 1996년에 발효하였다. 이 협정은 선진국의 심해저개발에 관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유엔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

3.1 해양관할수역의 기선

1958년 4개 제네바 협약에서는 연안국의 관할수역으로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등을 인정하였으나, 협약은 이들 외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군도국가의 군도수역을 추가하고 있다. 이들 수역의 범위는 기선으로부터 측정되는데, 기선에는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는 통상기선과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이 있다. 직선기선은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 설정될 수 있는데,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는 등 제한이 있다. 한국은 동해안(영일만 및 울산만 제외)에는 통상기선을 채택하고, 연안에 섬들이 산재해 있는 남해와 서해에서는 직선기선을 채택하고 있다.

3.2 영해

영해는 연안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수역인데,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인정된다. 영해에서 연안국의 주권 행사는 협약과 국제법 규칙에 따라 제한받는다. 모든 국가의 선박은 연안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데,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통항은 무해하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 국가는 일부 선박에 대해 사전 통고나 허가받도록 하여 타국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도 군함의 경우에는 영해를 통과하기 3일 전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연안국은 외국 선박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해통항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특정국의 선박 등에 대한 형식상 또는 실질적인 차별을 할 수 없고, 통항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

3.3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제도

연안국의 영해로 이루어진 해협에서는 무해통항보다 더 자유로운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는데, 잠수함의 잠항통항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비행도 인정된다. 그러나 통과통항 중에 해협연안국의 허가 없이는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한편 해협연안

국의 섬과 본토로 이루어진 해협이나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 사이에 있는 해협에서는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제도가 적용된다. 대한해협에는 공해대가 존재하고 있어 해협통항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제주해협은 섬으로 이루어진 해협으로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제도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3.4 접속수역

접속수역은 영해에 접속해 있는 수역으로서 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다. 접속수역에서는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을 방지하거나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3.5 군도수역

군도수역은 전체적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군도로 구성된 군도국가가 군도의 가장 바깥쪽 지점을 연결한 선(군도기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이다. 군도기선 설정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는데, 기선의 수역의 면적과 육지면적의 비율이 1대 1에서 9대 1사이여야 하고, 기선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100해리를 초과하지 군도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현저히 벗어날 수 없다. 군도국가는 군도수역에서 주권을 갖지만, 기존의 협정, 전통적인 어업권과 기존 해저전선 등은 존중되고 제3국의 무해통항권도 보장된다.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20여 개 국가가 군도수역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3.6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인정되는데, 연안국은 경제적 목적을 위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갖는다. 즉, 연안국은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과 같은 경제적인 개발과 탐사를 위한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인공섬 등의 설치와 이용,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의 보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한편 제3국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와 이러한 자유와 관련되고 협약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해양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

3.7 대륙붕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연안국의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한계까지, 혹은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 및 그 지하이다. 여기에서 대륙변계는 대륙붕·대륙사면·대륙융기의 해저와 그 지하로 이루어지는데, 대륙변계가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적암의 두께가 대륙변계의 바깥 끝에서 대륙사면의 끝까지 거리의 최소한 1%가 되도록 하거나, 대륙사면의 끝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않도록 정한다. 이 경우에도 대륙붕의 외측 한계는 기선에서 350해리를 초과하거나 2,500미터 등심선에서 100해리를 초과하지 못한다.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확정되고, 200해리 밖에 있는 대륙붕의 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해저기구를 통해 금전을 지급하거나 현물을 공여한다. 해저기구는 이를 개발도상국들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여 공평분배의 기준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에 분배한다.

3.8 공해

공해는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수역으로 모든 국가에 개방되고 공해의 자유원칙 적용된다. 공해의 자유는 특히 항해, 상공비행,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 인공섬 등의 건설, 어로, 과학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공해상의 선박은 원칙적으로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하는데, 선박이 해적행위나 노예거래, 무허가 방송에 종사한 경우, 또는 무국적선인 경우에는 제3국 군함의 임검권이 인정된다. 특히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적행위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 모든 국가는 해적선·해적항공기 또는 해적이 지배하고 있는 해적선·해적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안의 사람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으며, 나포 국가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3.9 심해저

심해저(the Area)란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를 말하는데,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어떠한 국가도 심해저와 그 자원에 대하여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고, 어떠한 국가나 자연인 혹은 법인도 그 자원을 독점할 수 없다. 그리고 심해저는 모든 국가가 차별 없이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개방된다. 기본적으로 심해저 자원은 심해저 공사(the Enterprise)와 심해저 기구(the Authority)와 제휴한 당사국 또는 기업체에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3.10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협약은 모든 당사국들로 하여금 가장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오염을 오염원에 따라서 육지로부터의 해양오염, 해저활동으로 인한 오염, 폐기물투기로 인한 오염, 선박에 의한 오염, 대기로부터의 오염으로 구분하여 각 오염원별로 규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3.11 해양분쟁해결제도

해양분쟁은 당사자들 간에 임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속력 있는 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회부되는 재판소에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등 4가지가 있는데, 협약 당사자들은 협약을 서명, 비준, 가입할 때 혹은 그 이후 언제라도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4가지 제도 중의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중재재판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또한 분쟁 당사국이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해결분쟁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해양경제계획 등과 관련된 분쟁, 군사활동 등에 관한 분쟁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수행하는 권한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강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4월 18일 자로 위 3가지 경우에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4. 한국의 해양법 실행과 발전 방향

4.1 기선제도

한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을 통상기선으로 하고 지리적으로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영일만과 울산만을 제외한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지 않은 동해안에는 통상기선을 채택하고, 섬이 흩어져 있는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직선기선을 채택하고 있다. 직선기선의 기점은 동해안에 있는 1번 기점인 달만갑 으로부터 서해의 23번 기점인 소령도 까지 모두 23개이다. 그런데 직선기선은 23번 기점인 소령도에서 종료하는데, 소령도 이북 지역에 있는 도서를 연결하여 직선기선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소령도에서 소청도, 백령도를 기점으로 연결하거나 소령도에서 바로 백령도를 연결하는 직선기선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소청도와 대청도의 육지쪽 연안이 북한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경우에는 실현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간조노출지에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선기선의 기점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안에 간조노출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대 등 시설물의 설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선기선의 채택은 해양관할수역의 확장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2 영해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통항할 권리인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한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에서도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 군함이나 비상업

용 정부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통항 3일 전까지 외교부 장관에게 선박의 선명, 종류 및 번호, 통항 목적, 통항 항로 및 일정을 통고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 군함의 우리 영해 통과에 대해 사전 통고를 요구하는 것이 국제법과 일치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 관계를 고려하고, 주변국인 중국이 군함의 영해 통항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 통고제도를 유지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인정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향적으로 폐지하여 항해의 자유를 지지하는 국제적 경향에 부응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4.3 해협제도

한국에서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해협에는 대한해협과 제주해협이 있다. 그런데 대한해협에는 중간에 공해대가 형성되어 있어 국제해양법상 해협의 통항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고 있다. 한편 제주해협은 한국의 영해에 속하고 있어, 국제법상 섬과 본토로 이루어진 해협에 적용되는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제도가 적용되는 해협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외국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 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는 경우에 사전에 통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에서는 통과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공해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해협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최단 거리는 약 23해리 정도인데, 양국이 대한해협에서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한해협이 양국의 영해에 속하게 되고 해협 중간에 공해대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한해협에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각기 국내법으로 대한해협에서의 영해의 폭을 3해리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한해협에는 공해대가 형성되어 있어, 국제법상 해협의 통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국 잠수함을 비롯한 군함과 항공기가 영해기선에 까지 근접하여 항해하거나 비행이 허용되어 안보에 위협적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면에 공해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영해에서는 무해통항제도를 통해 외국 군함과 항공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영해의 최대 폭이 12해리까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대한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공해대를 남기면서 우리의 영해의 폭을 최대한 넓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4.4 접속수역

한국은 1995년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개정하여 접속수역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을 접속수역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일정 수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24해리 이내의 접속수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는 이에 관해 규정한 바가 없다. 그리하여 24해리 이내의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역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거나, 설정의 필요가 있는 수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4.5 배타적 경제수역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제정하여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인접 국가와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으로 해양경계획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경계획정이 되지 않았다. 이 경우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관계국과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국과의 중간선 바깥쪽에서 법 집행을 자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되는 것을 굳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해양경계획정의 미비로 인해 중첩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관련 국가들과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어업 분야에서의 관할권을 규율하고 있지만, 그 이외 분야에서는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분쟁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해양과학조사 등을 규율하는 별도의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생물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와 관련한 내용들이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해양생명자원법 등에 산재하여 있으나 통합적인 내용의 법률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6 대륙붕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변경하며 대륙붕제도를 도입하였다.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이거나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인 선언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부터 연안국에 부여되어 있다. 그리하여 국내법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었으나 대륙붕에 대한 우리의 해양권익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상의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도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은 1969년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한반도 주변 대륙붕 개발에 참여하고, 200해리 밖의 대륙붕 외측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유엔 관련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대륙붕 광물자원의 개발에 국한되어, 대륙붕의 생물 및 무생물자원의 개발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7개의 광구가 설정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광구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간에 중첩되는 대륙붕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2028년에 종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7 심해저

유엔해양법협약을 탄생시킨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심해저와 심해저자원을 인류공동유산으로 하고 이를 규율할 국제적인 제도를 마련하자고 주장한 Pardo의 제안에서부터 개시되었다는 측면에서 심해저 제도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심해저 개발제도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대립하였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루한 논의 끝에 채택된

협약 제11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반대하며 협약 비준을 거부하였다. 선진국들의 참여 없이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자체가 어렵게 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제11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이 1994년에 채택되었다. 이를 계기로 선진국들은 협약을 비준하게 되었고, 60번째 국가가 비준한 때로부터 1년 후인 1994년 협약은 발효하게 되었다.

협약 발효와 더불어 심해저와 그 자원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망간단괴자원개발에 대한 광업규칙, 해저열수광상광업규칙, 망간각광업규칙 등을 제정하여 심해저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하기 이전부터 심해저 개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데, 1994년에는 태평양 지역에서 망간단괴 개발광구를 유엔에 등록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망간단괴 개발기술을 개발하여 상업적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해저 자원개발과 관련된 국내 입법은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이에 가칭 심해저 자원개발법을 제정하여 심해저 자원 분야의 R&D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기업 및 연구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8 종합적인 측면

한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비준한 조약의 내용을 국내법규에 반영하고 있는데 해양관련 국제법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 내용들이 개별 법률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우리 해양관련 법제의 개선점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영해에서의 외국 군함이나 정부선박의 사전 통고제도는 국제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할수역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대한해협에서의 영해의 폭을 현행 3해리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조만간 상업적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국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이에 관한 초안(심해저 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제해양법학회, 유엔해양법협약해설서 I, II, III, 2017-2019.

박찬호·김한택, 국제해양법, 제3판, 와이북스, 2016.

박찬호, 섬의 국제법상 지위 : 바위섬의 해양관할권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2호, 2002.

——, 대한해협의 통항제도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제17권, 2003.

——, 해양경계획정의 원칙과 방법에 관한 소고 :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8권 1호, 2007.

——, 국제법상 섬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50권 2호, 2009.

——,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미국의 역할, 해운통상법연구, 제3권 2호, 2012.

——, 국제법상 바위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국제판례와 국가실행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4권 2호, 2013.

——,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56권 4호, 2015.

——, 국제해양법상 항해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57권 2호, 2016.

——,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고찰 - OPSPAR협약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9권 3호, 2018.

——, 국제해양법상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62권 4호, 2021.

Churchill, R.R. and Lowe, A.V.,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Univ. Press, 1999.

Proelss, A.,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A Commentary, Verlag C.H., 2017.

Rothwell D.R. and Stephens, T.,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Hart Publishing, 2016.

Tanaka, Y.,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ambridge Univ. Press, 2019.

당당한 해경, 국민 곁으로 먼저 다가가야 한다.



함혜리

해양경찰위원
램프커뮤니케이션 대표

loutuscomcom@naver.com

‘본인은 해양경찰위원회 위원(비상임)으로 위촉됨을 동의합니다.’

얼마 전 지난 문서 정리를 하다가 ‘위촉 동의서’를 발견했다. 2020년 2월 5일에 해양경찰청에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다음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일 것이다. 해양경찰법 시행으로 해양경찰 창설 67년 만에 2020년 2월 21일 해양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출범식 후에 현판을 달고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첫 회의(임시회의)를 했다. 그날이 엿그제 같은데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200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인지 시간은 더 속절없이 흘렀던 것 같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법률 전문가도 아닌 내가 해양경찰 위원으로 위촉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이라고 ‘왜?’냐고 묻기부터 했다. 내가 문화 분야 전문 기자로 더 알려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역 시절 한때 해양수산부 출입 기자였고, 논설위원 시절엔 경찰청 인권위원회 5, 6대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긴 하다. 이런은 경력들을 합치면 묘하게도 ‘해양경찰위원회’가 되긴 하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안 되었다. 해양경찰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통제장치로 기

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나는 ‘언론계 인사’로 위촉되었다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

사실 그게 맞았다. 언론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취재·보도, 논평하면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며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이런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적인 외부 통제장치의 역할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양경찰 행정이 추진되도록 해양경찰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힘을 보태려 했지만,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했는지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 그보다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이 해양경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기자 시절엔 언론의 역할에 맞게 정부 기관이나 공공 섹터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게 나의 일이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등은 뉴스거리가 아니었다. 솔직히 그런 ‘미담’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옳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받을 사안도 많다. 하지만 무조건 비판의 잣대부터 들이치는 언론의 속성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공공 분야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언론의 폐해 중의 하나일 것이다.

위원회 임기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회의를 비대면으로 해야 했지만 지속적으로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면서 해경 소관 법령·행정규칙 및 주요 정책들을 심의·의결했다.(그 사이 3차례나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을 위한 임시회의도 있었다)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양경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담당하는 업무 분야는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해경은 한반도 해양경비와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활동 등 해양주권 수호부터 해양 및 연안의 안전관리,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 질서 유지, 해양관련 범죄 예방 및 수사, 해양오염 방제 등 방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천해양경찰서 인항파출소,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와 회전익항공대, 방제함, 해양경찰교육원 등 현장방문을 통해 해양경찰 현장의 특수성과 노고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다.

그런데 해양경찰에 대해 알면 알수록 아쉬움이 커졌다. 해상치안과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바다의 수호자’, ‘국민의 봉사자’, ‘해양 전문가’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신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양경찰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뉴스를 쫓는 언론의 속성상 언론에서는 좋은 뉴스보다는 좋지 않은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더 많이 부각시키고, 수용자들에게 그런 기억만 남게 마련이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2014년 세월호 참사는 해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준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은 국민적 공분을 사며 해상재난사고에 있어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질타의 대상이 됐다.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경 수뇌부가 1심 법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해경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1962년 5월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로 발족해 1991년 5월 31일 제정·공포된 경찰법에 의거, 같은 해 8월 1일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된 해경은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문책으로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다. 해체와 함께 담당 업무가 경찰청과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됐다가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해양경찰이 재창설됐고 2020년 3월 「해양경찰법」에 근거해 제17대 해경청장이 취임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양경찰을 경찰청의 하부 조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송도에 해경 본청이 있다는 것도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른다.

최근 해경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으니 다름 아닌 2020년 9월 21일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다. 해경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다음 날 서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년 9개월 만에 수사결과를 뒤집고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2년 전에는 국방부의 자료를 근거로 성급하게 발표하고 정권이 바뀌자 근거도 내놓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번복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은 무리다.

이런 사건들은 해경의 이미지에 치명적이었다. 국민들은 해경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해경은 현재 ‘위기 상황’이다. 위원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목도한바 해양경찰 구성원 모두가 분골쇄신하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다.

‘언론계’ 출신 위원의 입장에서 한마디 하자면 해경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단순히 무슨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는 등 일방적인 발표 수준의 보도자료만 가지고 할 일을 다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 경찰의 경우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영입하거나 드라마나 영화 등을 활용해 경찰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갔다.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문화를 활용했던 경찰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스토리텔링으로 다가가는 방법도 있다. 전문가 그룹에 컨설팅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되 알릴 것은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해경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전문성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경험이나 역사를 살려 국민에게 봉사하는 해경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긴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이미지를 쌓았더라도 공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은 진심과 인내로 접근해야 한다. ‘당당한 해경’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양성평등과 인권경영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 유리벽 유리천정을 제거하고 우수한 여성 인재를 발탁하라 -



김효선

해양경찰위원

여성신문 발행인

hskim@womennews.co.kr

해양경찰위원회 1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양경찰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그만큼 더 애정을 갖게 되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경찰의 비중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해경이 엄청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묵묵하게 자기 소임을 다해나가는 해경의 인내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해경이 다시 재건되고 격상되어서 해양경찰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나는 영광스럽게도 7인의 위원 중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나는 해경위원회에서 인권과 양성평등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 해경관련 전문 분야는 다른 전문가들이 잘 봐 주셨고 나는 현재의 해경에선 어색해할 수 있는 주제인 양성평등을 해경 조직안에 심어 넣는 역할을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다.

경찰이나 군대 같이 치안관련 조직을 양성평등과 연관시키는 건 아직도 어색해 보인다.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육체적인 업무가 많고 위기 대응이 많은 곳에서 효율성은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이다. 해양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에서도 그렇다. 현장 방문을 위해 함정과 구조 훈련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일단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해경들의 어려움이 먼저 들어왔다. 해경위원회를 안내하던 현장의 담당자에게서 ‘이런 상황에서 여

성 인력을 받으라는 건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현장의 어려움과 오래 된 고정관념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양성평등이란 상당한 '사치재'로 보 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의 어려움, 어색함에 먼저 공감하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해양경찰 위원회에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 했다. 양성평등 업무를 총괄할 부서와 양성평등 위원회 설치, 그 외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되지 않는 규정을 갖추기를 강조해 왔다. 다행히 해경위원회를 통해 양성평등 업무 조직이 정비되었고, 전문가로 구성된 양성평등위원회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보람을 느낀다. 편견없이 양성평등을 향한 변화를 시도해 준 해양경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양성평등과 인권경영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두 가지는 글로벌 트랜드에서 필수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기관, 그것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솔선해야 할 해경조직에는 더욱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모든 조직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조직에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다양성과 소수자가 소수자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포용성이 있을 때 경쟁력 높은 강한 조직이 된다는 게 근래의 정설이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해경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어느 공공기관보다 스마트하고 세련 된 조직문화를 갖게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 해경이 더욱 열린 조직, 강한 조직이 되길 바란다. 조직 내 성차별 구조인 유리 벽과 유리 천정을 제거해서 유능한 인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 이 제 언으로 해경위원회 1기 활동의 소회로 대신한다. 이 글은 해경에서 받은 자료, 22년 9 월 30일의 통계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2년 연구보고서 '해양경찰내 성별 간 역량진 단 및 경력과정 실태조사'를 인용해서 작성했다. 두 자료 간 통계치가 다른데, 현황의 수 자는 해경의 자료를 기준으로 했고, 성별 계급별 비율 등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했다.

해경 창설 33년 만에 두 명의 여경으로 시작

대표적인 금녀의 공간. 거친 파도 속에 인명을 구조하고 적을 제압하는 거친 업무에서 여성이 설 자리를 찾을 수는 없었다. 최초의 여성 해경은 1986년 5월 1일 입직한 박경순, 조숙영 순정이다.

1986년에 첫 여성 경찰을 받아들였다니 출발이 얼마나 늦은가? 19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고 한국은 글로벌 국가로의 도약을 시작하던 때이니 말이다. 그만큼 해경에서 여성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작업이었다.

무려 175대 1이라는 경쟁률 속에서 합격한 주인공이었지만 그들의 업무는 민원실에서 미아 보호 정도였다. 해경의 기록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줘 갈채를 받는 등 여성 특유의 따뜻함과 섬세함으로 민원실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근무로 정평이 났다”고 적었다.

13년 후인 1999년 여경 30명을 채용하면서 늘어나 2022년 9월 30일 현재는 전체 11,842명 중 1,243명으로 10.5%를 차지하고 있다.

여경 1호인 박경순 경정은 본청 성과평가팀장, 최초 여성 함장인 1500톤급 1513호 함장인 고유미 경정 등은 조직의 리더로 성장해 있다. 1호 여성 해경으로 선발하게 된 조숙영 경감은 현재 인천해양경찰서 수서레저계장으로 활약 중이다. 중국교포인 김영옥 순경은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3,000톤급 함정의 승조원이다.¹⁾

유리 벽은 조직 내에서 업무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말한다. 중요한 핵심적인 업무에서 여성들이 배제되어서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갖지 못하게 되는 대표적인 성차별 조직의 장애물이다. 여성이 배에 승선하는 것 자체를 불길하게 받아들였던 오래된 바다의 편견이 내재한 해경에서 여성이 승선하거나 함장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최초의 여경 박경순 조숙영 순경이 민원실에 배치되어 부모 잃은 아이를 찾아주는 일을 ‘여성성을 발휘했다’고 표현하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가정에서 여성의 자리가 주부인 것처럼 직장에서 보조적인 업무가 자연스럽다는 인식이다. 여성은 위

1) 해양경찰 60년사(2013) 인용, 2023년 기준 박경순 총경 퇴직, 조숙영 경정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 경비지원과장, 김영옥 경사는 목포VTS 근무 중

기 대응력, 리더십이 부족하고 육체적 힘도 약해서 보조적인 자리에 만족할 것이라는 게 대표적인 성차별적인 믿음이다. 해경에서 승선 경험은 승진에서 필수적이다. 여경들이 승선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여성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오래된 조직의 편견에 불과하다. 이를 증명하듯, 고유미 함장은 첫 여성 함정 승조원이 되었고, 박경순 성과 평가팀장도 자원해서 1507함 부장으로 근무하며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한다. 흔히 여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장 업무를 기피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여성들은 기회가 된다면 함선에 승선하는 것을 비롯해서 현장 경험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5월 1일은 해경창설 60주년인 2013년에 ‘해양경찰 여경의 날’로 지정되었다.

하위직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여성 승진 폭 늘려야

1986년 두 명으로 출발한 해경의 여성경찰은 22년 9월 30일 현재 1,243명으로 전체 11,842명 중 1,243명으로 10.5%를 차지해서 존재감을 느끼게 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여성가족부는 해경에서 여성경찰의 증원을 위한 채용 비율 목표치를 상향시켜 왔다. 최근 5년간 여성비율 증가 평균이 0.67%. 그러나 21년 22년은 각각 1.3%, 1.6% 증가율을 보여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계급별로는 총경 1명, 경정 12명, 경감 27명, 경위 259명, 경사 242명, 경장 277명, 순경 415명으로 하위직 집중 현상이 여실하다. (해양경찰청 자료, 22.9.30 기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연구보고서 <해양경찰 내 서열 간 역량진단 및 경력과정 실태조사(연구책임 문미경)>는 21년 해양경찰청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경감 이상(6급 이상)에서 남성 비율 97%, 여성 3%로 나타나 여성경찰의 하위직 집중 현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해양경찰청 업무를 사무실과 현장 업무로 나눌 때 전체 인원의 34.8%가 사무실에, 65.2%가 현장부서에 배치돼 있다. 그러나 여성경찰은 사무실 근무 비율이 현장근무 비율보다 2배 이상으로 사무실 업무에 집중돼 있다.

문미경 박사 팀은 해경 내 성별 간 경력과정 개발을 분석해서 경사~경위 구간에서 여성들의 승진 지연 현상에 주목한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하는 구간에서는 생애주기 상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가 시작해 진행되는 시점으로 적극적으로 시험을 통해 경력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보육시설 지원, 근무지역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연구보고서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력개발 기회나 특정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스스로 경력개발을 단념해버리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정책적 제언과 관련해 주목해 볼 부분은 중형 소형 함정시설 개선에 대한 것이다. 여성경찰이 함정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함정 내에 성별 분리된 숙소와 최소 두 개 이상의 화장실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는 해양경찰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할 때마다 진지하게 거론되었던 부분이다. 함선이 시설 개선이란 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해경의 관심과 함께 사회적인 관심이 더해지면 이 역시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여경의 업무가 사무직에 집중돼 있는 점(유리벽), 하위직에 집중돼 있는 점(유리천장)과 함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인 조직 운영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해양경찰 조직문화의 발전은 우리 사회 조직문화의 미래를 점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 전형적인 남성 주류의 조직인데다, 미신에 가깝다고 할 만큼 성차별 편견이 지배했던 공간이 여성과 함께하는 열린 조직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변화를 먼저 주도 하는 스마트한 조직문화를 갖추어 나갈 해경의 미래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해양경찰(KCG)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고도화 방안 고찰



이은방

해양경찰위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eunbang@kmou.ac.kr

I. 서론

선박에 의한 해상에서 교통은 인류가 원시적 상태였던 시대부터 시작되어 문명발달의 원동력이 되어왔고 활발한 해양 가치창출 활동의 기반이 되어 왔다. 조선기술의 발달로 감항성이 높아지고 인공위성 등 전파를 이용한 항법장치 및 시스템개발, 정보 기반 디지털 항해기술의 발달로 안전도는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와 더불어 해상교통량의 증가와 해양활동의 다양화, 고밀도화가 촉진되고, 위험·유해 물질의 해상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위험요소의 출현으로 재난적 해상교통사고의 발생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해양에서 다양한 가치 창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으로 해상교통의 안전도 제고를 위한 예방, 대비·대응에 필요한 3E(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분야의 연구와 정책은 물론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선박차원에서 현장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의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고도화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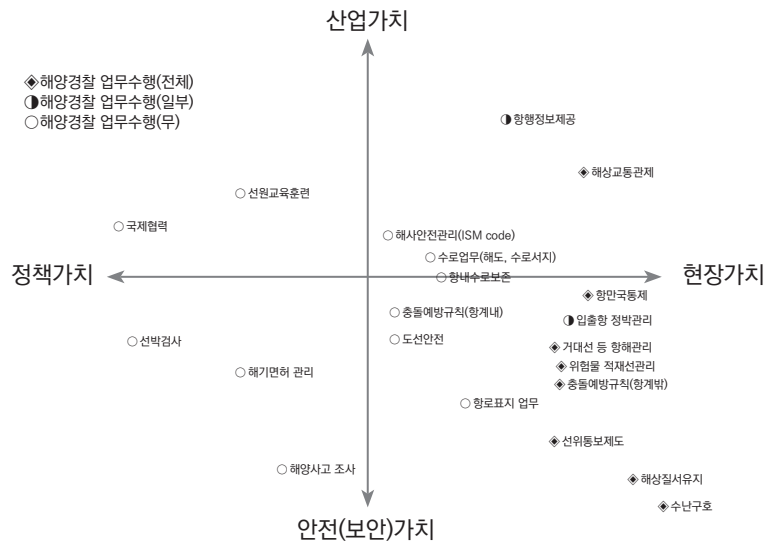
교통 안전관리 특성과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USCG, JCG 등 외국 Coast Guard와 도로 교통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해상교통 현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 기대를 담아, 패러다임, 효율·효과성, 조직, 전략, 협력 분야 등에서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해상교통 안전관리 특성과 현황 분석

1. 해상교통과 안전관리의 특성

해상교통은 교통로를 해상으로 하여 교통기관인 선박을 목적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적 이동하는 데 요구되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특성으로는 첫째, 해류, 파랑, 너울뿐만 아니라 안개, 폭우, 폭풍 등 자연현상에 큰 영향을 받는다. 둘째, 시공간 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외부 도움 없이 지구 표면의 70.8% 해당하는 광활한 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상호협력은 물론 호혜의 원칙과 국제협약 같은 배경 지식이 요구됨으로 국제성이 매우 높다. 넷째, 장소적 이동 수단은 물론 화물적재 공간이고 어로, 순찰 등 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선박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광활하고 변화무쌍한 해양에서 선박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다양하고, 사고대비 및 대응에 있어 실시간적인 외부 지원 취약하여 사고 위험성(risk)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의 안전관리는 필요한 정보제공은 물론 통항법규와 규칙의 준수, 항로 표지 등 교통 지원 시설을 비롯한 항로의 관리, 선박의 검사뿐만 아니라 해상교통 혼잡 해역에서의 선박관제(Vessel Traffic Service) 등 업무의 범주가 넓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에 가로축 정책가치와 현장가치로 하고, 세로축은 산업과 안전가치로 해양교통 안전관리 업무를 매트릭스(metrics) 화하여 해양경찰의 담당업무 수행 비중에 따라 3등급(전체 수행, 일부 수행, 수행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그림 1〉 해양교통 안전관리업무의 매트릭스

해상교통 안전관리 업무는 모든 영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4분면에 해당하는 현장가치와 안전가치의 비중이 높다. 현장 안전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업무도 해양경찰이 일부, 또는 담당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해상교통 환경변화

조선기술의 발달은 AI, Big Data, ICT 등 변혁적 기술의 출현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탈탄소화 요구에 따라 해상교통 환경과 트렌드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해상교통 안전뿐만 아니라 테러, 해적 등 해상교통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2만 TEU, VLCC 등 선박의 크기가 대형화되고 있다. 또한 기술발전의 가속화로 자율운항선박, 수면비행선박(WIG:Wing-In-Ground effect) 등 새로운 유형의 선박 출현이 예고되고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에 고조되어 탄소중립과 해양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e-Navigation 환경과 사용자 중심의 Ubiquitous 환경의 구축으로 기대 안전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3. 해양경찰의 현장 해상교통안전 관리업무 현황

해양경찰의 거의 모든 업무가 해양교통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업무에 따라 예방, 대비, 대응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해상교통 안전관리 주요 업무를 재난관리사이클(Disaster Management Cycle)에 따라 <그림 2>처럼 분류할 수 있다.

해양경찰은 해양사고, 사건의 대비·대응 총괄기관의 역할이 크지만, 해상교통 정보제공, 유·도선 안전관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해상교통 입출항 통제, 위험물 적재선박 및 대형선 안전관리 등 해상교통 안전관리의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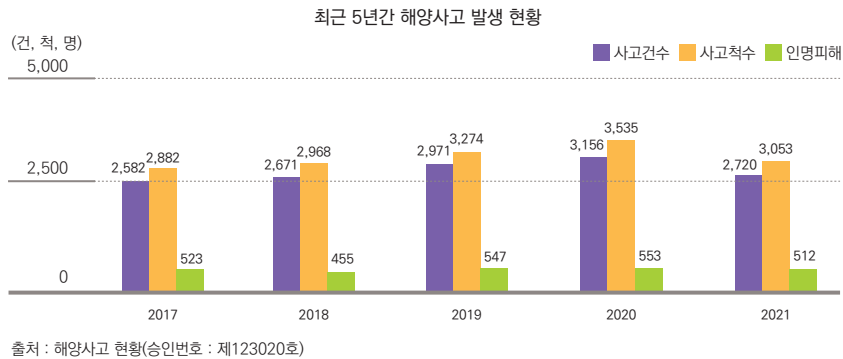
또한 선박 및 항만 대테러를 비롯하여 선박기인 불법무기, 마약, 밀수·밀항 등 저장도 보안위협 예방, 대비, 대응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예방	대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VTS - 연안 VTS - 항포구 출입항 신고 - NAVTEX 정보제공 - KOSREP 운영 - 해양경비 및 순찰 - 해사법규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선 안전관리 - 낚시어선 안전관리 - 항포구 출입항 신고 - 위험물 적재선박관리 - 거대선 등 항행관리 - 출입항 통제 - 선박해양오염 방제자원 배치 - 선박 대테러 등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색구조 - 해상오염방제 - 선박 및 해상테러 대응 - PSI - 해양사고 피해 확산 방지 - 선박기반 저장도 보안위협

<그림 2> Disaster management cycle에 따른 KCG 해상교통관련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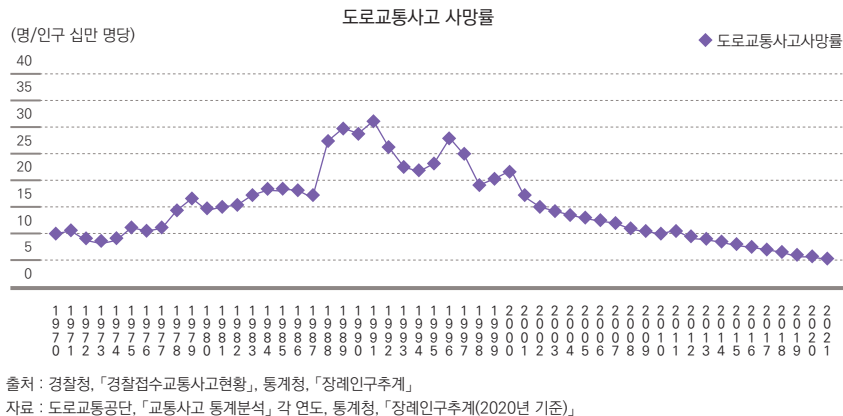
4. 해상교통과 도로교통 사고 비교

최근 5년간 해상교통사고(해양사고)의 연간 2,582 ~ 3,158건 수가 발생하고 대상 선박은 2,882 ~ 3,535척에 이른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455 ~ 553명이고 연평균 518명에 이르고 있다<그림 3>.



〈그림 3〉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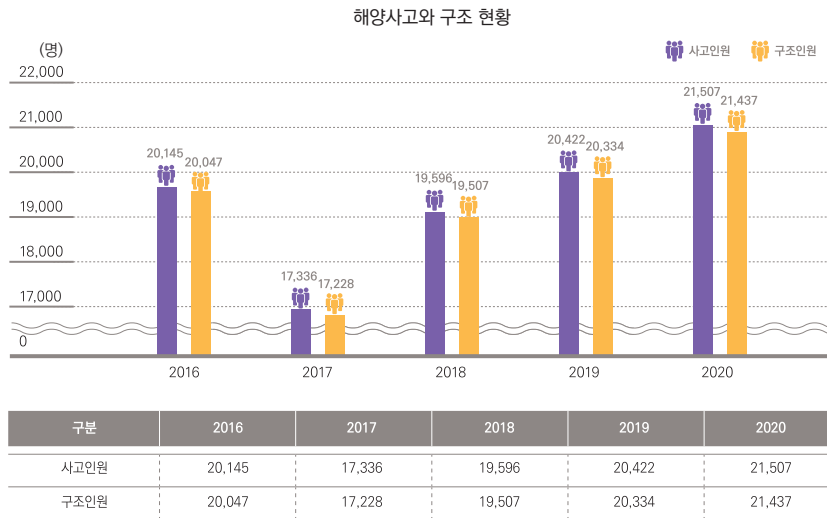
〈그림 4〉는 지난 50년간 인구 10명당 사망자 수, 즉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도로교통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해상교통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는 감소 추세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림 4〉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도로교통은 교통로, 자동차,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기술, 교육, 법령 측면의 종합적이고 일관성 높은 정책수행의 결과로 보인다. 해상교통은 그에 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정책과 현장기능이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란 입체적 안전관리보다는 선박과 운항자 중심의 법률 기반 사고, 사건관리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5년간의 해상교통 사고인원과 구조인원을 나타낸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율이 2020년 기준 99.7%에 달하지만, 연평균 인명피해는 크게 줄고 있지 않다.



〈그림 5〉 해양사고와 구조 현황(출처:2021년 해양경찰 백서)

Ⅲ. 해상교통 안전관리 비교 분석

1. 각국 해양경찰(CG)의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비교 분석

먼저, 각국 CG의 임무(missions)를 비교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비중을 살펴 보고자 한다. 〈표 1〉은 KCG(Korea Coast Guard), JCG(Japan Coast Guard), USCG(United States Coast Guard)의 영문 홈페이지에 기술된 주요 업무를 영역별로 분류하였다. 각국의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CG의 임무 및 기능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해상교통영역에서 KCG는 해상교통질서 유지에, JCG는 해상교통의 안전보호에, USCG는 해상교통시스템관리에 업무비중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상교통관리 영역의 구체적 업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2〉에 해양경찰청(KCG)의 해상교통 현장관리 업무영역을 미국해안경비대(USCG), 일본 해상보안청(JCG)과 비교 분석하였다. USCG는 해상교통 질서유지, 항행관리, 해상교통관제, 항만국통제, 항로표지, 해양사고조사 등 해상교통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표 1〉 CG의 중점 임무 비교

영역	KCG	JCG	USCG
해상교통	Establish of maritime traffic order	Protecting the safety of maritime traffic	Maritime 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해양안전	Safety management against maritime disaster	Saving lives Preparing for disaster	Maritime prevention
해양경비	Protection of maritime territory and sovereignty	Guarding TWs and EEZ Ensuring security Connecting the sea	Maritime security operation
범죄수사	Investigation of maritime crimes		Maritime law enforcement
해양환경	Prevention and response to marine pollution	Saving the blue sea	Maritime response
국가안보			Defence operation
해양조사		Exploring the ocean	

JCG는 해양안전관리(ISM: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항로표지, 해양사고조사 업무를 제외한 해상교통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JCG의 중앙조직에 교통부(국)를 두고 있으며, USCG도 해상교통 운영을 위한 중앙조직(Deputy commandant for operation)이 있으며 그 소속으로 해양안전센터(Marine safety center), 항해센터(Navigation center) 등을 두고 해상교통 현장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KCG는 JCG 제외된 업무에 추가하여 항내수로관리, 입출항 및 정박관리, 선박·항만보안(ISPS: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Security)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 다른 CG에 비교하여 종합적인 해상교통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그림 6〉은 관제도가 포함된 인천 VTS 센터와 해양경찰위원회의 현장방문 사진이다.

〈표 2〉 KCG, USCG, JCG 해상교통 업무 범주 비교 (○:전부수행, △일부수행, ×:수행하지 않음)

비교 항목	Korea Coast Guard	Japan Coast Guard	United States Coast Guard
해상교통 질서유지	○	○	○
거대선 등의 항해관리	○	○	○
입출항 및 정박관리	△	○	○
위험물 적재선관리	○	○	○
항내 수로관리	×	○	○
해상교통관제	○	○	○
선우통보제도	○	○	○
선박·항만보안 (ISPS code)	△	○	○
해양안전관리 (ISM code)	×	×	○
항만국통제 (PSC)	×	×	○
항로표지	×	×	○
수로서지 업무	×	○	○
항해정보제공	△	○	○
해양사고조사	×	×	○
수색구조	○	○	○
해상교통 오염방제	○	○	○

2. 도로교통 안전관리와 비교 분석

도로교통 현장안전관리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범주는 도로교통법을 근간으로 보행자 안전관리, 차마 및 노면전차 통행관리, 운전자 및 고용주 의무관리, 도로의 사용관리, 교통안전교육관리, 운전면허관리 등이 있다.

도로교통 현장안전관리는 경찰청 교통국이 총괄하고 있으며 그 소속으로 도로교통 관련 종합기획, 도로교통 관련 법령정비 및 행정제도 연구 등을 담당하는 교통기획과와 도로교통사고 예방, 홍보, 지도 및 단속,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감독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과를 두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광역교통정보 사업관련 업무,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교통운영과로 조직되어 있다.



〈그림 6〉 인천 VTS 센터와 해양경찰위원회 현장방문 사진

3. 해상교통 안전 및 보안관리 현황

해상교통 안전관리는 〈표 3〉에서와 같이 선종별로 주관기관, 보조조직, 근거법령이 다르다. 도로교통법이 차마의 종류와 상관없이 현장 교통안전관리의 기본법으로 일원화되어 있지만, 해상교통안전관리는 선종, 선박크기, 선박의 목적에 따라 안전관리 방법 및 규제가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다.

〈표 3〉 해상교통 안전관리 현황

구분	여객선	화물선	유도선	어선	낚시어선
안전관리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조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회사	소방방재청	수협중앙회	낚시어선업자
근거법령	해운법	해사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칙	낚시관리 및 육성법

대부분의 안전관리 주관기관은 해상의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물적·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법령 의존 방식으로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정 등 현장안전관리 자원을 보유한 해양경찰청이 종합적인 해상교통 현장관리 책임기관으로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해상교통 안전관리와 보안관리는 공통점도 있지만, 여러 차원에서 다르다. <표 4>에 해상교통 안전관리와 보안관리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표 4〉 해상교통 안전관리와 보안관리 특성 비교

구분	해상교통 안전관리(Safety)	해상교통 보안관리(security)
추진	공개성	기밀성
원인	위험(Hazard)	위협(Threat)
동기	우연적	계획적
목적	위험으로부터 예방	위험으로부터 보호
예측	강함	약함
사고(사건)빈도	높음	낮음
재해정도	낮음	높음
표기	Accident(사고)	Incident(사건)
대책	3E(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3D(Detect, Deter, Defend)

안전관리는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사고는 자연이나 인간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 되어 우연성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사고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재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안전대책은 교육, 기술, 단속 측면에서 세워진다. 그에 반하여 보안관리는 기밀성 있게 추진되고, 사건은 인간의 의도가 원인이고 계획적으로 발생하고 그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피해 정도는 재난적 재해를 수반할 수 있다. 보안대책은 첩보 수집, 위협억제, 위협방어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특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과 항만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상교통보안 위협요소 제거, 보안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축적, 보안강화를 위한 지침 제정, 적절한 보안상태의 유지와 평가 등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은 국제항만에서 선박과 항만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항장(Port Captain)제도를 운영하여 보안 위협 탐지, 차단, 방어가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항·포구, 국제항만 등의 보안업무의라 주관 주체가 달라 적시성 높은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

4. 해양경찰(KCG)의 해상교통 현장안전/보안관리 SWOT 분석

해양경찰의 해상교통 현장안전/보안관리 업무에 대한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요소를 분석하면 <그림 7>과 같다. 해상질서 및 치안유지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현장집행력을 가지고 있으며 함정, 항공기, VTS 등 풍부한 자원뿐만 아니라 첨단 교육·훈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약점으로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해상교통 안전/보안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총괄 조직의 미비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민간 보조 세력이 부족한 것이다.

기회 요소로는 재난적 해상교통 사고 경험으로 국민의 해양안전 욕구가 높아져 해상교통이 사회 안전망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국가정책 및 예산의 우선순위에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상업무의 위성 활용 연구와 항만 및 연안 VTS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현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선박, WIG선 등 새로운 교통 유형의 출현과 유해·위험물(HNS: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 해상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해상에서 마약, 불법 무기, 테러 등 위협 증가는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점과 기회 요소를 극대화하고 약점과 위협 요인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인구통계학적 문제와 세계 경제의 경쟁 심화로 국가 예산의 지원은 정체될 수밖에 없어 업무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7〉 KCG 해상교통 현장 안전/보안관리 SWOT 분석

5.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과제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 CG와 도로교통과 교차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해양경찰의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의 과제를 탐색하고 As-Is에서 To-Be로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표 5>에 요약하였다.

해상교통은 어선, 화물선,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양한 선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박 크기, 작업 종류, 운송 화물에 따라 리스크(risk)가 상이하다. 이런 이유로 선종별 안전기준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선박과 운항자 중심의 자체적인 안전관리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표 5〉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과제 탐색

구분	As-Is	To-Be	시사점
패러다임	선박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종합적 안전관리
업무 범주	단위 업무	총괄 업무	효율/효과성
법률 기반	안전관리 개별법 산재	해상교통 안전기본법 검토	상호이해 및 협조
조직 기반	전담부서 부재	총괄조직 설치	Control Tower
업무 조정	해상교통 사고 대비/대응 업무	현장예방, 대비/대응 업무확대	업무의 일관성

안전/보안	현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현장해상교통 안전 및 보안관리	시너지 효과
자원 배분	경험 기반	리스크 기반	효용성
관리 방법	법률기반 간접안전관리	지시, 권고, 관제 등 직접안전관리	정보, 서비스 제공
미래 준비	경험기반 준비	산학연 미래협력연구	해상교통환경변화
주체	정부 주도	민간 협력	참여문화

사고 예방도 운항자의 과실이나 휴먼 에러의 방지를 위한 교육, 훈련 중심으로, 이러한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해상교통 재해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해상교통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는 선박, 해상교통시설 및 시스템, 사회적 제도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선박안전관리에서 해상교통 안전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가 사고의 대비, 대응의 파편적인 단위 업무만으로는 해상교통의 리스크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 USCG, JCG처럼 해상교통 현장관리 업무의 스펙트럼을 넓혀 총괄함으로써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법률 기반도 도로교통법을 벤치마킹하여 선종별로 산재된 안전규제를 해사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가칭) 체제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 해상을 교통로로 사용하는 모든 선박 운항자간 이해와 협력 증진은 물론 사회안전망으로 국가적 투자와 국민의 관심제고를 통하여 참여형 해상교통 안전 문화 확산 및 정착이 절실하다.

조직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의 Control Tower 기능을 할 총괄조직이 필요하다. 해상교통의 명칭이 사용되는 정부부서는 해양수산부의 첨단해양교통관리과와 해양경찰청의 해상교통관제과가 유일하며,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있을 정도이다.

해사안전 정책업무와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업무가 혼재되어 정부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해상교통의 새로운 위험과 위협에 적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한 허용 리스크 이내로 해상교통 현장 안전관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제약되지 않도록 업무의 조정이 요구된다.

해상교통안전과 더불어 해상교통보안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보안위협 요소도 다양해지고 그 강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해상교통에서 항만은 육상과 해상 물류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어서 해상교통의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선박과 항만의 현장 안전과 보안 업무를 통합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측면에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해상교통 안전관리의 목표는 사고 제로인 이상적인 절대 안전보다 리스크 관리와 저감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과 역량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 안전관리 방법도 법령에 의한 선언적 간접 안전관리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기반 의사 결정으로 지시, 권고, 관제 등 직접 안전관리로 방향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활한 해역을 무대로 운항되는 해상교통의 특성상 공적안전관리만으로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임으로 산학연의 연구 지원은 물론 해상교통 종사자,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조성하여 민간협력 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IV. 해상교통 현장 안전관리 고도화 방안

1. 선박안전에서 해상교통안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대비, 대응 태세 유지로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활동을 통하여 인명구조를 주 임무로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선박 기인 사고이므로 많은 선박 사고 사례에 대한 경험과 역량 축적으로 2021년 기준의 선박 구조율과 인명 구조율은 각각 97.3%, 99.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선박사고는 단순한 선박 자체의 원인적 접근으로는 사고의 예방과 재해 저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해상교통 차원의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선박 조건 이외에도 운항자 조건, 자연조건, 항로 조건, 교통 조건에 대한 개선과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경찰은 함정, 항공기 등 현장안전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한 기관으로 해양 현장에서 종합적인 해양관리기관으로 역할이 요구된다.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USCG를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선박 안전관리에서 해상교통 안전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와 융합적 역량 제고가 되었으면 한다.

2.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총괄 중앙조직 신설

일본 해상보안청(JCG)은 해상교통의 현장안전관리 중앙조직으로 교통부(Maritime Traffic Department)를 두고 VTS, 항로표지, 해양사고 조사, 항로안전정보 등 해상교통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USCG도 운영국장(Deputy of commandant for operation)이 해상교통 모든 안전관리업무에 해당하는 PSC, 항해안전, 해양안전 및 보안, 항로관리, 위험화물관리, 선박감사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다.

다양한 범주의 혼재하는 해상교통 현장 안전관리는 개별 단위 사고 대비·대응에서 해상교통 전체의 시스템론적인 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미래 해상교통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선순환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해상교통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가칭 해상교통안전국의 설치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시스템 확충과 업무 조정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뿐 아니라,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 고비용 행정이다. USCG는 중앙정부의 전략적 지원으로 “Deepwater Project”를 수행하여 함정과 항공기의 성능 개선은 물론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및 감시체제(C4IS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구축으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상교통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 하였다. 또한 캐나다정부는 CCG(Canadian Coast Guard)를 관공선의 집약적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용 효율성 제고에 큰 노력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자체 예산만으로 급변하는 해상치안과 해상교통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변혁적인 시스템 개선은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여러 부처에 산재한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업무

를 효율성, 효과성 기반으로 조정하여 효율성 높은 종합적인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도 검토되어야 한다.

4. 해상교통 현장안전/보안관리 일원화

해상교통의 안전 및 보안관리는 기법의 차이는 있으나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해상 질서 및 치안유지를 위하여 해상교통에 관련된 사고, 사건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비, 대응에 필요한 현장 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해상안전 확보에서 나아가 해상보안 확보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적인 노력으로 ISPS Code와 해상불법행위 억제협약(SUA: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의 시행을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 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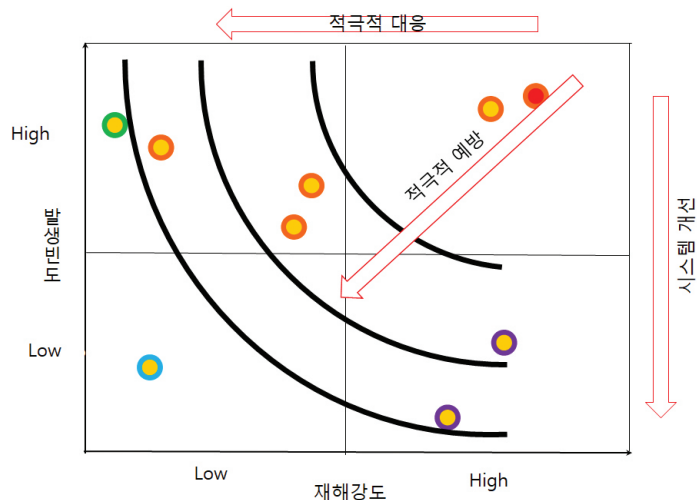
해상교통의 위험뿐만 아니라, 위협의 인지, 억제, 대응의 일체화를 위하여 국제항만의 항장제도의 도입 검토는 물론, 큰 틀에서 해상교통 안전과 보안의 현장관리 업무를 융·통합할 필요가 있다.

5. 리스크 기반 해상교통 안전/보안관리

해상교통의 사고는 다양한 위험(Hazard)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지만 그 위험성, 즉 리스크(Risk= $F \times C$)는 사고의 발생 빈도(Frequency)와 재해 강도(Consequence)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 8>은 가로축에 재해 강도, 세로축에 발생 빈도로 사고를 매트릭스(Risk Matrix)화 하였다. 발생 빈도는 높지만 재해가 미미한 사고도 있고 사고 빈도는 낮지만, 재해 강도 큰 사고도 있다.

해상교통 개별사고 중심의 사례별 경험 기반 대응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리스크 평가에 따라 예방 영역과 대응

영역 그리고 시스템 개선 영역으로 나누어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해야 한다. 예측하기 어렵고 경험하지 못한 재난적 해상교통 사고·사건도 선제적으로 중점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리스크 기반 해상교통안전관리

6. 민간 및 국제협력 기반 확충

해상교통은 국경을 초월하여 넓은 해역에서 다국적 선박과 운항자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고, 사건의 예방은 물론 대비 및 대응에도 국제적인 협력은 필수이다. 다자간 혹은 양자 간의 상호협력은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해상교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환경보호·보존을 위한 역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공적 안전관리 자원만으로 해상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민간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과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은 필수 불가결하다. 경찰의 공경비와 더불어 민간 경비업의 사경비가 치안질서 유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듯이, 해양경비사제도 등의 도입 및 자원봉사자원의 활용 등 민간 영역의 참여할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합동 교육 및 훈련

을 체계화하고 해상교통 안전과 보안 분야에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국내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현황을 도로교통과 비교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CG와 다자간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고도화 방안으로 첫째, 선박안전에서 해상교통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둘째,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총괄 중앙조직 신설, 셋째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 시스템 확충과 업무 조정, 넷째, 해상교통 현장안전/보안관리 일원화, 다섯째, 리스크 기반 해상교통 안전/보안관리, 여섯째, 민간 및 국제협력 기반 확충을 제안하였다. 제안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은 지속적인 연구 과제로 남기며, 융·통합적인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해상교통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이 커짐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양재난의 대비, 대응 기관으로서 해양경찰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 현장안전관리의 총괄 기관으로 발전을 응원하며,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1. 김상철외 7인, “안전관리”, 도서출판 동화기술, 2011.
2. 손상철, 김백윤, 정용, “재난안전관리론”, 도서출판 진영사, 2018.
3. 이은방, 이윤석, 박영수, 김종성, “전파전자향해학”, 도서출판 상학당, 2016.
4. 이은방, 정태권, “해양안전시스템”, 세종출판사, 2012.
5. 해양경찰청, “2021 해양경찰 백서”, (주) 아미고디자인, 2021.
6. 한국해양대학 경찰학과, “해양경찰학 개론”, 다솜출판사, 2018.

〈국외〉

7. 선박안전연구회, “선박안전학개론”, 성산당, 1998.
8. Yahei Fujii, “해상교통공학”, 해문당, 1981.
9. 이노우에, “해양의 안전관리학” 성산당, 2008.
10. 해상보안청, “해상보안청 50년사”, 해상보안청 50년사 편집위원회, 1998.
11. Capt. George E. Kriemeyer, USCG(Ret.), “the Coast Guardsman’ Manual(Ninth Edition)”, U.S. Naval Institute, 2000.

〈홈페이지〉

12.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s://kosis.kr>), 2022. 12.
13.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 2022. 12.
14.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https://www.kaiho.mlit.go.jp>), 2022. 12.
15.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kcg.go.k>), 2022. 12.
16.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s://www.mof.go.kr>), 2022. 12.
17. Canadian Coast Guard 홈페이지(<https://www.cgc.gc.ca>), 2022. 12.
18. USCG 홈페이지(<https://www.uscg.mil>), 2022. 12.

제1기 해양경찰위원의 임기를 마치며

- 해경의 역할과 책무 관련 판례 검토 -



윤석희

해양경찰위원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변호사

shyoon@ynclaw.co.kr

I. 들어가는 말 - 해양경찰위원으로서의 임명과 활동

지난 2020. 2. 21. 해양경찰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제1기 위원으로 3년 동안 해양경찰의 정책, 법령을 검토, 의결하였다.

2006년 7월에 해양경찰청 산하의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초창기 인천 송도에 소재한 해경을 방문하고자 대중교통수단을 여러 번 갈아탄 기억이 생겼다. 해양경찰법 제정과 동시에 탄생한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어 무척 기쁜 마음으로 활동하였다.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해양경찰위원으로서의 소회와 판례를 통해 언급된 해경공무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부족하나마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해양경찰위원회의 의미와 특수성

1. 해양경찰법 탄생과 신설조직의 의의

2019. 8. 20. 제정·공포된 해양경찰법에는 종전 경찰법의 경찰위원회¹⁾와 유사한 구조로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6개 조항²⁾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양경찰위원회는 「1.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인권 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장비시설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업무도 종전 경찰법과 대동소이하다. 2020년 첫해의 경우 총 22회를 개최하여 137건의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행정규칙 및 주요정책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2021년에는, 2022년 상반기에는 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2. 육상 경찰과의 업무 범위의 차별성 - 행정봉사자로서의 기능

해양경찰은 육상경찰과 매우 큰 업무 범위의 차이가 존재한다. 자치위원회의 형태가 아닌 국가위원회 형태가 유효한 이유라 할 것이다. 조직 내부의 전문성은 육상에서의 수사 업무보다는 대부분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 수색구조 및 해양오염 방제 등 실제 행정서비스영역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관련 법률도 실제 국민의 해상에서의 생활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다. 수상구조법, 수상레저 안전법, 해양경비법, 연안사고예방법, 해양경찰법, 선박교

1) 경찰법 제9조[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66호, 2018. 4. 17., 일부개정]이고 이 법은 2021. 1. 1. 전면개정되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제10조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임

2) 즉, 제5조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제7조 위원 임기 및 신분보장, 제8조 재의요구, 제9조 의견청취 등,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이다

통관제법, 해양경찰 장비법 등 7개 소관법률이 그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며,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3. 현장을 통해 본 구체적인 업무 현황

총 4번에 걸친 해상치안 현장방문은 위와 같은 조직의 전문성을 여실히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2020년 6월 1차 현장방문은 인천에 소재한 중부해양경찰청 및 인천항 VTS를 방문하여 현황 및 실제 관제 지시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함장 및 인항파출소에서는 직원들과 면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공기 부양정에 탑승하여 영흥도 주변 해상치안현장을 돌아보았다. 2020년 11월에는 김해에 소재한 고정익 항공대를 방문하여 서해 해상을 순찰하였으며, 2022년 6월에는 여수에 소재한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여 해양구조실습장 및 모의선박실습장에서 실제 선박기울기에 따른 위험성을 체험하였다. 화학방제함정에 승선하여 다양한 화학방제장비와 실연을 참관할 수 있었다. 2022년 11월에는 부산에 소재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남해청 특공대를 방문하여 잠수구조훈련실습과 대테러전술훈련을 지켜보았다.

전국 각지에 소재한 해경 관서를 방문하고 체험하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교통 관제, 입출항 관리와 안전사고 발생 시의 구조역량 강화, 해양 오염 예방과 점검, 방제 등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4. 바다주권을 수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경정신 실현 - 제언

해상에서의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지킴이로서, 해상주권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깨끗한 바다를 선도하는 해양전문가로서 해양경찰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양경찰의 업무를 지원, 자문하기 위한 해양경찰위원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해양경찰위원회가 경찰위원회의 해경 버전임에도 경찰위원회와는 다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즉 경찰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구성한 것에 반해, 해양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 모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육지의 4.5배에 이르는 관할 범위와 해상에서의 수색·관제·방제 등 전문적인 해양경찰 업무를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경찰법에도 동일한 형태의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둔 것과 자치위원회에도 상임위원을 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하고 긴밀한 업무처리,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및 인사평가 등 상시적인 국민적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월 2회의 회의 외에 각 기능별 위원회 등 각자의 전문 분야를 따라 해양경찰청 내의 실질적인 업무 및 정책 논의 과정, 직원과의 간담회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수정 및 검토 외에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 수렴하는 절차와 적극 행정을 실현하도록 독려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국내에서의 해안 치안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타국의 해상 청 등을 방문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해 본다.

Ⅲ. 판례를 통해 언급된 해경의 역할과 책무

1. 서언

그간의 판례에서 적시된 해경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판단은 해양경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제공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에 해양경찰과 관련한 판결 중 시사점이 있는 몇 가지의 사례를 아래에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2.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손상의무 관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정직처분 취소]

가. 사실관계

원고는 2011. 4. 18.부터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이하 ‘진도 VTS’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중인 2014. 4. 16.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VTS의 관제 구역인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감사원은 2014. 10. 10. 해양경찰청장에게 ‘원고가 ① 세월호 사고 당시 세월호와 교신하면서 파악한 정보를 출동 중인 함정, 헬기 등 구조세력에 전파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고(제1 비위행위), ② 진도 VTS 관제요원들이 진도 VTS 관제 구역을 2개 섹터로 분할하고 섹터별로 관제요원을 지정하여 책임관제를 시행하도록 한 근무명령과 다르게 2011. 4. 경부터 야간에 1섹터 관제요원이 1, 2섹터를 모두 관제하는 변칙근무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관한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제2 비위행위), ③ 관제요원의 변칙근무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도 VTS 내 CCTV 카메라를 관제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방향으로 돌려놓은 채 운영하다가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CCTV를 철거하고(제3 비위행위), ④ CCTV 녹화 영상을 삭제(제4 비위행위)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고 그 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위 강등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제1, 2 비위행위만 인정하고 제3, 4 비위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2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4 비위행위도 인정하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나. 판결요지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입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제4 비위행위에 대한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형사법적 관점에서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판단에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제4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은 행위라고도 볼 수 없고, 오히려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별표 1]에 따른 징계기준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초 징계처분인 ‘강등’은 위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결정에 따른 정직 3개월의 이 사건 처분도 그 범위 내에 있다. 그리고 위 [별표 1]이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에 더불어 이 사건 제4 비위행위도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전

해당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판단의 기준과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의 유·무죄 판단의 기준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라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에 맞지 않는 행위인지,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형 인명사고 등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엄격한 성실의무를 부과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3. 구조업무에 대한 형사상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관련

-헌법재판소 2007. 10. 25. 자 2006헌마869 결정[불기소처분취소]

가. 사실관계

2005. 5. 15. 16:25경 피해자 8명이 전원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레저용 보트에 탑승하여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에서 전곡항으로 가던 중 스크루에 김양식장 로프가 걸리면서 위 보트가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조난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탑승자들의 가족은 19:55경 ○○출장소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출장소에서 근무하던 순경○○○은 사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출동 가능한 순찰정이 있는 ○○파출소에 출동을 요청하고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로 보고하였다. 같은 날 21:40경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은 ○○파출소에 s-37 순찰정의 출동을 지시하였다. 당시 ○○파출소 책임자(부소장)인 피고소인은 같은 날 22:30경 및 23:10경 실종자의 이름과 출생 연도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전문을 위 상황실로 보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23:55경 비로소 ○○파출소장에게 위 실종 사실을 보고하였다. 다음 날인 2005. 5. 16. 01:00경 무렵에 위 파출소장의 지시에 의해

s-37 순찰정이 출동하였고, 06:20경 생존자 1명이 구조되었으며, 09:15경까지 나머지 7명의 사체가 인양되었다.

이에 피해자들의 가족(청구인)들은 피고소인을 직무 유기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청 검사는 2006. 1. 1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06. 7. 24.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다.

나. 결정요지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란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를 말하고,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그 본래의 직무로 하고 있다(경찰법 제3조 참조). 경찰권의 행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처분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목전의 상황이 매우 중대하고 긴박한 것이거나, 그로 인하여 국민의 중대한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람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여 인명이 경각에 달린 경우에 해양 경찰관으로서는 그 직무상 즉시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8명이 조난 당하여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될 급박한 상황에 있었고, ○○출장소 및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파출소에 s-37 순찰정의 출동 요청과 출동지시가 있었으므로, 당시 ○○파출소의 책임자인 피고소인으로서 출동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직무상 즉시 구조를 위해 출동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³⁾

3) 헌법재판소는 피고소인이 당시 야간출동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출동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주장을 배척하였다.

1) 물적 장비는 s-37 순찰정(3톤급)보다 규모도 작고 야간장비로는 서치라이트 정도밖에 없는 m-08정(1톤급)으로도 제주도까지 환자 수송을 위해 거의 야간에 운항하였는데, 야간장비로서 GPS(위치추정기 ; 측심기 겸용), 레이더(가깝게는 2,316미터 이내, 멀게는 22 킬로미터 이상 거리의 물체를 야간에도 식별가능), 탐조등(선실에서 리모컨으로 위치, 방향 조종 가능), 경광등까지 갖춘 s-37 순찰정이 야간수색 장비가 부족하여 출동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인명구조를 직무로 하고 있는 해양경찰관으로서는 야간수색 장비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에만 출동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야간수색에 적합한 장비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은 출동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S-37 순찰정을 출동시키는 것이 위험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사건

헌법재판소는 목전의 상황이 매우 중대하고 긴박한 것이거나, 그로 인하여 국민의 중대한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권을 발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바, 위 언급된 조난상황과 같이 중대·긴박하거나 인명이 침해되는 등 침해되는 법익이 중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순찰정을 출동시켜 구조업무를 착수하여야 하는 점을 판시한 유의미한 사례라 판단된다.

4. 구조소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관련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38618 판결[손해배상(기)]

더욱이 8명이 구명동의를 의존하여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바람 없는 맑은 날씨에 약간의 안개만 끼어 있을 뿐이고 자신의 순찰구역 내로서 비교적 가까운 곳인 '입파도-전곡항' 사이의 해역으로 출동하면서 위와 같은 상당한 수준의 야간 수색장비로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이 사건 조난사고 후에 위 s-37 순찰정에 GPS 플로터가 추가로 장착되었지만, 해도를 화면으로 바꿔주는 GPS 플로터가 없더라도 당시 출동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피고소인 스스로도 GPS와 레이더는 주간에는 거의 필요가 없는 장비로서 야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이라고 하고 또 s-37 순찰정은 야간에도 운항 가능하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파출소장 등도 s-37 순찰정에는 야간에 충분히 운항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고 당시 야간에도 출동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실종보고서에 실종지점, 실종시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출동을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2) 인적 자원으로 피고소인 자신만 하더라도 2004. 2. 20.자로 ○○파출소에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조난사고 당시까지 s-37 순찰정을 수십 번 조종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모두가 s-37 순찰정을 운전할 수 있었는데 당시 ○○파출소에는 피고소인을 비롯하여 순경, 경장 및 전경 7명이 있었으며, 특히 ○○○은 s-37 순찰정의 정장(지정운전자)으로서 레이더 및 GPS를 작동할 수 있었으므로(다른 업무로 나갔다가 22:20경에는 귀소하여 위 파출소 내에 있었다), 당시 s-37 순찰정을 출동할 인적 자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3) 당시의 기상은 파고 1미터 이내, 시정 3마일의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고, 피고소인도 "바람이 잠잠하고 날씨는 좋았으나 야간에 안개가 좀 끼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기상상태는 상당히 양호하였고 다만 통상적인 정도의 해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GPS, 레이더, 탐조등과 같은 장비는 주간에는 별로 필요가 없고 야간이나 해무가 낀 경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착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기상여건도 출동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조난사고 발생 장소는 ○○파출소에서 불과 10분 내지 20분이면 달을 수 있는 가까운 곳이고, 사고 보트의 항로인 '입파도-전곡항' 사이의 해역은 ○○파출소의 순찰활동 구역일 뿐만 아니라 보트로 약 20-25분 정도 걸리는 비교적 좁은 구간이어서 그 소속 해양경찰관들에게 익숙한 곳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히 멀거나 위험한 장소로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소인의 인지한 내용은 이미, "○○출장소 순경 ○○○이 모든 실종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는데 실종되었다면 해상에서 표류 중일 것이므로 s-37정을 출동하여 구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으므로 실종자들이 즉시 익사하지 않고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기타 피고소인도 당시 생명을 무릅쓰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그런 위험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경장 ○○○은 피고소인에게 s-37 순찰정의 출동을 건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파출소장 ○○○은 이 사건 조난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즉시 s-37 순찰정을 출동시켰다.

가. 사실관계

위 3항의 사실관계 하에서 보트가 침몰하면서 피해자 8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김 양식장의 부표 등에 의지하면서 구조를 기다렸으나, 결국 7명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속인들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판결은 피고의 주의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과실상계(50%)를 적용한 금원 상당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판결요지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수난구호법의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고, 특히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해의 방지를 임무로 하며, 해양조난사고의 경우 그 위험성이 다른 사고에 비하여 훨씬 중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해양경찰은 일반 경찰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해양경찰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이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해양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 및 이 사건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들은 사망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다. 사건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조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경찰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해양경찰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역시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다. 따라서 해양조난사고 발

생 시 적극적인 순찰정 파견 및 성실한 구조 활동을 하여야 하는 해경의 역할과 책무를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사료된다.

5. 뇌물수수 관련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715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상 경비, 범죄 수사 등 해양경찰의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직무 일체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1) 본청 경비과장 ○○○로부터 ‘내년 초에 있을 총경급 인사에서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 2) 위 동일인인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업무 미숙이 있거나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되더라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 3) 2010. 5. 10. 유○○으로부터 ‘여수에서 신축 예정인 해양경찰학교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을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추진 단장 겸 여수해양경찰서장에게 지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10. 6. 7. 1,000만 원을, 2010. 6. 24. 500만 원을 각각 받아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위 제1~3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제3 혐의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제3 혐의사실 중 2010. 5. 10. 1,000만 원, 2010. 6. 7. 1,000만 원의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보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판결요지

뇌물죄에서 직무란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

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해양경찰청장으로서 해양경찰의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 일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해양경찰학교 신축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에게 유○○가 해양경찰학교 신축공사 현장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주라고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해양경찰청장으로서 해양경찰학교 신축공사에 관하여 ○○○를 지휘·감독하는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

다. 사전

뇌물죄에서의 직무의 범위를 다시 확인한 판결로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의 직무 일체를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휘하 건설추진 단장 겸 여수해양경찰서장에게 특정인이 해양경찰학교 신축공사 현장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 역시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사안은 직무 내용상 일견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인정한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6. 장기복무서약서 관련

-서울행정법원 2019. 7. 26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손해배상(기)]

가. 사실관계

경찰공무원 甲이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자체 선발 및 교육계획’에 따른 조종사 양성 과정에 지원하면서 ‘최종 선발합격 시 항공기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할 것과 10년 미만 중도 포기 시 교육비 일체를 일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장기복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최종 선발되어 1년 11개월 동안 조종사 위탁 교육을 받고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4년 1개월 동안 해양경찰청 항공단 등에서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하자, 甲에 대하여 위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는 손해배상으로 조종사 양성 과정에 지출한 교육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 甲이 위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에 따른 복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국가는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되었다.

나. 판결요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은 경찰공무원이 외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 및 소요경비의 상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복무 의무 및 소요경비의 상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법령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령은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복무를 위반한 기간만큼 안분한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 위탁교육훈련이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을 그 자원으로 하여 실시된다는 점에 기초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강제하면서, 동시에 복무의무의 부과와 그 불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반납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

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에 따라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령의 취지 및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복무의무의 부과와 소요경비의 반납에 관하여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공법상 계약은 복무의무 부과의 기간 및 소요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조종사 양성 과정에 지원한 甲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고정익 조종사로서 10년 이상의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복무한 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지원받은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장기복무 서약서 약정은,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최장 6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무복무를 위반한 기간만큼 안분’한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甲이 약 1년 1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위탁 교육을 받았고, 이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항공단 등에서 약 4년 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로서 근무함으로써 훈련 기간을 2배 이상 초과하여 복무하였으므로, 甲이 위 약정에 따른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전

비록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양성이라는 구체적인 공익 실현을 위해 거액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교육훈련이고 그에 따라 ‘최종 선발합격 시 항공기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할 것과 10년 미만 중도 포기 시 교육비 일체를 일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장기복무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무효라는 판시이다. 따라서 행정 내에서 각종 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 또는 현저히 제약하거나 법률이 규정하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반하여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판단이라 사료된다.

IV. 결어

이상과 같이 3년간의 해양경찰위원의 임기를 마치고 두서없는 소회와 판례상 나타난 해양경찰에 기대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살펴보았다. 해양경찰장비법 등 새로운 입법의 탄생으로 최첨단의 장비로 바다 지킴이로서의 해경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크다. 더불어 새로운 레저기구의 도입과 안전조치, 연안안전 지킴이 활동,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해상 위치 추적, 대 국민만족도 조사 등은 이러한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여가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적극적인 아이디어 개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조직 내부의 활발한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해양경찰위원회가 이러한 해양경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높이고,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해양경찰 구성원이 인권수호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며 멋진 바다수리 독수리의 비상을 염원한다.



부록

1. 제1기 해양경찰위원 명단	276
2. 해양경찰위원회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277
3. 해양경찰위원회 의결 안건 목록	293

1. 제1기 해양경찰위원 명단

사 진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사 공 영 진 위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경북고 ▶ 서울대 법학 ▶ 사법시험 2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법무법인 삼일 고문변호사 ▶ 대구고법원장 ▶ 청주지법원장
	남 상 욱 총무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사레지오고 ▶ 한국해양대 항해학 ▶ 경위공채('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한국선급(KR) 전문위원 ▶ 해양경비안전국장 ▶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박 찬 호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고 ▶ 고려대 법학 ▶ 고려대 석·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現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함 혜 리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희여고 ▶ 경희대 신문방송학 ▶ 파리2대 석사·D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램프커뮤니케이션 대표 ▶ 서울신문 편집국 문화부 선임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김 효 선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명여고 ▶ 이화여대 사회학 ▶ 이화여대 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여성신문 발행인 ▶ 現 한국여성재단 이사 ▶ 現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이 은 방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수성고 ▶ 한국해양대 항해학 ▶ 한국해양대 석사 ▶ 동경공업대학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부 교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사) 회장 ▶ 해경청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윤 석 희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호수돈여고 ▶ 이화여대 법학 ▶ 사법연수원 23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 변호사 ▶ 現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2. 해양경찰위원회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해양경찰법

[시행 2021. 1. 14.] [법률 제17904호, 2021. 1. 13.,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행정법무담당관) 032-835-22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장비·시설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8조(재의요구)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경찰청

제11조(해양경찰청장)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간첩·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⑤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직무수행)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의2(수사의 지휘·감독) ① 수사부서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수사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해양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해양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 ③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2항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⑤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

-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운·어로·자원개발·해양과학조사·관광 및 레저 활동 등을 통해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발생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재난 또는 해양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의 확보와 수색·구조 장비 및 기술의 보강을 위하여 민간단체·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국민참여의 확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행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①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직위 등을 활용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경찰장구와 각종 장비·시설(구조·구난·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등”이라 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등의 도입 및 관리·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7904호, 2021. 1. 13.〉

이 법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388호, 2020. 2. 4., 제정]

해양경찰청(기획재정담당관) 032-835-2718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①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면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의안 작성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제7조(수당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공정성의 유지 등)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30388호, 2020. 2. 4.〉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경찰위원회 운영세칙

제 정 2020. 2. 21. 해양경찰위원회 예규 제1호

일부개정 2023. 3. 2. 해양경찰위원회 예규 제2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한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 총무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총무위원) 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안의 사전검토,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총무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총무위원은 의안에 대한 자료수집과 전문적인 조사연구, 각 위원과의 연락협조,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③ 총무위원은 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한 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거나 개최요구를 받은 때는 회의소집 3일전까지 위원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회의소집 일시·소집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그러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다르게 진행할 수 있다.

1. 국민의례

2. 위원장 인사

3. 주요 업무 보고(매월 첫 번째 회의 시)

4. 안건 심의·의결

⑤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때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의 청장, 차장, 국장급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나 위원회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관 과장급이상 해양경찰공무원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의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다만, 사안의 성질상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늦어도 회의소집 3일전까지 총무위원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안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제6조(의안의 부의요구) ① 위원회는 해양경찰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심의·의결사항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의안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업무분담)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전문분야별로 심의·의결될 사항의 예심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사일정) ①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의 일시만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⑤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위원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질의토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10조(표결방법) 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의가 있을 때는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표결방법을 정한다.

제11조(서면의결) ① 위원회는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팩스 송부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심의안건 또는 심의의견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결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 통지) ①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간사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장과 소관부서에 통지하도록 한다.

② 간사는 의결된 내용의 조치결과 사항을 필히 위원회에 보관토록 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경찰법 제9조에 의거한 집행조치 결과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양경찰청장은 서면으로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과 보관)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최,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공무원의 인원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철회에 관한 사항
7. 부의안건 심의 · 의결사항
8. 서면질문과 답변서

② 회의록을 보관할 경우에는 위원장, 총무위원, 간사가 표지에 서명한 후 보관한다.

③ 발언자의 발언요지를 기록하고 이를 보관한다.

④ 회의록 및 서면결의록은 위원회에 3년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해양경찰 특수기록관에 이관하여 보존한다. 이 경우 보존연한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해양경찰공무원 파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 파견된 해양경찰공무원은 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규칙 등 제정) 위원회는 이 세칙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회 의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회의)

사항

--

제출부서	해양경찰청 (국)
제출연월일	

OO 검토필

[별지 제2호서식]

의안대장

[illegible]

주 : 1. 의안구분에는 “보고사항” 또는 “의결사항”이라 기재함

2. 의결 결과란에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재상정의결, 보류, 부결” 등을 기재함

[별지 제3호서식]

해양경찰위원회의 서면결의록

안 건 명 :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 (인)

총무위원 : (인)

간 사 : (인)

직 위	성 명	가	부	기타 의견	서명 기타
위 원 장					
총무위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전자우편·팩스전송으로 심의의견을 송부 받은 경우 서명 기타란에 전자우편·팩스전송으로 접수한 사실을 기재하고 그 근거를 첨부.

3. 해양경찰위원회 의결 안건 목록

'20년 해양경찰위원회 의결 안건 세부 추진상황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1	제1회 (2.21.)	「해양경찰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예규	수정 의결	해양경찰위원회담당관
2	제2회 (3.3.)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정 동의안	동의	원안 의결	해양수산부
3	제3회 (3.16.)	경비합정 '영상녹화제도' 도입·운영계획	정책	원안 의결	외사과
4	서면 (3.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5	제4회 (4.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대령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정안	부령	원안 의결	
7		「해양경찰청 방제비축기지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방제기획과
8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9	제5회 (4.20.)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 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예규	수정 의결	수사과
10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11	제6회 (5.4.)	2020년도 부패방지 및 청렴 정책 추진계획	정책	원안 의결	감사담당관
12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수정 의결	수색구조과
13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일부개정안	고시	원안 의결	해양오염예방과
14	제7회 (5.18.)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15	제8회 (6.1.)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고시	수정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16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17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18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19		「해양경찰 직제의 영문표기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국제협력관

연번	회기	안건명	형식	심의결과	소관부서
20	제9회 (6.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21		「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22		「해양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23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수정 의결	수색구조과
24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외사과
25	제10회 (7.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법률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26	제11회 (7.20.)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고시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27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정안	예규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28		행정규칙 체계·자구 일제정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규칙 17건)	훈령, 예규	원안 의결	감사담당관
29	제12회 (8.3.)	「해양경찰청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형사과
30		행정규칙 체계·자구 일제정비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규칙 12건)	훈령, 예규	원안 의결	운영지원과
31	제13회 (8.24.)	「선박통제규정」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32	제14회 (9.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3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34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3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전부개정령안	훈령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
36	제14회 (9.7.)	「국민방제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기동방제과
37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고시」 폐지안	고시	원안 의결	해양오염예방과
38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전부개정안	고시	수정 의결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39	제15회 (9.21.)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예규	원안 의결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40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 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41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42		행정규칙 체계·자구 일제정비 (기획재정담당관실 소관 행정규칙 3건)	훈령	원안 의결	기획재정담당관
43		행정규칙 체계·자구 일제정비 (인사담당관실 소관 행정규칙 5건)	훈령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
44	제16회 (10.1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령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4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수정 의결	
46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수사과
47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48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기동방제과
49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50	제17회 (11.6.)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운영지원과
5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정안	대령	수정 의결	교육훈련담당관
52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5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54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55	제18회 (11.1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대령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
5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수정 의결	
57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원안 의결	수상레저과
58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래프팅 가이드자격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수정 의결	
59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과학수사과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60	제19회 (12.7.)	「계선부표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경비과
61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종합상황실
62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63		「해양경찰수사규칙」 제정안	부령	수정 의결	수사과
64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방제기획과
65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기동방제과
66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67		「경찰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68	제20회 (12.21.)	「범죄수사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수사과
69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70		「수사이의사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71		「변사사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72		「내사사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73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74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75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76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77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78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폐지안	훈령	원안 의결	
79		「지명수배 규칙」 폐지안	훈령	원안 의결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80	제20회 (12.21.)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81		「해양 유·도선 재난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82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8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1~'25)	정책	원안 의결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84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21~'25)	정책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8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
86	서면 (12.2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87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88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8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21년 해양경찰위원회 의결 안건 세부 추진상황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1	제21회 (1.4.)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기획재정담당관
2		「2021년 해양경찰 보건의전 및 복지증진 시행계획」	계획	원안 의결	운영지원과
3	제22회 (1.18.)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령	원안 의결	수사과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대령	수정 의결	교육훈련담당관
5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6		「2021년 해양경찰 교육훈련 계획」	계획	원안 의결	교육훈련담당관
7		「2021년 연안사고예방시행계획」	계획	원안 의결	해양안전과
8	제23회 (2.1.)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9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10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정안	예규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11		「항만교통관제센터의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훈령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12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고시	수정 의결	정보통신과
13	제24회 (2.15.)	「2021년 수난대비계획」	계획	수정 의결	수색구조과
1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1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16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운영지원과
1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18		「2021년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안	계획	원안 의결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19	제25회 (3.2.)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수정 의결	경비과
20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고시	수정 의결	
21	제26회 (3.16.)	「2021년도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 시행계획」안	계획	원안 의결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22		「'22~'36 해양경찰 장비증강목표기획서」 개정안	계획	원안 의결	장비기획과
23	제27회 (4.5.)	「간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종합상황실
24	제28회 (4.19.)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수사과
25		「수사인권관 운영 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수사과
26	제29회 (5.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재상정 의결	교육훈련담당관
27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고시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28		수사국 소관 행정규칙(9개)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수사기획과
29		「해양경찰청 방제비축기지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방제기획과
30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제정안	고시	수정 의결	해양오염예방과
31		2021년도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추진계획	계획	원안 의결	감사담당관
32	제30회 (5.1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원안 의결	교육훈련담당관
33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운영지원과
34	제31회 (6.8.)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수사기획과
3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36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37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38		「해양경찰청 진압장비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39	제32회 (6.21.)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령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40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부령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41		「수상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령	수정 의결	수색구조과
42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수정 의결	수색구조과
43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기동방제과
44	제33회 (7.5.)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국제협력과
45		「해양경찰청 외국함정 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국제협력과
4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국제협력과
4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수정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48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49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5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51	제34회 (7.19.)	「해양경찰청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훈령	재상정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52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수사기획과
53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수사기획과
54		「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형사과
55		「변사사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형사과
56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과학수사과
57		「해양경찰 정보경찰 활동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정보과
58	제35회 (8.2.)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59	제36회 (8.1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6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6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령	수정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6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63		「바다 의인상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수색구조과
64	제37회 (9.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대령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
6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교육훈련담당관
66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67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68	제38회 (10.5.)	행정규칙 일몰제 정비위한 일괄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69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고시	원안 의결	해양오염방제과
70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71	제39회 (10.18.)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72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상벌상계제 실시 규칙」 폐지안	예규	원안 의결	감사담당관
73	제40회 (11.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대령	수정 의결	장비기획과
7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부령	수정 의결	장비기획과
7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76	제41회 (11.15.)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기획재정담당관
77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예규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78	제41회 (11.15.)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79		「해양경찰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양성평등정책팀
80	제43회 (1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8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82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수색구조과
83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고시	원안 의결	수색구조과
84	제44회 (12.20.)	「해양경찰청 인사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
8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
86	제44회 (12.20.)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87		「'23~'37 해양 경찰 장비증강목표기획서」 개정안	계획	원안 의결	장비기획과
88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수정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89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90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91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22년 해양경찰위원회 의결 안건 세부 추진상황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1	제45회 (1.3.)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운영지원과
2		2022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시행계획(안)	계획	원안 의결	운영지원과
3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4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6		「해양경찰청 항공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항공과
7	제46회 (1.1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8		「해양경찰 헌장 운영규칙」 제정안	예규	수정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9		「해양경찰청 법제 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재상정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10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수색구조과
11		2022년 수난대비 집행계획(안)	계획	원안 의결	수색구조과
12		2022년 연안사고예방 시행계획(안)	계획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13		2022년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안)	계획	원안 의결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14		2022년 교육훈련계획(안)	계획	원안 의결	교육훈련담당관
15		2022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안)	계획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16	제47회 (2.7.)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1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1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19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20	제48회 (2.21.)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과학수사과
21		「해양경찰 함정 보급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22	제49회 (3.7.)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계 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고시	수정 의결	해상교통관계과
2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령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24	제50회 (3.21.)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해양오염예방과
25	제51회 (4.4.)	「어로보호협의회 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경비과
26		「통합방위 작전태세 점검 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경비과
27	제52회 (4.18.)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교육훈련담당관
2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령	원안 의결	수상레저과
2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수상레저과
30	제53회 (5.2.)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예규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31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정안	훈령	원안 의결	장비관리과
32	제54회 (5.1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33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34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35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해안치안빅데이터팀
36	제55회 (6.13.)	「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정보과
37		‘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계획	원안 의결	감사담당관
38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대령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
3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40	제55회 (6.13.)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고시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4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42	제56회 (7.4.)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대변인
43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혁신행정부무담당관
44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교육훈련담당관
4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46	제57회 (7.18.)	「해양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양성평등정책팀
47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수사기획과
48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전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장비기획과
49		「함정건조감독관 복무규칙」 전부개정안	예규	원안 의결	장비기획과
50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정안	고시	원안 의결	장비기획과
51	제58회 (8.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교육훈련담당관
52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교육훈련담당관
53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고시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54		「해양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부령	수정 의결	수사심사과
5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수상레저과
56	제59회 (8.16.)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57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58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59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경비과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60	제59회 (8.16.)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수사기획과
61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수사기획과
62		「(해양경찰청) 참고인 등 비응지급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수사기획과
63		「(해양경찰청) 수사정보비 취급 규칙」 폐지안	예규	원안 의결	수사기획과
64	제60회 (9.5.)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수사심사과
65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수사심사과
66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수사심사과
67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수사심사과
6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령	원안 의결	해양안전과
69	제61회 (9.19.)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70		「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7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대령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
7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인사담당관
73	제62회 (10.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재상정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74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정안	고시	재상정 의결	해양안전과
75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76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고시	원안 의결	해양안전과
77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78	제63회 (10.17.)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감사담당관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79	제63회 (10.1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대령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
8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인사담당관
81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수사심사과
82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정안	고시	수정 의결	해양안전과
8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령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8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수상레저과
85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대령	원안 의결	수상레저과
8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부령	수정 의결	수상레저과
87	제64회 (11.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88	제65회 (11.21.)	「해양경찰청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규칙」 제정안	예규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89		「(해양경찰청)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수사기획과
90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23~’27)	계획	원안 의결	장비기획과
91		‘23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시행계획	계획	원안 의결	장비기획과
92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장비관리과
93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해양경찰연구센터
94	제66회 (12.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9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96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97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98		「자율기구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훈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99	제66회 (12.5.)	「해양경찰청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형사과
100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수색구조과
101	제67회 (12.19.)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정안	훈령	원안 의결	운영지원과
102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103		「해양경찰청 자격장 관리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교육훈련담당관
10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교육훈련담당관
10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106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기동방제과

'23년 해양경찰위원회 의결 안건 세부 추진상황

연번	회기	안 건 명	형식	심의 결과	소관부서
1	제68회 (1.2.)	2023년 교육훈련계획(안)	계획	원안 의결	교육훈련담당관
2		2023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안)	계획	원안 의결	해상교통관제과
3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항공과
4	69회 (1.3.)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동의	원안 의결	해양수산부
5	제70회 (1.16.)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운영지원과
6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정안	훈령	수정 의결	운영지원과
7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8	제70회 (1.16.)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10		「함정 운영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훈령	수정 의결	경비과
1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령	원안 의결	수색구조과
1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수색구조과
13		「수상구조자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고시	원안 의결	수색구조과
14	제71회 (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1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령	원안 의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16		연안사고예방 시행계획(안)	계획	원안 의결	해양안전과
17		「해양경찰청 공무원외여행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국제협력과
18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예규	수정 의결	국제협력과

제1기 해양경찰위원회 백서

[안 내]

- 백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으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위원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 해양경찰위원회 백서 담당자
전 화	032) 835-2521
팩 스	032) 835-2921
홈 페이지	kcg.go.kr/kcgcommission/main.do

발 행	2023년 5월
발 행 인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 사공영진
편 집 인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간사)
디자인/제작	(주)아미고디자인 02) 517-5043



제1기 해양경찰위원회 백서



제1기 해양경찰위원회 백서는
해양경찰위원회 홈페이지와
QR코드 인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